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1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

전석진 (정책연구팀 연구원)

I. 서론	3
II. 국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배경 및 현황	5
III. 연구방법	8
1. 연구 참여자	8
2. 자료 수집 및 분석	9
IV.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 및 개선 방향	9
1.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배경 및 과정	9
2.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어려움과 과제	12
3. 전공자율선택제의 향후 개선 방향	18
V. 결론 및 제언	23
참고문헌	27
부록	29

2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원창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35
II. 일본의 유학생 정책 전개	39
1.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	39
2.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	42
3.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44
4. 유학생 40만명 유치 계획	57
III. 유학생 취업지원 정책 사례조사	62
1.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62
2. 군마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64
3. 간사이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67
4. 야마가타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72
IV.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시사점	74
참고문헌	79

3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

오예진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서론	8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83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85
3. 연구 방법	86
II. 챗GPT 현황	86
1. 챗GPT에 대한 미국의 인식	86
2. AI 관련 선행 연구 분석	88
III. 챗GPT 관련 미국대학 사례	96
1. 아리조나주립대학교(ASU)	96
2. 스탠포드대학교	98
IV. 요약 및 제언	102
참고문헌	105

4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승정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서론	109
II. 이론적 배경	111
1. 연구중심대학의 개념과 구성	111
2. 대학원 교육	113
3.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개관	114
III. 연구 방법	117
1. 자료 수집	117
2. 분석 방법	118
IV. 연구 결과	119
1.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구축	119
2. 대학원 교육 내실화	129
3. 연구중심대학 체제 혁신과 발전 과제	136
V. 논의 및 결론	142
참고문헌	145

1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

전석진

(정책연구팀 연구원)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

전석진 (정책연구팀 연구원)

I 서론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전례 없는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의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는 인류가 이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규모, 범위, 그리고 복잡성을 가질 것이라고 표현했다(Schwab, 2016). 현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대학도 자신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에 당면하였다. 급격한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대학이 양성해왔던 전통적인 인재상의 재고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은 미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교육부는 미래사회 선도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역량 중심 교육의 확대, 학사구조 유연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교육부, 2024.01.31.a). 그 가운데 올해 대학에 가장 큰 혼동을 준 내용은 ‘전공자율선택제’에 관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의 3개 평가 영역 중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서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여부와 그 비율을 평가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교육부, 2024.01.31.a). 해당 사업의 사업비 50~60%가 성과급 방식으로 지원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급감과 등록금 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을 가진 대학들은 이러한 평가 방향에 맞춰 학사구조를 조정할

수박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실제로 수도권대학 및 주요 국립대의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2024학년도 6.6%에서 2025학년도 28.6%로 급증하였다(교육부, 2024.05.30.).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가 기존의 학과 중심의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융합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혁신 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아닌 정부의 강한 정책적 유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공자율선택제 도입도 과거 유사한 제도의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되고 있다(이수정, 2024). 충분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의 제도 도입은 전공 선택 단계에서의 지나친 학과 쏠림으로 인한 불균형, 학생들의 소속감 저하 및 낮은 학업적 적응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과거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자유전공학부, 학부제 등의 사례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보고되었으며, 체계적 교육과정의 부재와 비효율적인 학생 관리로 인해 많은 대학이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한 바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전공자율선택제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세심한 준비와 정부의 지속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생들의 자율적인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융합형 교양교육 및 전공 간 연계성을 강화한 학사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기대와 우려가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인해 대학이 당면하게 되는 많은 도전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다룬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전공자율선택제가 학생들의 진로 탐색 및 자기 주도적 학습에 미치는 긍정적 가능성을 조명하거나, 기존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는 데 집중해왔다(권정현, 김해숙, 2024; 김해숙, 권정현, 2024; 전종희, 2024). 일부 연구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나(남진숙, 2024; 윤옥한, 2024),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학사제도의 예시를 소개하거나 고려해야 할 주제를 제안하는 정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 대학 현장의 실질적인 문제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다룬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준비하는 대학의 현황과 경험을 탐색

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학의 당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국내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배경 및 현황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 도입은 교육부의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교육부, 2024.01.31.a.). 두 사업은 각각 2019년, 2018년에 시작된 포괄적 방식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이다. 대학별 지원액은 대학 성과평가와 무관하게 재학생 수 등의 산식에 따라 배분하는 포물리 사업비와 성과평가에 따라 배분되는 인센티브로 구성된다. 2024년도 대학혁신지원사업 총 사업비의 50%인 4,410억 원,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총 사업비 중 60%인 3,426억 원이 인센티브 형식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대학들이 성과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구조이다.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성과평가는 크게 세 가지 영역(교육혁신 성과, 핵심 교육성과, 자체 성과관리)에 대해 진행된다.

대학들의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유인한 내용은 교육혁신 성과 영역에 포함되었다. 교육부(2024.01.31.a.: 3)는 “학생 전공선택권 확대와 함께 유연한 교육체제·학사구조로의 개편,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확대,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학사구조 유연화 등”의 대학의 다양한 노력을 정성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기존 학과 교육과정의 틀을 넘어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다원화되고 융합화된 사회를 선도할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였다. “전공자율선택을 위한 모집단위 운영·개편”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학내 제도 개선과 학생지원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교육부, 2024.01.31.a.: 3).

교육부의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도입 추진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인센티브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든 대학에 대한 강한 정책 기조를 밝혔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와 거점국립대, 국가중심대를 중점 추진 대상으로 밝히고,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 수가 전체 모집인원의 25% 이상이 정책적 목표라고 언급하였다(김민제, 2024.01.30.).

혁신 성과 평가에서 전공자율선택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제시되었다. 유형 1은 자유전공학부 혹은 무전공 통합 모집 형태로 학생을 모집한 후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보건의료나 사범계열 등의 전공은 제외된다. 유형 2의 경우 계열이나 단과대로 모집한 후 계열이나 단과대 내 모든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학과별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유형의 선발 방식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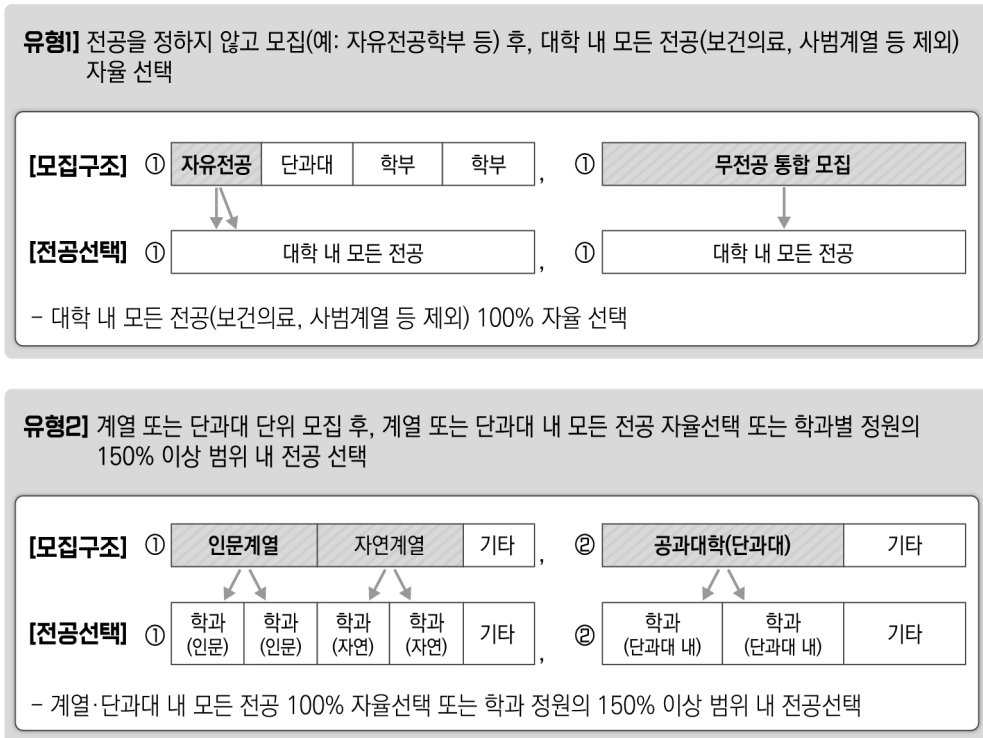


그림 1 | 모집단계 혁신 성과 인정 유형

출처: 교육부(2024.01.31.a.)

이러한 교육부의 계획은 대학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는 대학에 충분한 준비 기간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내용을 담은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계획은 2024년 1월에 발표되었는데, 2025학년도 모집에서부터 전공자율선택제를 적극 도입하도록 하여 대학들이 이를 대비할 충분한 기간이 주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윤옥한, 2024). 또한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의 확대로 인해 대학들이 2023년에 기발표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다. 특히,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 확대가 의대 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대입제도 사전 공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백두산, 2024.01.12.; 신현지, 2024.01.09.).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학들은 교육부의 계획에 맞추어 전공자율선택제를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밝힌 중점 추진 대상 대학의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주요 현황은 아래 그림과 같다(교육부, 2024.05.30.). 수도권대학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의 모집 현황으로, 전공자율선택으로 선발되는 총 37,935명의 정원이 확정되었다. 이는 전체의 28.6%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부가 제안한 25% 비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2024년도에 비교하여 전체 28,011명이 증가한 수치로, 교육부 정책적 기조에 맞춰 대학이 전공자율선택제를 대규모 도입 및 확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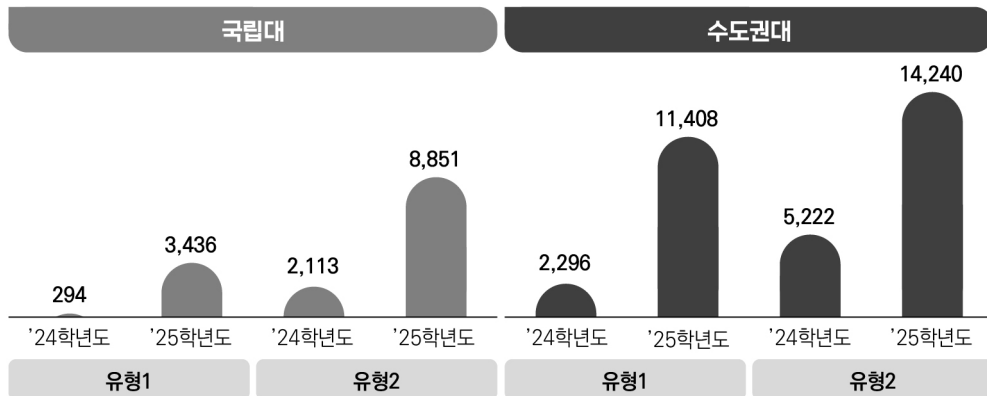


그림 2 |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모집 현황

출처: 교육부(2024.05.30.:3)의 표 내용을 재구성함

I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확대·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 현장의 실질적인 경험과 당면 과제를 탐색하기 위하여,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확대·운영을 앞둔 대학의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자의 경우 대학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전공자율선택제 도입과 운영이 대학 조직 차원의 거시적인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기관 특성에 따라 도입 절차와 운영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연구 참여자 선정을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및 면담 목적을 담은 면담요청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공자율선택제 업무 담당 대학 관계자들에게 발송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면담자의 선호에 따라 C대학 학사팀장의 경우 대면으로, 그 외 참여자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형식으로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 참여한 4명은 모두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및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학 관계자이다. 특히 A대학을 제외한 세 개 대학의 연구 참여자는 과거 유사한 제도의 운영 및 참여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공자율선택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1 | 연구 참여자 구성

대학 구분	직위/직급	소재지	설립유형	규모
A대학	자유전공학부부장	비수도권	사립	중소규모
B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비수도권	국립	대규모
C대학	학사팀장	수도권	사립	대규모
D대학	기획처장	수도권	사립	중소규모

2. 자료 수집 및 분석

면담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각 참여자당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진행되었다. 면담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게 사전질 의서를 공유하였으며, 실제 면담은 해당 질의서에 기반하여 반구조화된 면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서면 답변을 통해 응답을 보완하기를 희망하여 해당 서면 답변 자료 또한 분석에 활용하였다. 면담에 활용된 질의서는 [부록]과 같다.

모든 면담 내용은 연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으며, 이후 이를 전사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사한 내용을 연구자가 읽으며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는 1차 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유목화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IV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 및 개선 방향

1.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배경 및 과정

가. 정책적 기조에 따른 도입

4명의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 모두 2025학년도부터 전공자율선택제를 신설 혹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를 신설 및 확대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모든 연구 참여자가 교육부의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저희는 사실은 혁신 사업 그러니까 혁신 사업 지원금 때문에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평가에서 가점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걸 하자 그 얘기는 ‘이걸 안 하면 니네는 최소한 c등급 이하야’ 이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25%, 30%라는 가이드를 처음부터 인터뷰에서 계속 제시를 했고 발표되기 전에도 그러면 이제 경험상 가야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C대학 학사팀장)

아시겠지만 이제 교육부에서 국립대 육성 사업 이런 거에 정원 확대에 따른 예산 지원 때문에 저희 대학도 일정 부분 인원을 확대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단과대별 인원 확대가 그나마 통합적 자율전공 학부제 만드는 것보다는 좀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제 택해서 조금 인원을 확대했구요. (B대학 교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의 평가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식으로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도입을 추진했다(교육부, 2024.01.31.a). 정부 재정지원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이필남, 2020), 교육부의 강한 정책적 유인을 거스르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교육부는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 및 국가중심대를 중점 추진 대상으로 지정하여 모집 인원 비율을 25%로 제시하였으므로, 면담에 참여한 B, C, D 대학 모두 비율을 맞추기 위한 제도 확대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주목할 점은 중점 추진 대상이 아닌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수도권에 위치한 사립대인 A대학은 해당 제도 도입의 필수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정책적인 흐름을 따르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도권 대학이 무전공제를 하는 게 거의 필수였었고 지역에 있는 대학은 필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정책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는 학과 체제로 잘 운영이 되는 학교이지만 그래도 한번 정책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본 걸로 그 배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A대학 학부장)

모든 연구 참여자의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번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의 움직임보다는 교육부에 의해 주어지는 외적인 유인이 크게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학 내부로부터의 필요성 인식이 아닌 정책적 유인으로부터의 제도 도입이 과거의 부작용을 재생산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이수정(2024)이 지적한 바와 같이 학부제, 자유전공학부 등 전공자율선택제와 유사한 취지로 도입되었던 시도들이 실패한 것은 대학의 특성이 반영된 자율적인 혁신이 아닌 교육부 지침에 따른 성급한 도입이었기 때문이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당 제도를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또한 이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학과제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된다.

나. 조직 내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

이번 면담을 통해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 이후 대학 조직 내 다양한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 구성원과 학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 양상 또한 대학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A대학에서는 자유전공학부 1학년 학생들이 2학년 이후 전공을 선택하는 단계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기 위해 학과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반면, C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해당 학과로 지나치게 몰리게 되는 경우 많은 학생을 관리해야 할 것을 우려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공자율선택제를 하면서 사실 학과끼리 많이 융합하라 그러고 융합전공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사실 학과끼리 경쟁 체제가 훨씬 더 세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A대학 학부장)

내심 좋아하시는 과도, 대놓고 싫어하시는 과도 생기고.. 그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기 많은 과는 좋아할 거야, 인기 없는 과는 싫어할 거야’가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들이 있고 대학마다도 또 느낌이 달라서 어렵기도 하고 (D대학 기획처장)

타 전공은 자유전공학부 확대되는 것에 지지하지 않는 분위기 (B대학 교수 서면 인터뷰)

이처럼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 도입에 따른 학내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여, 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 구성원의 합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는 모집 정원의 조정,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향후 전공 선택 등을 위하여 교내 모든 부서와 학과 간 협업이 필수적인데, 구성원 및 학과 간 이해관계의 충돌을 최소화하며 이러한 협업을 도모하는 것이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 될 수 있다. 구성원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가 속한 대학들은 모두 최대한 민주적인 도입 절차를 거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 계신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은 드렸던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건 내 자리를 뺏기는 것인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서는.. 그래서

“어떤 학과도 폐지하지 않고 다 같이 가겠습니다”라고 엄청 약속을 드렸고.. 이제 학생들도 반발은 있었어요. 학생들도 아무래도...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공청회를 여러 번 했고 교수는 그렇게 설득 학생도 이제 그렇게 설득 그리고 이름도 너희들이 정해라 원하는 대로 하겠다. (D대학 기획처장)

구성원 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평의원회는 오히려 좀 쉽게 끝났어요. 이제 학칙에 관련된 그러니까 정원 조정은 평의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 PRIME 사업 때 부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기획처에서 다 준비하고 보고서 쓰고 정원 조정까지 계획을 다 세워놨었는데 이제 평의원회에서 부결되었으니까.. 이번엔 더 많이 논의를... (C대학 학사팀장)

짧은 준비 기간에도 각 대학이 도입 과정에서 최대한 민주적인 절차를 밟고 대학 구성원과 학과의 협의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공자율선택제를 둘러싼 조직 내 정치적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제도의 도입 이후 운영의 모든 단계에 있어 구성원의 합의와 조정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은 앞으로도 대학이 당면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러한 역학관계가 대학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괄적인 해법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2.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어려움과 과제

가. 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하여 모든 연구 참여자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번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도입은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에 의해 결정되고, 재정지원사업에서의 유리한 평가를 위하여 대학본부에 의해 강하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강한 추진력 하에 학과 및 행정부서 간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책적 동인이 사라진다면 전공자율선택제의 유지는 물론 타 학과와 부서의 협조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제시된다.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성이 낮기 때문에, 자유전공학부 소속 학생들에 대한 관

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지적되었다. 전공자율선택제 특성상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매우 집약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아짐에 따라 지원이 줄어들면 장기적으로 이 학생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서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기 시작했던 거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도입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이제 이 제도의 중요성이 정책적으로 많이 낮아졌을 때 이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좀 후회된다거나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아무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정책적인 중요도가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학교 안에서도 관심이 낮아지고 할 텐데 애네들이 그래서 나중에 졸업할 때 그래서 졸업 이수 요건을 자유전공학부였기 때문에 못 채웠다거나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잘 해결이 될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됩니다. (A대학 학부장)

결국 안정적인 재정지원이예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 제도거든요. 재정지원이 끊기면 대학이 그걸 온전히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다들 결국 되돌아 갈 거예요. (C대학 학사팀장)

혹자는 재정지원 사업이 대학 교육혁신의 마중물 수준의 역할을 하고 이후의 제도 안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역할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비전 또는 인재상에 기반한 전략적 혁신이 아니라 정부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도입된 제도는 결국 외부적 인센티브에 의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연구 참여자가 속한 C대학과 D대학은 이전에 자유전공학부의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이나, 다양한 부작용과 문제들로 인하여 학과제로 전환한 사례에 속한다. 대학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 이러한 결정을 내려 현재까지 운영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에 맞춰 2025학년도에 다시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이처럼 각 대학의 개별적 상황과 비전이 고려되지 않은 일괄적인 제도 도입은 정책적 유인이 없다면 그 동력을 쉽게 잃을 수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과거의 학부제 실패 경험을 또다시 반복하게 될 수 있다.

나. 학생 부적응과 중도탈락

전공자율선택제의 주요한 과제 중 하나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성공적인 적응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과거 운영되었던 전공자율선택제와 유사한 제도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자 이번 전공자율선택제 확대 운영에 있어서도 가장 우려되는 지점으로 학생들의 부적응과 중도탈락이 제시된다(이수정, 2024; 김해숙, 권정현, 2024).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촉진하고, 이들의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서는 대학생의 학업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충분히 통합되고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Tinto, 1993; Baker&Siryk, 1989; 유민희, 2023). 그러나 학생들이 1학년까지는 자유전공학부 혹은 단과대에 소속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형식인 전공자율선택제 특성상, 해당 학생들이 느끼는 학과 정체성이 약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학생들이 새로운 전공으로 옮겨갔을 때, 해당 전공에 원래 소속되어 있던 학생들 집단에 적응하는 데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대학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의 중도탈락을 막는 것이 이번 제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저희 학교는 1학년으로 들어온 학생이 무조건 2학년 때 학과를 찾아서 간다는 모델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학과를 찾아서 갔을 때 이 학생들이 갑자기 학과에 적응을 못한다면 아니면 그 학과로 간 다음에 자기에게 적용되는 졸업 이수 요건을 모른다든가 이래서 학교 생활을 잘 해나가는 걸 실패하는 게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A대학 학부장)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새로 들어올 학생들의 부적응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대학 차원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걱정이 공존하였다.

일단 학생들의 소속감 문제는 정말 고민되는 부분이라서 학생들이 물론 들어온 학생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좋겠지만 다른 선배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나름 비교과 프로그램이랄까요? 그런 걸로 전공 알리미를 꾸려서 운영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대학 학부장)

관계에 대한 적응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선배 애들이 해줘야 되고 학업 부분은 교수들이 해줄 수가 있겠죠. 이제 학생회를 중심으로 해서 관계 적응을 가져가면서 학업 적응으로 이어가는... 왜냐하면 학업적인 걸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고 관계에 적응을 하면서 학업적인 것들이 이제 같이 풀려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서로 아는 친구들이 많고 나는 아는 친구들이 없어서 내가 수업을 하나 빠졌을 때 노트를 빌려달라고 하기가 어렵다. 족보를 알려달라 그러기가 어렵다 이런 거 근데 그게 모르는 사람한테 생판 하기가 어렵잖아요. (B대학 교수)

소속감도 크게 두 가지예요. 우선 학업적 소속감. 원래 그 전공이었던 애들이랑 1학년 때 들은 과목이 다르면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겠죠. 두 번째로 사회적 소속감. 사소하게는 애들 쓰는 줄임말도 달라요. 학업적으로는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고 ...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시점에 공백이 생기지 않게 선배들 멘토링이나 동아리, 학생회의 운영 기간이나 임기를 조정했어요. ...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봐야죠. (C대학 학사팀장)

한편 일부 참여자의 경우 자유전공학부의 느슨한 연결 구조를 장점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정외과 학생을 이제 뭔가 다른 이유로 해서 면담을 한 이유가 있었는데 자율전공학부에서 진학한 학생 그리고 원래부터 정외과에서 올라온 학생, 근데 이제 원래부터 정외과에서 올라온 학생이 하는 얘기가 본인은 정외과에 있는 학생밖에 모르는데 자율전공학부에서 온 학생은 여러 전공의 학생들을 알더라 그게 되게 부럽고 또 애가 학과에 적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되게 그런 얘기를 듣고 기뻐했어요. 그런 면은 사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여러 전공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되게 느슨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B대학 교수)

다. 전공췌림 현상과 제도적 지원의 한계

전공췌림 현상은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가장 큰 과제이자 우려로 언급되고 있다 (윤옥한, 2024; 전종희, 2024). 전공췌림 현상이란 무전공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시점에서 자신의 적성과 진로보다 취업 성과 등에 따라 소수의 인기 학과로 몰리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전공쏠림 현상은 예상가능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당면하게 될 흐름과 학생들의 수요는 예측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대학의 선제적인 대응이 어렵다.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전공 쏠림도 저희가 사실은 겪었어요. ... 쏠린 학과는 쏠린 학과대로 교원을 더 뽑아달라라는 요청을 하였고, 소수학과는 소수학과대로 우리를 책임져 달라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으셨죠. 근데 사실 연구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문제는 결국 이제 돈 문제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번 연도에 쏠린 학과가 내년에도 쏠릴 거라는 보장은 없고 그러니 그걸 바라보고 교수 하나를 더 뽑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고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전공 쏠림을 겪어냈었던 것 같아요. (D대학 기획처장)

전공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두 가지의 접근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첫째, 유행이 아닌,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전공 선택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산업의 변화와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전공 수요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학생들의 관심과 적성을 우선시할 수 있는 맥락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학과만 쏠리는 게 아니라 시대도 쏠리잖아요.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움직임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거를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 전공자유선택제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걸 만들어주려면 많은 이 제도적인 영향과 압력을 이겨내야 돼요. ... 시대가 AI를 원한다, 컴공을 원한다. 취업이 잘 되는 건 이거다..라는 이 부모와 사회의 무의식적인 것들이 엄청 많은데 자기 안에서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이거를 찾아나갈 수 있는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거를 만들어주려면 여러 가지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수업부터 시작해서 이 학생들의 어떤 해외 탐방, 국내 탐방 이런 것들을 사실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학생들이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쏠리게 만든다고 저는 나중에 이런 정책을 잘 운영했다 이런 얘기 못 들을 것 같아요. (B대학 교수)

둘째, 학생들의 불균형적인 수요에 맞춰 학과와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관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경

우,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의 진입 후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궁극적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요를 최대한 예측하고 이에 맞는 학과 및 학생에 대한 물적·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강의실 확충이나 교원 채용과 같은 지원은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반면, 학생들의 수요 변화는 더욱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대응의 간극이 존재한다.

전공쏠림 현상을 방지해야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희가 고민해야하는 것은 쏠린 학과의 학생을 어떻게 지원할지 그 이슈거든요. ... 10월부터는 교과가 구성되어야 하니까 그 전까지 여러 차례 수요를 예측하려고 하고 있어요. (C대학 학사팀장)

전공쏠림 현상을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고안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수의 이중소속 제도(JA: Joint Appointment)나 AA(Academic Advisor)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며(교육부, 2024.01.31.a), 선행연구에서는 다학기제도, 연계전공 등 학사 유연화를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윤옥한, 2024). 다만, 이러한 제도가 대학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제시되고 있다. 대학은 JA로 임명된 교수들의 업무 부담의 가중, AA의 모호한 역할과 고용에 관한 문제 등에 당면하고 있다.

지금 전공 쏠림에 대한 대처 방안들도 계속 내놓고 계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학생들을 그렇게 일대일로 관리하고 학생 하나가 나가는 문제는 어떻게 교수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본부가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붙든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겪어내야 하는 그 자체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상 그 학생이 나가는 문제는 막을 수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D대학 기획처장)

저희도 Academic Advisor 도입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재정 때문이죠. ... 자율전공 학부에 필수 인력을 배치하고 나서 코디네이터나 Joint Appointment 나 이런 게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1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 사립대학이나 일부 국립대학은 교수도 안 채용해주고 조교도 없이 다 그냥 공용으로 쓰라고 하고 있어서 (B대학 교수)

결국, 전공자율선택제의 필연적인 과제인 전공쏠림 현상은 학생 개인의 진로 탐색과정뿐만 아니라 대학의 학사 구조, 재정 및 교수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전공쏠림 현상은 대학이 단기간에 해소하거나 단순한 정책적 조치로 해결할 수 없다. 급변하는 사회적 요구와 학생들의 수요 변화 속에서, 대학은 제한된 재정과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학사 운영을 조율해야 하며, 이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육부와 함께 대학은 단기적 성과 중심의 대응을 넘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학사 구조 개선과 자원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3. 전공자율선택제의 향후 개선 방향

가. 제도의 성과와 효과성에 관한 고찰 필요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운영을 위하여 우선, 제도의 성과와 효과성에 관한 근본적인 고찰과 정의가 필요하다. 교육부(2024.01.31.a)는 전공자율선택제와 이를 위한 교육혁신의 주요 내용으로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 융합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성공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의 정의나 장기적인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언급은 부재하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처음 시작하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새로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이 학과를 새로 만들면서 새로 재정이 투자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A대학 학부장)

근데 제가 고민되는 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걸 갖고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에서 얼마나 먹힐지가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 어떤 학생이 전공자율선택제를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전공을 넘나들면서 전공도 바꾸고 전과도 또 하고 해서 만들어진 어떤 학생의 졸업장을 어느 기업에서 받아봤을 때 이걸 이 학생은 융합형 인재구나 라고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사회적인 준비는 과연 된 건지 저는 그게 학생들이 나가서 진짜 이 제도를 겪고 나서 얻을 수 있는 목적 달성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대학만 움직일 뿐 사회는 그걸 헤아려줄 준비는 된 것 같지는 않다. (D대학 기획처장)

자유전공학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 정체성, 인재상 고민 필요하나 부족 (B대학 교수 서면 인터뷰)

교육부가 명시한 ‘학생의 전공선택권 확대’라는 제도의 목적에 대해서는 달성 가능하다는 것이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융합 인재를 육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실제로 유효한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전공자율선택제가 가질 수 있는 그 외의 교육적 효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책에 의해 제도가 도입되었다. 제도의 철학적 기반이 미비한 상황에서 조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학, 그리고 학내 구성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각자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게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성과 가치를 명확히 정의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학과 사회가 공유할 수 있는 목표와 기대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나. 유연한 정책과 대학 자율성

이번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과 확대에 있어 교육부의 정책적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이 크게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경직된 정책과 대학의 자율성 제약은 성공적인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김정선, 이병식(2024)은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과정에서 대학의 결정권이 경시되었으며, 정부의 시장중심적인 책무성 요구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약화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오히려 저해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 또한 유사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좀 큰 방향성은 교육부에서 정해주시더라도 이제 대학이 각자가 그걸 어떻게 도달하는지 무엇으로 풀어가는지까지 답을 정해줄 일인가 이런 고민이 사실 돼요. 가끔 이제 혁신사업 보고서 내라고 매뉴얼 내려온 걸 보면 편람 내려온 걸 보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억지로 정해준 답을 발전 계획에 맞추다가 안 되면 발전 계획을 이제 그거에 거꾸로 끼워 맞추는 거죠.

대학이 갖고 있는 특성과 대학에서 나아가고자 하는 만들고자 하는 인제는 다 다른 말이에요. ... 각각의 학교의 상황과 학교가 갖고 있는 특성에 맞는 정책은 큰 교육부의 틀 안에서 우리가 좀 자율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경쟁 사회를 더 지나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에 대학들은 도달했기 때문에 대학은 이제 진짜 자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교육부의 정답을 찾아가다 보면 근데 대학이 자기 것을 찾는 건 놓칠 것 같아요. (D대학 기획처장)

전공자율선택제의 확대도입은 대학의 '교육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혁신은 경직된 정책 안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교육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유지하되, 대학이 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운영 방안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보다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각 대학은 고유한 교육적 목표와 인재 양성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이 세부 실행 방안을 모두 규정하는 대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폭을 제공해야 한다. 전공자율선택제는 하나의 형태가 아닌 대학마다 그 운영의 형태가 달라야 하는 '혁신의 시도'여야 한다. 교육부의 정책이 이러한 가능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때 이 제도가 비로소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 대학 유형별 우수사례의 발굴 필요

전공자율선택제의 전면적인 도입에 따라 기존에 유사 제도를 운영해 온 우수사례 대학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우수사례의 공유는 대학들의 협력적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고 운영 노하우를 확산시킴으로써 제도의 빠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만, 전공자율선택제는 대학의 조직 특성과 운영 규모에 따라 세부 형태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재 공유되고 있는 우수사례가 자신의 대학과 규모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참고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전공자율선택제가 운영이 되는데 자율전공학부를 크게 운영하는 대학이랑 작게 운영하는 대학이랑 수도권 대학이랑 지역 대학이랑 이렇게 모델을 좀 구분해서 유형별로 잘하는 모델이 소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A대학 학부장)

ACE사업때처럼 대학 유형에 따른 우수사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소수의 대학들은 다소 특수한 유형이라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는 ... (C대학 학사팀장)

따라서 대학 유형별로 특화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적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전공자율선택제의 운영 방식은 대학의 규모, 위치, 재정적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맞춤형 사례 공유는 각 대학의 현실적인 전략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사례 공유는 단순한 홍보나 성과 전시를 넘어 대학들이 실제적인 학사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유의 장은 교육부 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의 주체가 주도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CE사업 등 과거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를 기반으로 대학 유형별 우수 모델을 소개하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투명하게 공유한다면, 대학 간 협력적 성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리는 각 대학이 전공자율선택제를 운영하며 겪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업적 지원 필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과정에서 학생들의 전공 기초 과목 이수와 관련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대학 차원의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은 전공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채로 1학년을 보낸 후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게 된다. 이때, 전공과목이 위계적으로 구성되어 1학년 때부터 전공 수업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과로 진학한 학생들은 1학년 전공 수업을 듣지 못한 채 2학년에 진학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문·이과 통합 교육이 도입된 이후 인문계열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과로 진학하는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전공 심화 수업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교수들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일부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학생들이 학업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진학하면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기초 과목을 추가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부 대학들은 비교과 프로그램 또는 계절학기 등의 형태로 기초 과목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제일 중요해요. 이때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원래 전공 학생들이 들은 전공 수업만큼 따라가지 못하면 아예 뒤처지는거거든요. OO대학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 같고 ...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우려가 큼니다. (C대학 학사팀장)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자유전공학부에 국한되어 이루어지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대학 전반, 더 나아가 여러 대학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 도입에 따라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학업적 배경이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기초 학력 보완의 필요성은 특정 학부나 학과를 넘어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될 수 있다. 또한, 학사 구조의 유연화로 전공 간 이동이 활성화된다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다양한 전공 전환 학생들에게도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기초 학력 보완은 특정 전공이나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에게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 전체의 학생 지원 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져야 할 과제이다.

인문에서 자연, 자연에서 인문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요. 이 학생들 다 기초과학 교수들 입장에서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고요. 이거는 사실 하나의 학과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 그런 걸 학교 차원에서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학과 차원에서 일부 더 추가해 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B대학 교수)

지금은 대학들이 각개전투하고 있어요. 계열 기초 수업 만들고 교육과정 개발하고... 이런거 제공하는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누군가 공동으로 해준다면.. 대학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C대학 학사팀장)

또한, 현재는 각 대학이 개별적으로 이러한 보완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 비효율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부, 또는 관련 협의회 차원에서 기초 과

목과 계열별 필수 수업을 대학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전공자율선택제 학생에 대한 지원을 넘어 대학 전체의 학생 지원 체계를 보다 포용적으로 개선하고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이번 연구는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현장에서 직면하는 현실적인 과제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배경과 과정에서 모든 연구 참여 대학들은 해당 제도의 도입이 교육부의 정책적 요구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과 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성과평가 항목으로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 여부가 포함되었고,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차등 지급되는 구조로 인해 대학들은 이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특히 중점 추진 대상(수도권 대학, 국공립대학)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사립대학에서도 이러한 정책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자율선택제를 신설하거나 확대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자율선택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학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번 제도가 교육부의 정책적 기조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 따른 외부적 요인으로 도입된 만큼, 정책적 동력이 사라질 경우 제도의 유지와 지원 체계가 약화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대학이 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과정에서 대학 조직 내 정치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전공 선택을 둘러싸고 학과 간 경쟁이 심화되거나 일부 학

과에서는 자유전공학부 학생들이 물리면서 과도한 행정적·교육적 부담이 발생한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인기 학과는 수업 과밀화와 교수 시수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비인기 학과는 지원 감소로 인해 존립 자체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학과 간 협력보다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대학 내 전체적인 협업 구조를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은 대학마다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운영과 향후 개선방향 도출에 있어 대학의 개별적인 맥락과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생 지원 문제와 학업 적응의 어려움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전공자율선택제 내 학생들은 1학년 동안 전공에 소속되지 않고 교양 및 기초과목을 이수하다가 2학년부터 전공을 선택하기 때문에 전공에 따라 기초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해당 전공 수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자연과학·공학계열, 상경계열 등과 같이 전공 과목 간 위계성이 강한 학과에서는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적응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학업 부적응이 중도탈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기초학력 보완 프로그램과 비교과 활동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섯째, 전공쏠림 현상은 전공자율선택제의 필연적인 과제로 언급되었다.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보다는 취업률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여 특정 학과로 몰리는 현상은 수업의 질 저하, 교원 수 부족, 그리고 기초학문 분야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내 자원 배분의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대학의 재정과 교육 운영에 장기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 전공쏠림 현상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는 점에서 대학들은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탐색할 수 있는 다양한 학사 프로그램과 경로를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는 정책적 차원에서 이러한 현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과와 효과성에 관한 철학적·실증적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가 밝힌 전공자율선택제의 목표는 학생들의 전공선택권 확대에 있으나 이를 통

한 장기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되고 있지 않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이 제도를 통해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수요와 기업의 인식 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우려했다. 전공자율선택제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분석함으로써 정책과 대학이 공유할 수 있는 목표와 지향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대학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정책적 방향성을 유지하되 각 대학의 특성과 운영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들은 고유한 교육 목표와 인재 양성 전략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일률적인 지침 대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세부 실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외부적 요구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자발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학 간 협력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과정에서의 우수사례 발굴과 공유는 대학 간 협력과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대학의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유형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이러한 사례 공유를 위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들이 운영 노하우를 교류하고 공통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성과 전시를 넘어 제도의 장기적 정착을 위한 협력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생 맞춤형 학업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이 학업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보완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고교 학점제 도입과 전공 간 이동 증가로 인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기초과목 및 계열별 필수 과목에 대한 보충 수업과 비교과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대학 차원의 학생 지원센터 확충과 진로 및 학업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학업적·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며 안

정적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자유전공학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공을 변경하거나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 전반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지원 체계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과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전공자유선택제 운영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개선과 대학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공자유선택제 도입이 학부제, 자유전공학부 등 기존 유사 제도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차원의 세심한 운영 설계와 체계적인 학생 지원이 필수적이다. 또한, 대학만의 노력을 넘어 교육부 차원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과 재정 및 행정적 지원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 제도가 장기적으로 ‘교육 혁신’으로서 대학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과 함께 장기적이고 실증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전공자유선택제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학이 당면하는 실제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고, 재학생들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양한 대학 유형에 따른 제도 운영 경험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명구, 김지현(2010).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2), 327-361.
- 교육부(2024.01.31.a).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 발표. 보도자료.
- 교육부(2024.01.31.b).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일반재정지원) 기본계획. 보도자료 별첨.
- 교육부(2024.05.30.).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주요사항.
- 권정현, 김해숙(2024). 무전공 입학 대학생들의 자율전공학부 대학생활에 대한 질적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30(4), 303-324.
- 김민제(2024.01.30.). 대학에 ‘무전공 25% 선발’ 사실상 의무화.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26520.html>
- 김정선, 이병식(2024). 무전공 입학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대학의 자율성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사상연구**, 38(3), 27-51.
- 김해숙, 권정현(2024). 혼란과 확산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무전공 입학 대학생의 첫 학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9), 567-579.
- 남진숙(2024).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현황과 운영의 방향성. **교양교육연구**, 18(5), 85-97.
- 방청록(2024). 한동대학교 무전공 입학 및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과 성과. **대학교육**, 224, 30-37.
- 백두산(2024.01.12.). “해도 문제, 안 해도 문제”...‘무전공 입학’ 확대에 고심 중인 대학들. 한국대학신문. <https://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558169>
- 신현지(2024.01.09.). 2025 무전공 확대의 그늘.. ‘2년째 4년 예고제 무시 기시감’. 베리타스 알파.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90557>
- 유민희(2023).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관련 국내 연구동향 및 지원방법 고찰: 심리정서적 요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6), 351-371.
- 윤옥한(2024). 전공 자율 선택(무전공) 입학제도 정착 방안 탐색.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4(6), 461-471.
- 이수정(2024). 교육학자가 바라본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과제. **대학교육**, 224, 22-29.
- 이필남(2020). 정부 재정지원이 사립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를 중심으로.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47-72.

- 전종희(2024). 자율전공선택제(‘무전공’ 제도)의 주요 내용과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구 문화교류연구)**, 13(3), 511-543.
- 정연재, 주소영, 이승엽(2023). 자율전공학부 운영 현황과 학생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문화와 융합**, 45(12), 1227-1241.
- 최화숙, 박지희(2024).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방안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4), 815-834.
- 한국대학교육협의회(2024).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단위 운영 계획(국립대, 수도권 사립대, 공립대).
- Schwab, K. (2016). **클라우드 슈밥의 제 4차 산업혁명**(원제: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송경진 역. 메가스터디북스.
- Baker, R W., & Siryk, B. (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In **Program of the Seventy-Fourth Annual Meeting**.
- Tinto, V.(1993). *Leaving College: Rethinking the Causes and Cures of Student Attr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부록]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 관한 대학 관계자 면담 질의서

안녕하십니까,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4년 내부현안 연구로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의 과제와 제도적 개선 방향 탐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의미 있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 및 운영에 참여하고 계신 대학 관계자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소속 대학, 직위 등 모든 개인정보는 연구 보고서 내 익명 처리될 예정이며, 응답과 개인 및 대학 기관 정보 또한 매칭되어 제시되지 않습니다. 모든 개인정보와 응답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된 이후 폐기될 예정입니다.

바쁘신 중에 조사를 위해 도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 정책연구팀
연구원 전석진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025년, 확대 운영을 앞둔 전공자율선택제는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학의 전공 간 벽 허물기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이번 확대 도입 및 운영에 있어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성과급 배분 평가에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수준을 포함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확대 도입에 강한 정책적 유인을 제공하였음.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대학 운영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촉박한 준비 기간으로 인해 대학 관계자들은 도입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전공자율선택제의 새로운 도입과 확대 운영에 있어 많은 우려가 제시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경험하는 시행착오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을 준비하는 대학의 현황과 경험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대학의 당면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기반으로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대학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1 전공자율선택제 도입 배경과 운영 현황

1. 소속 대학은 전공자율선택제를 언제 도입하셨습니다?

2. 소속 대학이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3. 현재 소속 대학의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현황을 간략히 설명해주시요. (유형, 모집 인원, 교수 인원, 학사 구조 등)
 - 3-1. 이와 같은 운영 구조를 구성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대학의 거버넌스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습니까?

4.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 수렴은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습니까?

2 전공자율선택제 운영 과정에서의 과제

1.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도전(어려움)은 무엇입니까?
2. 전공자율선택제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 타 부서/조직과의 협업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3.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4. ‘전공쏠림현상’은 전공자율선택제의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소속 대학의 대응 전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5. 전공자율선택제 도입에 따른 교원 제도의 변화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6. 전공자율선택제 내 학생 관리와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 6-1. 말씀해주신 우려와 관련하여 소속 대학은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3 전공자율선택제의 효과성과 향후 과제

1. 융합 인재의 육성, 학생의 전공 선택권 확대 등이 전공자율선택제의 도입 취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해당 제도의 도입이 이러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향후 전공자율선택제 운영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3. 전공자율선택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어떠한 정책적 지원(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전공자율선택제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대교협의 역할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원창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현황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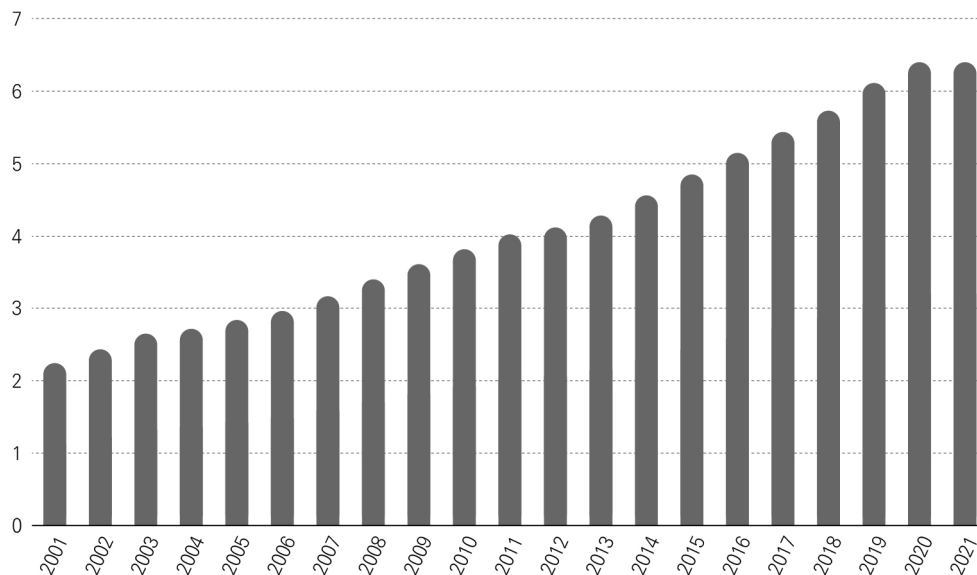
정원창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OECD 교육지표에 따르면 유학생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개념이 존재한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Foreign students)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고등교육과정을 등록한 국가의 시민이 아닌 학생으로, 국적에 따라 외국인유학생으로 정의된다. 이들은 국제 이동학생으로 간주되지만, ‘장기 거주자’거나 ‘유학 국가’에서 출생한 자도 포함한다. 둘째 국제 학생(International students)이다. 이 개념에 따르면 출신국을 떠나 학업을 목적으로 사전교육(후기중등교육)을 받은 국가나 거주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동한 학생을 말한다. 셋째, 국제이동학생(Internationally Mobile students)이다. 이 개념은 국제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OECD 2023).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미국, 튀르키예 등 8개국은 ‘외국인 유학생’ 정의를 사용하며, 영국, 호주, 프랑스 등 30개국은 ‘국제이동학생’ 정의를 사용한다.

한편 유네스코 통계(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에 따르면 세계 유학생(Internationally Mobile students) 수는 2000년 2.1백만명에서 2021년 6.4백만명으로 지난 20년간 약 3배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세계 유학생 수의 약 절반 이상은 미국, 영국, 호주, 독일, 캐나다, 프랑스, 튀르키예, 중국, 네덜란드, 일본, 한국 등의 국가가 유치하고 있다(그림2). 6.4백만명 중 4.3백만명이 OECD 국가에서 재학 중이며 2022년에는 1.9백만명의 유학생이 OECD 국가의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였다.

(단위: 백만명)



| 그림 1 | 연도별 세계 유학생 증가 현황(2001~2021)

출처: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2025.1.10. 추출)

| 표 1 | 주요국 연도별 유학생 유치현황

(단위: 명)

연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호주	381,202	444,514	509,160	458,279	378,439	382,007
프랑스	258,380	229,623	246,378	252,444	252,856	263,458
독일	258,873	311,738	333,233	368,717	376,359	403,473
일본	164,338	182,748	202,907	222,661	216,241	199,298
한국	70,796	84,749	98,857	111,568	118,528	123,280

출처: UNESCO, Institute of Statistics (2025.1.10. 추출)

주요 유학생 송출국가는 중국(16%), 인도(8%), 베트남(2%) 등 아시아 국가이며 2021년 OECD 회원국 전체 유학생의 57%를 차지한다(OECD 2023), 일본과 한국의 유학생 중 95%가 아시아 국가 출신이며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이다. 유럽은 OECD 회원국에 등록된 전체 유학생의 22%를 차지하며 유럽 국가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42%를 차지하는데 이는 지리적인 접근성과 유럽연합 내 에라스무스(Erasmus) 학생 교환 프로그램에 기인한 바가 크다.

오늘날 세계 고등교육강국들은 유학생 유치에 많은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은 국가교육전략 ‘International Education Strategy global potential, global growth’ (2019)을 통해 교육관련 수출액을 연간 350억 파운드, 2030년까지 유학생 수 60만명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전략은 유학생 유치를 위한 5개의 추진전략으로 ① 국제교육을 선도하는 리더 지정, ② 영국교육의 다양성을 홍보하는 ‘Education is GREAT’ 캠페인의 국제적 추진, ③ 유학생 유치환경 정비와 경쟁력 있는 제안 개발, ④ 정부의 개입과 국내외 정부영역의 조정 및 전정부적 추진체제 확립, ⑤ 영국 교육수출 데이터의 정확성과 범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교육수출 활동을 설정하고 외국인 학생 비자 절차 개선 등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웠다.

호주는 ‘호주국제교육전략’(2021)을 통해 “국제교육은 호주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과거 10년간 국가경제에 2500억 달러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2015년에는 190억달러, 2019년에는 403억달러로 2배 이상 성장하였고 국제교육은 호주 제4위의 수출영역이 되었으며 호주의 경제와 고용에 큰 기회를 창출하고 있다”고 하며, 아시아로 편중된 유학생 출신국 다양화, 다양한 온라인교육과 해외교육 프로그램제공, 유학생 호주 취업을 목표로 한 기능·기술교육 제공, 이노베이션과 경제성장에 합치된 국제적인 연구협력 촉진 등의 추진계획을 세웠다.

독일은 ‘독일 고등교육기관 국제화를 위한 연방·각주 학술훈당장관 전략’(2013)을 통해 2020년까지 유학생 35만명 유치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전략은 국제화는 독일 대학의 특성을 형성하는 중심적 요소이며 질적 향상에 불가결한 수단으로써 대학 개혁의 추진력이며 대학의 발전과 과학의 거점으로서 독일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각 고등교육기관의 전략적 국제화, ② 국제화를 위한 법적 체계 개선, ③ 국제적인 캠퍼스 설립, ④ 학생의 국제적인 이동 촉진(커리큘럼에 반영), 해외대학과의 국제학위 과정 확대, ⑤ 고등교육 거점 향상(교육프로그램과 마케팅을 통한 유학지로서의 지위향상), ⑥ 해외 우수청년연구자 확보, ⑦ 국제적인 연구협력 확대, ⑧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제공체제 확립(교육프로그램 해외진출, 해외고등교육기관과의 협력지원)

프랑스는 ‘환영! 프랑스 Bienvenue en France’(2018) 전략을 통해 2027년까지 50만명의 유학생 유치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전략은 유학생 수가 국가의 교육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래 엘리트를 육성하고 국가의 가치관을 확산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지역 교육기관의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유학생 비자 절차 간소화, ② 고등교육기관의 프랑스어교육 및 영어로 교육하는 과정 확대, ③ 유학생 유치 질 보증을 위한 인증기관 부여, ④ 유럽권 외의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차별화 및 장학금 확대, ⑤ 유학생 유치 홍보활동 강화이다.

일본은 2023년 4월에 일본총리를 의장으로 문부과학성, 법무성, 외무성 등 각 부처 수반과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자문기구인 ‘교육미래창조회의’에서 2033년까지 외국인유학생을 40만명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일본 대학의 교육연구의 활성화 및 향후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인재의 확보 관점에서 고등학교 단계부터 전략적인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일본 유학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에 대한 일본 유학의 홍보와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등 경제적 지원, 기업과 연계한 국내취업지원 등 유학생 유치환경의 정비를 추진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추진전략으로 첫째 유학생 유치환경 강화를 위해 ① 전략성을 갖춘 유학생 유치 체계 강화(일본학생지원기구의 정보수집·전략 입안 능력 강화, 거국적인 모집기능 강화), ② 장학금 확충(중점지역 및 분야 반영), ③ 국내취업지원, 일본어 교육 강화, ④ 유학생의 적정한 유치와 재적관리 강화 등 질 관리 제고, 둘째, 대학의 국제화 제고를 위해 ① 유학생 지원체계 강화 및 국제통용성 있는 교육 추진(외국어에 의한 수업, 유학생과 일본인 학생이 함께 배우는 수업 실시 등), ② G7과 ASEAN 국가·지역간 대학 상호교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등을 제언하였다.

위와 같이 글로벌 시대에 세계 주요 고등교육 강국들은 유학생 유치가 자국의 고등교육과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는 인식하에 고등교육의 국제화 강화와 유학생 유치 전략을 세우고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 2012년 유학생 유치 정책인 ‘Study Korea 2020’ 이후 국내 유학생

수가 2012년 86,878명에서 2022년 166,892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유학생의 출신 지역이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고 지방 보다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에만 관심을 갖고 있고 취업과 정주에 대한 전략이 부족하다. 또한 개별대학 중심의 유치전략에 치중되어 있고 대학·지자체·지역기업과의 연계·협업을 통한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정부는 2023년 8월에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Study Korea 300K Project’를 통해 2027년까지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여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위에서 언급된 세계 주요 고등교육 강국 중에서 한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 등의 사회적 위기를 유학생 유치 전략을 통해 극복하려는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에 대한 현황을 소개하고 일본사례를 통해 Study Korea 300K Project 실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일본의 유학생 정책 전개

1.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¹⁾

가. 연도별 유학생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일본의 외국인 유학생수는 279,274명이다. 내역별로 살펴보면 자비유학생 267,111명, 국비유학생 9,182명, 외국정부파견유학생 2,981명이며, 재적 기관별로 살펴보면 대학·단기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188,555명, 일본어교육기관 90,719명이다.

고등교육기관에 재적중인 유학생 중 학부생은 82,818명, 대학원생은 55,539명, 전수학교(전문과정) 46,325명, 기타 3,873명이다.

1) 일본의 외국인유학생 현황은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의 연도별 ‘외국인유학생재적현황조사결과’ 참조

1983년에 유학생 유치 10만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당시 만명에 불과했던 일본의 유학생수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출입국관리정책 완화로²⁾ 유학생수가 증가하면서 2003년에 10만명 유치계획이 달성되었다. 2008년에 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이 발표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15년에 20만명을 넘어섰고 2019년에는 유학생 30만명 유치계획을 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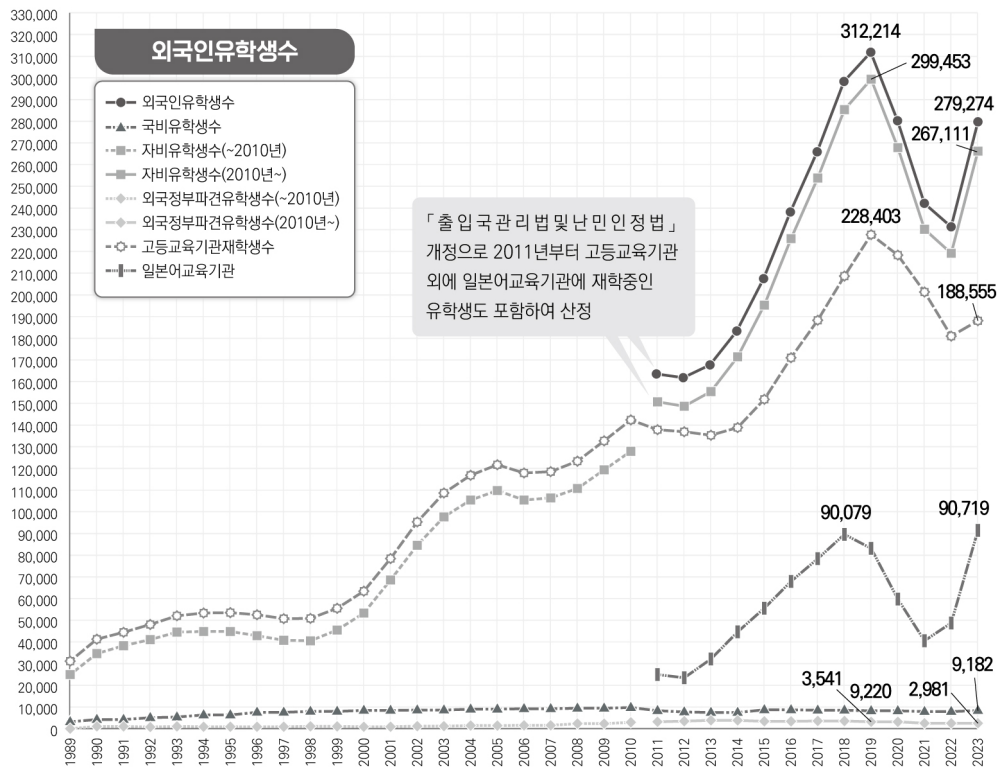


그림 2 | 연도별 외국인유학생 수 추이

출처: 일본학생지원기구. 2023년 외국인유학생재적현황조사결과

나. 출신 지역별·국가별 유학생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출신 지역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아시아권이 254,224명 (91%)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유럽 13,364명(4.8%), 북미 4,667명(1.7%), 아프리카

2) 일본 법무성은 1984년 국내 일본어 교육기관에서 학습하는 취학생 비자발급수속을 간소화함. 2010년에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취학'의 체류자격을 '유학'의 체류자격으로 통합함.

2,595명(0.9%), 중남미 2,238명(0.8%)순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15,493명(41.4%)로 가장 많고 네팔 37,878명(13.6%), 베트남 36,339명(13%), 한국 14,946명(5.4%), 미얀마 7,773명(2.8%) 순이다.

다. 남녀별·재학단계별·국공사립별 유학생 현황

2023년 12월 기준, 남녀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56,126명(55.9%), 여학생이 123,140명(44.1%)으로 남학생이 약간 많다. 재학단계별로 살펴보면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대학(학부생)이 80,362명으로 가장 많고 대학원생이 55,539명, 단기대학 1,955명, 고등전문학교 501명, 전수학교(전문과정) 46,325명, 준비교육과정 3,873명이며, 일본어교육기관은 90,719명이다. 설립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은 대학원생이 학부생보다 비중이 높으며, 사립은 학부생이 대학원생보다 비중이 높다.

라. 전공분야별·지역별·학교별 유학생 현황

2023년 12월 기준 전공분야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인문과학분야가 134,310명(48.1%), 사회과학분야 57,563명(20.6%), 공학 34,135명(12.6%), 예술 11,560명(4.1%), 자연계 4,640명(1.7%) 순이며 인문·사회계열이 68.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 유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도쿄도, 치바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을 포함하는 간토지방이 135,178명(48.4%)로 가장 많으며 오사카현, 교토현 등을 포함하는 긴키지방이 63,610명(22.8%),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등을 포함하는 규슈지방이 29,040명(10.4%), 아이치현, 시즈오카현을 포함하는 추부지방이 26,121명(9.4%), 히로시마현, 오카야마현을 포함하는 추고쿠지방이 10,960명(3.9%), 홋카이도 4,753명(1.7%), 가가와현, 도쿠시마현을 포함하는 시코쿠지방이 1,962명(0.7%)순이다.

학교별로는 와세다대학이 5,560명으로 가장 많으며 도쿄대 4,658명, 리쓰메이칸대학 3,027명, 교토대학 2,844명, 오사카대학 2,712명, 리쓰메이칸아시아태평양대학 2,662명 순이다.

2.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

가.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 추진 배경

일본의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한 정책추진은 1983년 당시 나카소네 내각에서 발표한 “21세기를 지향한 유학생 정책에 관한 제언”이 시발점이다. 동 제언은 유학생 유치를 확대해야하는 배경으로 첫째, 유학생 교류는 국제적인 상호이해 증진과, 교육, 연구수준 제고, 개발도상국 인재육성 등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및 대외정책상 중요한 국책과제라는 점, 둘째, 유학생은 각국의 발전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 셋째, 일본의 유학생 수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뒤쳐져 있다는 점을 들었다.

동 제언은 유학생 유치확대를 위해 당시 만 여명에 불과했던 유학생을 2000년까지 당시 프랑스의 유학생 유치수와 같은 수준인 10만명의 유학생을 유치한다는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계획 기간 중인 1983년부터 1992년까지를 전기, 1993년부터 2000년까지를 후기로 구분하여 전기에는 유학생 유치체제 및 정비에 중점을 두고 후기에는 이에 기반한 유학생 수의 증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³⁾

나.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 시책

“유학생 10만명 계획”의 목표 실현을 위해 일본정부는 계획 전반기(1982년~1992년)에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시책으로 ① 국비유학생수 증원, ② 외국정부파견유학생 적극 수용, ③ 유학생 배려 코스 확충(영어수업 등), ④ 학위수여 제도 개선, 사립대학 유학생 유치 촉진, ⑤ 대학 유학생센터 담당 정비, ⑥ 현지 유학정보제공과 유학상담 실시, ⑦ 일본유학생시험 실시, ⑧ 국내외 일본어교육 기반확충, ⑨ 유학생 숙소 정비, ⑩ 귀국유학생에 대한 사후관리(학술지 송부, 귀국유학생회 조직화 등), ⑪ 자비유학생 학습장려금 지급 확대, ⑫ 유학생 입국·체류 규제 완화 등을 실시하였다.⁴⁾

3) 21世紀への留学生政策懇談会. ‘21世紀への留学生政策に関する提言’(1983.8.31.).

4) 寺倉憲一. わが国における留学生受け入れ政策. レファレンス. 2009.2, 国立国会図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

다. 유학생 10만명 유치 계획 추진 성과

유학생 수는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법무성 입국관리국의 유학생에 대한 아르바이트 규제 완화 등으로 일본 유학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1989년에는 3만명을 넘어섰고 계획 전반기에 목표로 했던 4만명은 1990년에 달성하였다. 그 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던 유학생 수는 1990년대 중반 거품경제 붕괴와 한신대지진 등의 여파로 정체를 보이다가 1990년대 후반부터 증가하였다. 여기에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으로 중국 국내의 고등교육 수요가 높아지면서 해외유학생 수가 급증하였고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같은 한자문화권일 뿐만 아니라 유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 점이 중국유학생 유인요인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국인 유학생 수요와 유학생에 대한 출입국완화 정책으로⁵⁾ 2003년에 109,508명으로 유학생 10만명 유치 목표는 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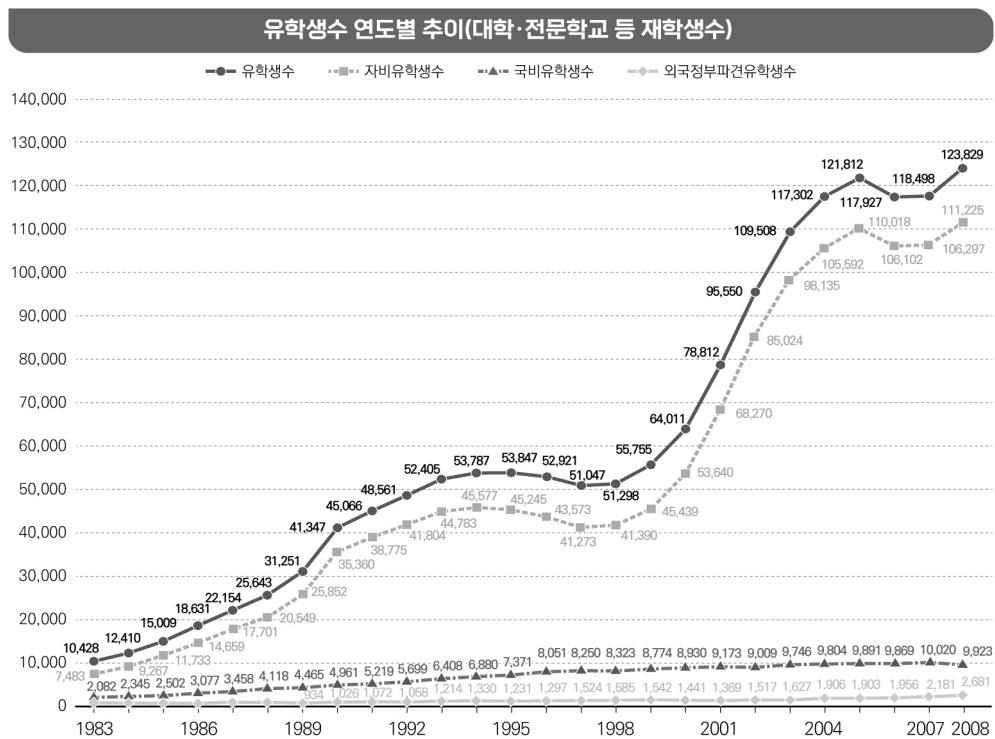


그림 3 | 연도별 유학생수 추이

출처 : 문부과학성(2002~2012) 일본유학생제도 개요

5) 1996년에는 유학생신원보증인 제도가 폐지되었고, 2000년에는 전수학교 졸업 유학생에 대한 취직·진학 요건 완화, 유학생 아르바이트 시간규제 완화,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3.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가.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추진 배경

2008년에 일본은 2020년을 목표로 유학생을 30만명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당시 수상이던 후쿠다야스오 총리는 2008년 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이하, 동 계획)을 제안하고 산학관 연계를 통한 해외 우수인재의 대학원, 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표명하였다. 이 배경에는 IT 분야 등 고도(전문)외국인재 및 글로벌 경제하에서 기업의 해외진출 가속화로 유학생 고용촉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점을 들 수 있다.⁶⁾

한편 동 계획 발표 2년 전인 2006년 당시 수상이던 아베신조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일본이 아시아와 세계의 통로가 될 것을 담은 “아시아 Gate Way 구상”을 발표하면서 유학생 유치 확대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동 계획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시아 Gate 구상은 “국제인재의 수요 및 육성”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유학생 교류 확대를 통한 아시아 고도인재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수 있는 유학생 추진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기본방침을 세웠다(아시아게이트웨이 전략회의, 2007).

- 1) **유학생 수용 확보** : 세계 유학생 시장의 급속한 확대 추세를 감안하여 일본의 지적공헌과 영향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계 유학시장의 5% 확보를 목표
- 2) **일본인 해외학습기회 확대** :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관점에서 대학 해외프로그램과 단기유학, 청년연구자 파견, 청소년 교류 확대 등을 추진
- 3) **유학생 경력확보를 고려한 산학연계 추진** : 유학생의 일본기업 취업기회는 일본유학의 큰 매력이며 일본경제에도 우수한 유학생을 육성·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산학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인턴십 등의 취업지원을 도모하고 유학생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체류자격제도 개선을 추진
- 4) **해외현지 기능 강화** : 해외현지 유학생 확보·지원 기능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일본의 허브기능을 세계각지에서 추진. 이를 위해 대학의 국제화와 해외

6) 예를 들면 일본경제인연합회는 “外国人受け入れ問題に関する提言”(2004)을 통해 우수한 외국인재를 획득하는 방책의 하나로 유학생의 국내취직 촉진을 제안하였다.

대학과의 협력·연계 강화, 재외공관, 일본학생지원기구, 국제교류기금 등 관계 기관과 대학·민간 협력강화를 추진하고 일본어 교육의 프렌차이즈 제도를 도입 하여 해외거점 확대를 추진

- 5) **일본문화를 활용한 유학생 확보** : J-Pop 등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이 일본유학 의 주요 동기인 점을 고려하여 일본어 교육 및 일본문화 정보제공과 같은 측면 에서 유학생을 지원하고 문화산업전략과 유학생전략을 일체적으로 추진
- 6) **국비유학생제도 내실화** : 대학의 인재확보 인센티브가 발휘될 수 있도록 전략 적인 유학생 유치프로그램에 대한 국비유학생 우선배치를 제고하고 육성 프로 그램을 추진
- 7) **단기유학생 유치 촉진** : 1년 미만의 단기 교환유학이 세계적인 추세임을 감안 하여 대학의 단기유학 프로그램 개발과 유학생 숙소 정비·확보를 지원

나.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동 계획은 2008년 7월 문부과학성을 비롯하여 법무성, 외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 업성, 국토교통성 등 정부 주요 6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동 계획의 취지는 첫째, 일본의 글로벌 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을 목표로 유학생 30만명을 유치하고 특히 고 도인재 영입과 연계시켜 우수 유학생을 전략적으로 확보하고, 둘째, 일본유학 동기부여 를 위해 입시·입학·입국 단계에서 대학과 사회의 수용, 취직 등 졸업·수료 후의 진로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방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간의 종합적·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한다 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다음과 같은 7가지 구체적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⁷⁾

1) ‘일본 유학 동기부여와 원스톱 서비스 추진’

- 적극적으로 일본의 문화, 사회, 고등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의 국가 브랜드를 확립
- 해외대학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일본어 교육거점을 확대함으로써 해외의 일본 어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

7) 文部科学省(2008).留学生30万計画の骨子.

- 각 대학의 유학정보 제공과 일본유학박람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학정보 제공을 추진
- 재외공관, 독립행정법인의 해외사무소, 대학 등의 해외거점과 연계하여 해외에서 일본유학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 유학희망자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강화, 유학희망자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

2) 입시·입학·입국 단계 개선을 통한 ‘일본 유학 원활화’

- 일본유학시험 개선, 일본어능력시험, TOEFL, IELTS 등을 활용한 입국 전 입학허가 추진. 숙소, 장학금 등 안심하고 유학할 수 있는 제도 확충
- 현지에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해외거점 추진과 대학간 공동연계 추진
- 대학의 재적관리 철저, 입국시와 입국후 체류기관 갱신 신청과 관련한 심사 간소화와 심사기간 단축

3)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매력있는 대학 조성’

- 국제화의 거점이 되는 대학을 30개 선정하여 중점적으로 육성
- 국제화 거점대학은 영어만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코스를 확대하고 국제적인 교육연구거점 조성을 추진
- 교환유학, 학점교환, 복수학위 등 국제적인 대학간 공동·연계와 단기유학, 여름학기 등 교류촉진, 학생 유동성 제고, 커리큘럼 질 보증 등 대학국제화 역량 강화
- 전문과목 외국인 교원채용 확대 등 교육연구수준 제고
- 유학생 유치와 내국인 해외유학 활성화를 위해 9월 입학 촉진
- 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의 전문적인 조직체제 강화
- 국비유학생 우선배치, 재정지원 차등배분, 경쟁적 자금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

4) 수용환경 조성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추진’

- 대학이 각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단기유학을 포함한 1년 이내에 유학생에게 숙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학 기숙사 정비, 민간숙소 확충, 공공숙소의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 국비유학생제도 및 자비유학생 장려금에 대한 개선 추진
- 지역·기업 등의 컨소시엄에 의한 교류 지원과 전국적인 교류추진회의 창설
- 일본어교육기관·대학 등의 일본어교육 담당부서를 비롯한 국내 일본어 교육 내실화
- 유학생 상담 등 유학생과 가족에 대한 생활지원

5) 졸업·수료 후의 사회수용 체제 구축

- 대학내에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유학생에 대한 취직지원을 강화
- 인턴십, 취업상담실 확충 등 산관학 연계를 통한 취·창업 지원
- 기업의 의식개혁과 수요체제 정비 추진
- 취업가능 직종 등 체류자격 명시 및 유연화, 취업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등
- 귀국유학생 동창회 조직 지원, 귀국 후 팔로우업 충실화 등 귀국 후 활약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 강화

다.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에 따른 추진 시책⁸⁾

동 계획에 제시된 5가지 추진과제에 따라 추진된 구체적 시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추진과제인 ‘일본유학 동기부여와 윈스톱 서비스 추진’에 대한 시책으로 첫째, 일본문화, 사회, 고등교육에 관한 정보제공 강화를 위해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일본유학종합가이드 “Study in Japan” 사이트 운영, 해외 현지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일본유학 해외거점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4년부터 미얀마, 잠비아, 인도, 브라질, 튀르키예 등 5개 지역에 해외거점을 개설하고 현지 언어와

8) ‘留学生30万計画’ 関係省庁会議(2001). · 留学生30万計画骨子検証結果報告(2021.3.31.).

정세에 정통하고 정보수집·분석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두고 현지 일본 공관, 기업,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① **유학에 관한 정보수집·제공**: 현지 뉴스와 일본유학 정보 수집, 유학박람회 개최, 학교방문, 귀국유학생 네트워크와 SNS 활용을 통해 유학대상자에 정보 제공, ② **우수유학생 획득을 위한 모집활동 촉진**: 현지 입학허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 기능 제고, 현지 일본학습 강화, ③ **귀국유학생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귀국유학생 협력을 얻은 유학생 홍보·모집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에게 일본 유학중의 학업과 생활, 유학 후의 취업기회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효과적으로 제공하여 일본유학 희망자 증대. 아울러 일본국내에는 본부를 설치하여 국내정책과 유학생 동향에 관한 전문가를 배치하여 일본국내 대학 및 해외거점과 연계하여 가) 해외거점설치지역의 유학생 동향에 관한 정보수집·분석, 나) 일본국내 대학과의 네트워크 구축, 다) 일본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유학생 네트워크 형성, 둘째, 외무성은 해외일본어교육 기회확대를 위해 국제교류기금에 의한 일본어교육 보급, 일본어 학습교재와 온라인 코스 제공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고, 셋째, 관광청은 방일 교육여행 추진을 위해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방일 교육 세미나 개최, 해외학교 관계자 일본 학교·관광지 초청, 일본정부 관광국 상담센터를 통한 방일 교육여행 신청과 국내 학교·교육기관 매칭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두 번째 추진과제인 입시·입학·입국 단계 개선을 통한 ‘일본 유학 원활화’에 대한 시책으로 ① **입국전 입학허가 추진**: 외무성·재외공관의 협력을 통해 일본유학시험(일본학생지원기구실시) 및 일본어능력시험(국제교류기금)의 해외 실시국가 및 도시 확대, 일본유학 희망자가 입국전에 모국에서 입학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선발 확대, 대학의 입국전 입학허가 실시 촉진, ② **입국심사 간소화·신속화 및 재적관리 철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 대학의 법무성 출입국관리청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재적현황 신고에 관한 노력의무 규정, 유학생 재적관리에 관한 대응방침 책정, 외국인 유학생 수용확대에 따른 입국심사체제 충실·강화, 재적관리 적정운영 대학 등의 신청에 대한 서류제출 간소화 및 심사기간 단축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다.

세 번째 추진과제인 대학의 글로벌화 추진 ‘매력있는 대학 조성’에 대한 시책으로 ① **국제화 거점대학 중점육성**: 영어수업 실시체제 구축, 유학생 유치체제 정비, 전

략적 국제연계 추진 등 국제화 거점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국제화거점 정비사업’ 소위 ‘글로벌 30’을 추진하여 글로벌 30개 대학을 집중 육성,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글로벌인재육성추진사업’ 추진, 2014년부터 ‘슈퍼글로벌대학육성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세계유수 대학과 교류·연계를 위한 추진활동과 인사·교무 시스템 개혁, 대학생 글로벌 대응력 육성을 위한 체질 강화 등 국제화 중점 추진대학을 중점지원 ② **학생 교류규모 확대 및 국제적인 대학간 연계 촉진:** 주요 지역·국가의 대학간 질보증을 전제로 한 학생교류와 대학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세계 진출 강화사업’을 2011년부터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지역간의 고등교육 제도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학점 상호인정과 성적관리, 학위수여 등을 통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함으로써 국내학생의 해외파견과 외국인 학생 유치를 촉진하는 데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CAMPUS Asia(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프로그램과 AIMS(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Programme)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CAMPUS Asia 프로그램은 한·일·중 3국 대학·대학원간의 유학생 교류프로그램으로 3국간의 고등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본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함과 동시에 고등교육의 질 보증을 제고하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다. 한편 AIMS 프로그램은 아시아 역내 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부주도의 국제적인 학생교류 사업으로 원래 2010년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3개국에 의한 학생교류 프로그램으로 출발하였다. 이 후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에 이어 일본이 참여하여 ‘대학의 세계 진출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이며 도쿄공업대학, 이바라키대학, 수도대학도교가 참여하고 있다.

네 번째 추진과제인 유치환경 조성 ‘안심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추진’에 대한 시책으로 첫째, 국토교통성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숙소 지원 강화 시책을 추진하였다 ① 공영 임대주택 활용: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공영주택 공급 지원, 외국인 이직퇴거자의 거주안정을 위한 공영주택 공실 활용 지원, 유학생 숙소 관련 공영주택의 목적 외 사용 지원 ② 민간임대주택 입거지원: 외국인 세대 입거 유치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채무보증지원, 외국인의 민간임대주택 입거를 거부하지 않는 임대주택 공급 증대이다.

둘째, 문부과학성과 외무성은 유학생 장학금제도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① 외국인 유학생 학업지원 장학금: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및 자비유학생을 위한 ‘유학생 수요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적인 교육프로그램 제공과 취직지원을 실시하는 대학 등에 대한 장학금 우선배분, ② 무상자금협력, 유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등을 활용한 개도국 인재육성을 위한 유학기회 제공이다.

셋째, 문부과학성과 출입국재류관리청은 국내 일본어교육 확충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였다. ① 일본어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적정화: 일본어교육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출입국관리국에 보고 의무화 등, ② 「일본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일본어교육에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주의 책무와 일본어교육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본어교육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2019년에 제정함. ③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일본어교육환경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 및 지정도시가 실시하는 지역 일본어교육의 종합적인 체계 확립, ④ 일본어교육 인재의 자질·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이다.

라. “세계의 성장을 포용하는 외국인유학생 전략”

동 계획 추진 기간 중간의 시점인 2013년 12월에 문부과학성은 동 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면서 동 계획의 실현을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 전략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⁹⁾ 동 보고서는 종래의 개발원조적인 사고방식에 벗어나 세계의 성장을 포용하고 일본의 발전을 위한 중점 지역 외국인유학생 유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외국인유학생 유치 시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점 학문분야로 공학, 의료, 사회과학(법제도), 농학을 제시하고 일본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 중점지역에 대한 지역 특성 및 정세를 고려한 대응방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9) 世界の成長を取り込むための外国人受け入れ戦略（文部科学省）戦略的な留学生交流の推進に関する検討会(2013)

1) 외국인유학생 유치 시책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학문 분야

- ① 공학 : 일본의 공학분야는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전기, 자원, 에너지, 건축 등 개발분야부터 방재, 환경보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헌을 할 수 있어 외국과의 관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임. 특히 아시아 국가들과 공학분야 고등교육 네트워크 프로젝트(AUN/SEED-Net)를 통해 아시아 역내 대학들과 공학분야 인재육성과 공동연구추진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음
- ② 의료 : 의료분야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통해 각국의 의료수준 향상에 공헌하고 일본의 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검사진단·치료·예방·재활, 의료기기·의료용 재료 등)의 해외진출을 도모할 수 있음
- ③ 사회과학(법제도) : 법제도는 국가사회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으로 사회과학에서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해외진출 시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임. 특히 민법, 상법, 회사법, 금융거래,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등 각국의 사회기반을 형성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일본의 법제도를 배운 외국인유학생이 모국의 법제도 설계에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본의 국익이 될 수 있음. 즉, 일본의 법제도를 이해하는 유학생이 각국에 존재하는 것은 교섭상 불합리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외국인유학생에 의해 일본의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각국에 전파시키는 것은 일본기업의 해외진출, 국제적 거래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④ 농학 : 농학은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는데 기본이 되는 학문임. 식물과 가축개량에 의한 식량증산, 재생산가능한 자원에너지 개발 등 세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이며 일본에서 농학을 배운 외국인유학생이 모국에서 농수산업과 농업인프라 발전에 공헌함으로써 각국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일본의 식량안보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문임

2) 지역별 대응방안

- ① 아시아 : 아시아는 일본과 인적교류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며 일본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이므로 각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아시아 네트워크 구축 실현을 위한 공학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당 분야 유학생 유치 추진
 - 아시아 도시의 사회 인프라 정비와 병원설립 등 질병예방 의료분야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역별 상황에 따른 의료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을 위한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
 - 미얀마의 경우 일본식 환경을 구축하는 관점에서 사회기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여 일본유학 촉진 거점을 정비
 - 문부과학성 추진사업인 ‘대학 세계경쟁력 강화사업’을 장학금과 연계된 아세안 국제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도모
 -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 현지 고등학교 졸업 수업연한이 12년 미만인 국가에 대해서는 1년 정도의 준비교육이 필요하여 일본 유학희망자에게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 등의 편입제도 활용을 통해 이들 국가 유학생의 유치를 촉진
- ② 러시아 및 주변 국가 : 모스크바뿐만 아니라 일본 지리적으로 인접한 블라디보스톡을 중심으로 극동지역 유학생 유치를 촉진
- 러시아는 일본유학에 대한 관심도가 저조하므로 일본 및 일본대학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거점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문부과학성 추진사업인 ‘대학 세계경쟁력 강화사업’을 장학금과 연계한 러시아 및 주변 국가와 국제교류 플랫폼으로 구축하고 효과적인 유학생 유치확대를 도모
 - 러시아는 고등학교 졸업 수업연한이 11년으로 일본유학을 위해서는 1년 정도의 준비교육이 필요하여 일본 유학희망자에게 장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 등의 편입제도 활용을 통해 유학생 유치를 촉진
- ③ 아프리카 : 아프리카국가들과의 관계에서 거둔 기존의 성과를 유념하여 모범사례를 창출함으로써 일본 국내대학에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 유치를 촉진

- 아프리카국가들의 인재육성에 일본이 공헌하고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관점에서 일본 유학을 촉진하는 거점을 정비
 - 일본기업의 관심을 반영하여 유치대학을 선정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자원, 환경, 의료 분야의 일본 대학과의 교류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귀국후 일본에서의 학습경험을 살려 자국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
 - 유학생 유치촉진은 일본정부개발원조 시행기구인 JICA(일본국제협력기구)와 JOGMEC(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 등이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바탕으로 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정비 등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육성하는 관점임
- ④ 중동 : 일본유학의 장점과 일본 대학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중동 각국의 정부파견장학금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
- 중동 국가의 일본 유학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일본 대학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홍보되어 있지 않음. 특히 중동정부파견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일본 대학이 장학금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
 - 일본과 중동지역과의 관계를 종래의 자원, 에너지 중심의 관계를 넘어 유학생 유치 확대를 목표로 추진
- ⑤ 서남아시아 : 일본기업의 진출 거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인도를 중심으로 재외공관 등과 연계하여 일본유학의 장점과 일본 대학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학생 유치 촉진
- 서남아시아의 일본 유학생 수는 그다지 많지 않으므로 일본 및 일본 대학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현지 학생에게 영어로 학습할 수 있는 일본 대학에 대한 홍보와 텔리 등 일본어교육이 보급된 도시를 중심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

- 문부과학성 추진사업인 ‘대학 세계경쟁력 강화사업’을 장학금과 연계하여 인도 등 서남아시아국가들과 국제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도모
- ⑥ 동아시아 : 동아시아 국가중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자원확보 관점에서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몽골을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를 촉진
- 몽골은 귀국유학생이 정부 요직에 취업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관료를 포함한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특히 몽골에서 필요로 하는 공학 분야를 중심으로 유학생 유치를 추진
- ⑦ 남미 : 남미는 일본의 첨단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본도 자원확보와 우수인재 유치 측면에서 중요하므로 공학 및 농학분야 유학생 유치를 촉진
-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일본과 깊은 관계이며 많은 일본기업이 진출해있으므로 일본의 기술을 배우고 일본기업에서 활약하고 일본과 브라질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 브라질 정부의 파견장학금을 활용하고 브라질의 이공계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타 남미국가도 각국 정부파견장학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유학생을 유치
- ⑧ 미국 : 대학간 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단기유학생 유치를 촉진
- 일본 이상으로 고등교육이 발전한 미국 유학생을 증가시키려면 일본 유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단기 유학생을 유치하는 전략이 필요함. 아울러 미국은 세계 각국의 우수 인재가 모여드는 국가이며 이러한 우수 인재가 일본으로 재유학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마. “유학생 30만명 유치 계획” 추진 성과¹⁰⁾

동 계획이 목표로 했던 유학생 30만명 유치는 목표연도인 2020년보다 1년 빠른 2019년에 달성하였다. 동 계획 기간 중(2008년~2009년) 재학단계별 외국인 유학생 추이를 살펴보면 대학(학부·대학원)이 93,186명(2008년) → 142,691명(2019년), 단기대학 2,117명(2008년) → 2,844명(2019년), 고등전문학교 538명(2008년) → 506명(2019년), 전수학교(전문과정) 25,753명(2008년) → 78,844명(2019년), 준비교육과정 2,235명(2008년) → 3,518명(2019년), 일본어 교육기관 25,622명(2011년) → 83,811명(2019년)으로 고등전문학교 외에는 증가추세를 보였다. 기간 중 일본어 교육기관의 유학생수가 약 3.3배로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학부·대학원)은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일본어 교육기관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중 상당수는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목표로 하였고 약 80%가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하였다.

기간 중 출신별·지역별 외국인 유학생 유치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에는 중국 72,766명(59%), 한국 18,862명(15%), 대만 5,082명(4%), 베트남 2,873명(2%), 말레이시아 2,271명(2%), 태국 2,203명(2%), 미국 2,024명(2%), 인도네시아 1,791명(2%), 방글라데시 1,686명(1%), 네팔 1,476명(1%), 기타 12,795명(10%) 순으로 유학생의 대부분이 아시아 출신이었다. 2019년에는 중국 124,436명(40%), 베트남 73,389명(24%), 네팔 26,308명(8%), 대만 9,584명(3%), 스리랑카 7,240명(2%), 인도네시아 6,756명(2%), 미얀마 5,383명(2%), 태국 3,847명(1%), 방글라데시 3,527명(1%), 기타 33,106명(11%) 순으로 아시아국가 중심으로 유학생이 편중된 상황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 중 베트남과 네팔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한국 유학생 수는 18,000명 선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분야를 살펴보면 2019년 현재 사회과학 84,714명(37.1%), 인문과학 49,250명(21.6%), 예술 11,901명(5.2%), 보건 5,466명(2.4%), 기초과학 4,305명(1.9%), 농학 4,059명(1.8%)순으로 인문·사회분야 유학생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재학과정별로 살펴보면 학부과정에서는 사회과학

10) ‘留学生30万計画’ 関係省庁会議(2021). 留学生30万計画骨子検証結果報告(2021.3.31.).

39,916명(44.5%), 인문과학 20,565명(23.0%), 공학 11,067명(12.4%), 대학원 과정에서는 공학 14,304명(26.9%), 사회과학 11,690명(22.0%), 인문과학 5,584명(10.5%), 기초과학 2,808명(5.3%) 순으로 학부에서는 인문사회과학 비중이 높은 반면 대학원은 인문·사회과학 보다는 공학 전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에 일본 고등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한 유학생의 80%(약 45,000명)는 귀국하지 않고 진학 또는 취업을 하였다. 취업 유학생 수는 2008년 약 9천명에서 2019년 23,000명으로 2.6배 증가하였고 졸업·수료 유학생 중 약 37%가 취업을 하여 2008년 25%에서 12%p가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계획의 성과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유학생 유치 정책 관련 문부과학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관광청 등 관련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성과보고를 통해 동 계획에 따른 유학생 유치 시책으로 해외 우수 학생의 일본 유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일본으로 유학하여 일본 사회에 정착함으로써 일본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둬으로써 동 계획이 목표로 했던 주요 목적인 ① ‘우수 유학생 증대’와 ② ‘유학생 국내취직 제고’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수인재의 국내 정책 촉진과 효과적·효율적인 정보 제공, 일본어교육 내실화 등을 위한 노력과 유학생에 대한 적절한 재적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대책 강화 등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였다. 첫째, 전반적으로 고등교육의 추세가 대면수업과 원격·온라인 교육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교육이 발전되고 있으므로 유학분야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원격·온라인 교육의 장점을 활용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본의 기술적 우위성을 확보·유지하는 관점에서 대학에서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향후 유학생 시책은 기존에 유입단계에서의 유학생 수 증대를 중시하는 시점에서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일본사회로의 정착을 제고하고 귀국 외국인 유학생의 활용 및 네트워크 강화에 의한 외국과의 유대강화 등 보다 출구전략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하고 관계부처의 연계·협력을 통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공생사회를 실현하고, 일본이 글로벌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우

수 외국인유학생의 수용과 아울러 일본인학생의 해외유학을 촉진하고 학생파견 및 수용면에서 질 높은 국제유동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¹¹⁾

4. 유학생 40만명 유치 계획

가. J-MIRAI “미래를 창조하는 청년 유학촉진 이니셔티브”

일본총리를 의장으로 문부과학성, 법무성, 외무성 등 각 부처 수반과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자문기구인 ‘교육미래창조회의’는 2023년 4월에 2033년까지 외국 인유학생을 40만명 유치한다는 계획을 담은 ‘미래를 창조하는 청년 유학촉진 이니셔티브(J-MIRAI: Japan Mobility and Internationalisation: Re-engaging and Accelerating Initiative for future generation)’ 제언을 발표하였다.

동 제언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을 확보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미래를 짊어질 청년이며, 최첨단 분야, 지역의 성장·발전을 위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해야한다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첫째, 유학생 교류측면에서 종래의 양적 중시 시점에서 질적 중심으로의 전환, 둘째, 보다 강력한 고등교육단계의 인적교류 촉진 및 질 높은 대학과의 유학생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초·중·등단계에서 다양성·포용성있는 교육을 충실화하고, 셋째, 해외유학 일본인 학생의 취업 제고와 외국인유학생의 국내 정착 촉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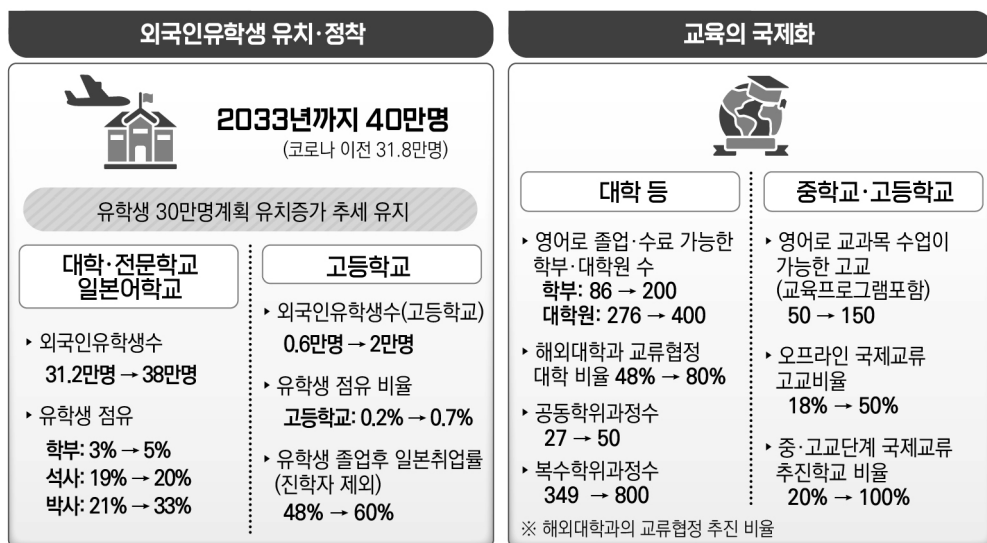
동 제언은 2033년까지 ① 일본인 해외유학생 50만명 증가, ② 외국인유학생 40만명 유치, ③ 국제적인 교육환경 정비와 대면·온라인 교류 추진 등 ‘교육의 국제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는데 이 중 두 번째 목표인 ‘외국인유학생 40만명 유치’ 및 세 번째 목표인 ‘교육의 국제화’에 대해서 소개하기로 한다.

나. 2033년 외국인유학생유치 40만명 목표

유학생 30만명 계획은 2019년에 목표를 달성했으나 COVID-19 영향 등으로 2022년에 약 23만명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현재 약 28만명 수준이다. 일본 대학의 국제통용성·경쟁력 제고 정책 등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및 일본어교육기관의 유학

11) 文部科学省(2023). 外国人留学政策参考資料集.

생 30만명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학부 유학생 비율 OECD 평균 수준, 박사과정 유학생 비율을 세계 우수대학이 있는 국가들과 같은 수준, 고등교육기관 유학생 비율을 독일·프랑스 수준, 고교단계의 외국인 유학생 수 제고 등의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제시하였다(내각관방, 2023).



| 그림 4 | 유학생 40만명 계획 목표

출처 : 미래를 창조하는 청년유학촉진 이니셔티브<J-MIRAI>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일본유학 기회 창출을 위해 우수유학생 조기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해외 일본어교육 내실화, 국비 유학생제도의 지역·분야 중점화 등 개선, 둘째, 입학단계의 요건·절차 탄력화로 DX화¹²⁾ 촉진에 의한 입학자 선발 촉진, 셋째, 국내대학 교육·연구환경의 질 및 매력 제고 방안으로 유학생 수업료 책정 유연화 및 정원관리 탄력화, 캠퍼스 질 및 매력 제고, 넷째, 적절한 재적관리 등을 철저하게 하는 방안으로 재적관리 부실대학 대학명 공개, 체류자격 ‘유학’ 부여 정지, 사학조성금 규제강화, 유학생 등 정보공개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12) DX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Digital Transformation) 의 약자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전통적인 사회 구조를 혁신, 변혁하는 것을 의미

외국인유학생 정착 방안으로는 첫째, 유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방책으로 지역의 특성에 따른 인턴십 기회 제공 등을 통한 외국인유학생 지역기업 취직·정착 지원을 위한 ‘우수 외국인 인재활약 지역 컨소시엄’ 설립, ‘우수 외국인 인재활약 촉진 플랫폼’을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외국인재 수용관련 과제해결 지원, 둘째, 기업풍토 개선, 기업의 채용방침 명확화, 사내제도 개선, 채용방침·실적 공개 촉진, 셋째, 관련 체류자격제도 개선방안으로 특별우수인재제도 및 특정활동 미래창조인재제도 창설, 질 높은 전문학교 인정제도 창설 및 졸업자 체류자격 운용 개선 정책을 제시하였다(내각관방, 2023).

1) 구체적 추진방안

① 일본유학 기회 창출

- 각국 정부주최 유학이벤트 참여,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유학설명회 실시, 대사관·영사관을 포함한 유학상담체제 강화, 졸업생 네트워크 구축, 모범사례 수집 등을 통해 유학생 조기확보와 일본문화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정보 제공, 일본 어교육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현지기능 강화
- 각국 학생의 유학관련 정보수집·분석·모집 전략 입안기능 강화
- 네트워크를 활용한 일본유학 브랜드 유인책 강화, 현지진출 기업과 국제교류기금등과 연계 등을 통한 현지 관계기관(대학, 고교, 정부·공적기관, 민간단체 등)에 대한 모집과 홍보·정보제공을 일체적으로 실시하는 기능 강화
- 대사관·영사관 등에 의한 모범사례 공유
- 대학을 비롯하여 고교와 전문학교 등의 정보, 학생의견, 체류자격 등 유학생 유치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포털인 일본유학정보사이트의 정보력 강화, 온라인을 활용한 일본유학 유인 강화
- 고교단계를 포함한 성적우수자 모집과 온라인 일본어·일본문화 교육, 일본유학시험/일본어능력시험 촉진, 일본기업과의 교류 등 우수 유학생 조기 확보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축

- 일본어전문가 파견, 온라인 교재 확충, 초등교육 단계 일본어학습기회 제공 등 해외 일본어교육 충실화 도모
- 각 대학의 장점을 시각화하기 위한 지표 작성
- 일본문화를 비롯한 일본 각 지역의 다양한 정보 제공
- 현지 세미나 및 의견교환회 실시 등을 통한 방일 교육여행 촉진

② 입학단계의 요건 및 절차의 유연화

- 면접과 입학 절차 등에 대한 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입학생 선발을 촉진하고, 원서접수부터 합격에 이르는 기간을 단축
- 대학의 일본어 예비교육(Foundation course) 충실화
- 유학비자 취득 온라인화 추진
- 은행계좌계설 부담경감 등 지원 충실화

③ 국내대학 교육연구환경 질 제고

- 일본어교육 등 학습 지원, 상담체제 충실화, 유학생 유치의 질적 향상을 위한 등록금 유연화 도모와 유학생 정원관리 탄력화
- 유학생 만족도 파악과 이에 따른 개선책 마련
- 외국학위 수여 교원과 외국어를 사용한 수업 제고
- 대학 내 매니지먼트 개선을 통한 외국인교원 유치 환경 충실화
-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통한 우수 청년연구자 교류·연계 강화
- 민간자금을 활용한 유학생·외국인교원숙소 환경정비 및 임대주택 정비를 통해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도모
- 지자체와 지역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유학생 유치에서 취직에 이르는 유학생 지원 촉진
- 가을학기 입학, 연중입학제도 촉진

④ 적절한 학생 재적관리, 기술유출 방지대학 관리 강화

- 적절한 재적관리를 위한 기준 책정, 학생 재적관리 비적정대학 대학명 공개, 체류자격 부여 정지, 사학지원금 규제, 유학생수 정보공개 강화 등

한편 세 번째 목표인 ‘교육의 국제화’에 대해서는 해외 우수유학생 유치를 위해 영어수업 이수만으로 졸업·수료할 수 있는 학부·대학원과 공동학위 과정 제고 등 대학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중등교육단계에서도 영어로 교과목 수업이 가능한 고교를 전국 150곳으로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으로는 첫째, ‘아시아 고교생 가교프로젝트’ 내실화 및 자매결연, 유학코디네이터 배치 촉진 등을 통한 고교 국제교류 추진, 둘째, 글로벌 인재육성에 기여하는 거점고교 외국인유학생 유치 추진 등을 통한 국제교류환경 조성, 셋째, 일본 이해촉진 교류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해외청년 초청 등 국제교류 촉진, 넷째, 전략적으로 유학생교류를 추진해야할 국가·지역과의 대학간 연계 및 학생교류 추진, 다섯째, COIL(Collaborative Online International Learning : 국제협동온라인학습), VE(Virtual Exchange : 온라인교환학생·학점교류제도) 등 온라인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국제교류 촉진 등 구체적 추진방책을 제시하였다.

① 고등교육단계

- 영어수업만으로 졸업·수료 가능한 학부·대학원 증대(학부 86 → 200, 대학원 276 → 400)
- 해외대학과의 대학간교류협정에 기반한 교류대학 비율 증대(48% → 80%)
- 공동학위 과정 증대(27 → 50), 복수학위 과정 증대(349 → 800)

② 중등교육단계

- 중학·고교단계의 온라인을 활용한 국제교류 활동 학교비율 증대(20% → 100%)
- 자매결연 등을 활용한 대면 국제교류 가능 고교 증대(18% → 50%)
- 영어로 교과목 수업 가능한 고교 증대(50 → 150)
- 고교입시 외국인특별정원 실시 지방자치단체 증대(17 → 47)

III 유학생 취업지원 정책 사례조사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고령화사회로 인해 노동·산업인구의 급감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일본의 유학생 정책에도 영향을 주었다. 기존의 유학생 유치 10만명, 30만명 계획이 유학생의 양적확대에 초점을 두었다면 2023년에 발표한 유학생 유치 40만명 계획은 유학생 질적 관리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일본경제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 외국인 인재의 확보·육성·정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해외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책적 기조는 이미 2009년에 발표된 해외 우수인재 확보에 관한 기본방침 제언인 ‘외국우수인재유치정책의 본격적 전개’를 통해 그 방향성이 제시되었으며, 2017년 ‘미래투자전략 2017’과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17’에서 제시된 각종 시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도입제도로서의 ‘특정기능제도’의 신설, 출입국재류관리청의 신설, ‘외국인재 도입·공생을 위한 종합적 대응책’ 책정, ‘외국인과의 공생사회 실현을 향한 로드맵’ 책정 등 과거 비이민 국가에서 이민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부과학성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발 맞추어 2017년부터 외국인유학생의 일본 국내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추진하고 있는 유학생취업지원정책인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개별대학 사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은 일본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유학생의 국내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과 기업, 경제단체, 지자체, 유학생지원단체 등이 협업·연계하여 외국인유학생의 국내기업 취직지원을 도모하는 추진계획을 지원하는 유학생취직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일본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외국인재의 유치와 정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우수외국인 유치가 정부의 정책기조의 큰 축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¹³⁾

본 사업은 2016년~2021년까지 지역의 지자체와 산업계와의 연계를 중시하는 12개

거점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이 선정되었고, 2020년~2022년까지 3개의 거점대학(도쿄대, 아마나시대, 고베대)이 선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리고 2023년~2025년까지는 3개의 거점대학(에히메대, 도요대, 나가사키대)이 선정되어 본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편 문부과학성은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함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본 인증제도는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① 일본어교육, ② 진로교육, ③ 인턴십을 일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문부과학성이 인증함으로써 외국인유학생의 일본기업 취업을 촉진하는데 있다. 인증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학습장려비 및 우수외국인 인재육성 과정 이수지원 제도의 우선배분 대상이 된다. 2021년부터 인증을 개시하였으며 2026년까지 50개 이상의 대학을 인증할 계획이다.

표 2 | 유학생 취업촉진 교육프로그램 인정제도

도입 배경	일본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가 높은 외국인 인재의 확보·정착이 필요하며 외국인 인재 활용은 정부방침의 큰 축임 ⇒ 외국인유학생의 일본국내 취업률을 50% 향상(일본재흥전략2016)	
선행 과제	일본채용 관행과 일본기업 직장문화 이해 비즈니스 일본어능력 외국인유학생 채용 할당 확대 외국인유학생 취업정보 확산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확대	
개요	외국인유학생 일본어교육, 인턴십을 일체적으로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문부과학성이 인증. 해당 프로그램 수료자가 취업활동 시 각 대학이 발행하는 수료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외국인유학생의 국내취업률 제고	
평가 항목	일본어교육	각 산업분야의 수요와 이수자의 전공분야 등에 입각하여 이수자가 재학중에 습득해야 할 비즈니스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일본어능력수준을 설정하여 명시할 것
	진로교육 (일본기업론 등)	일반적인 기업문화 강습뿐만 아니라 보다 실천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의 진로계획을 확실히 제시할 것 일본기업·조직에서 일하는 방법, 진로강습과 취직활동 지원이 이루어질 것
	인턴십	국내기업에서 2주간 이상 인턴십 실시, 단기 인턴십을 분산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턴십 일수 합계가 2주간 이상일 것

- 13) 예를 들면, 일본정부는 일본경제의 성장전략추진계획인 '일본재흥전략개정'(2016.6)을 통해 외국인유학생의 국내취업률을 현행 30%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유학생 일본어교육, 중장기인턴십 등을 포함한 대학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제시하였고, 이후 '대일직접투자촉진전략'(2021.6), '성장전략 Follow up'(2021.3)을 통해 2025년까지 일본의 고등교육기관을 졸업(수료)한 외국인유학생(국내진학자 제외) 중 일본 국내 취업자 비율을 50%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는 등 유학생의 일본국내 취업률 제고가 유학생 정책의 큰 축으로 설정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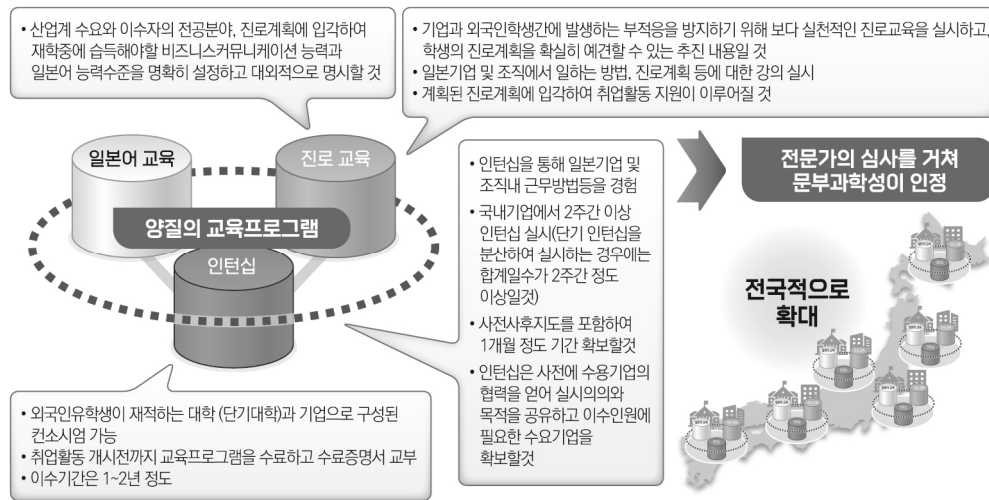


그림 5 |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인정제도 개관도

출처: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교육프로그램 인정제도

2. 군마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일본 관동지방 북서부 군마현 마에바시시에 소재한 군마대학은 도쿄에서 100킬로 정도 떨어진 수도권 주변 지방국립대학이다. 군마대학은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인 소위 ‘글로벌하타라쿠군마’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외국인유학생의 지역정착을 촉진하는 교육커리큘럼을 실시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은 2017년에 문부과학성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5년간 실시되었고 2021년부터는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인정제도에 따른 인증을 받고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가. 프로그램 개요

동 프로그램은 크게 ‘지역대응형’과 ‘산업계대응형’으로 구분하여 인턴십을 통한 유학생 지역정착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지방의 유학생 유치 환경 정비 모델을 구축·보급하여 유학생이 졸업 후에도 일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거점을 형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은 ① 유학생의 지방, 도시, 해외로의 선택지 중에서 지방으로의 정착촉진 모델을 구축하고, ② 지방에 생활기반을 두고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하면서 국내·외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인재를 양성하며,

③ 직장과 지역에서 유학생이 활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졸업 후에도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실적을 거둔다는 세 가지 목표하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프로그램 특징

프로그램은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GLLP : Global leadership programme)이라는 특별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대응형과 산업계대응형 2개 유형으로 구분된 인턴십을 설정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의 10개 고등교육기관, 8개 지자체, 27개 민간단체로 구성된 산학관연합체인 ‘글로벌하타라쿠군마’ 컨소시엄을 모체로 군마현의 역량을 집결하여 유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인 지역대응형은 구체적인 ‘지역’을 상정하여 해당 ‘지역’이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테마를 통해 지역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추진에 유학생을 활용하는 프로젝트형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유형인 산업계대응형은 구체적인 ‘산업계’를 상정하여 해당 ‘산업계’에 특화된 취업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학년별로 스타트업 세미나, 역량강화 세미나, 인턴십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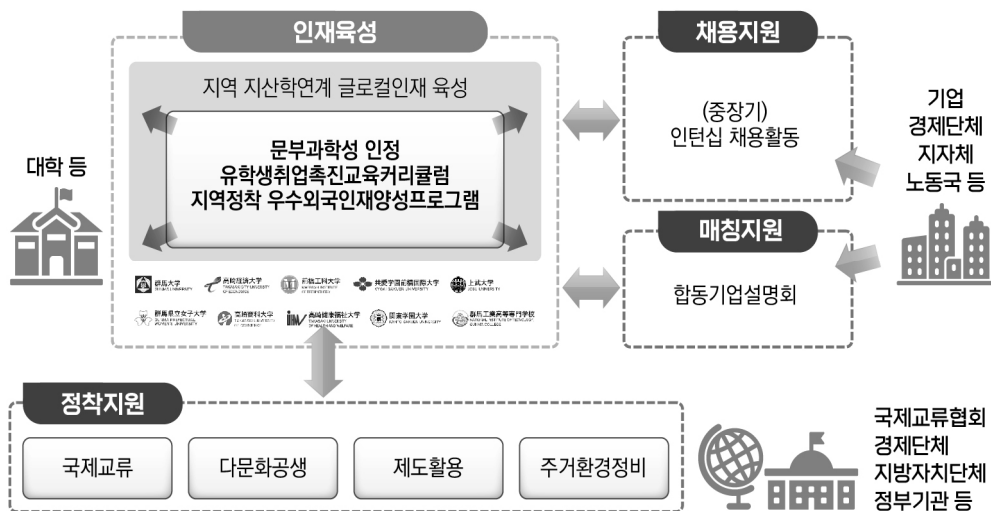


그림 6 | 군마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개관도

출처: 군마대학, “글로벌하타라쿠군마프로젝트” GHKG

다.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GLLP : Global Leadership Programme)

GLLP는 ① 군마현에 애착을 갖고 군마현의 사회·경제·문화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하는데 공헌할 수 있는 인재, ② 군마현을 거점으로 글로벌 시점에서 우수인재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지역혁신의 주체로서 기획력·실천력을 갖춘 인재, ③ 출생환경과 사회적 배경이 다른 사람이 각자의 특성을 살려 함께 공생하는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리더십을 갖춘 3개의 양성해야 할 인재상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상에 입각하여 진로교육, 비즈니스 일본어, 중장기 인턴십으로 구성된 연간 250시간의 교육커리큘럼을 구성하였다. 진로교육 30시간과 비즈니스 일본어 30시간을 수료하지 않으면 중장기 인턴십 과정(160시간)에 참여할 수 없다. GLLP는 학부·대학원생 모두 참여 가능하며, 1년 코스로 진로교육 1과목, 비즈니스 일본어 1과목, 인턴십 2과목 이수가 필수이다. 학생 자신의 흥미, 관심, 전문영역, 취업활동 준비상황에 따른 과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1년마다 단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년도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을 지원한다(ex. 1년차: 취업활동 준비기에 대응하는 이수 -> 2년차: 취업활동 추진기에 대응하는 이수). 3년간 연속으로 참여하여 희망하는 기업에 채용되는 학생도 적지 않다. 아울러 국가시험진로컨설턴트(상근 교원)가 진로카운셀링을 실시하고 학생의 이수과목 선택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 그림 7 |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GLLP : Global Leadership Programme)

출처: 군마대학, “글로벌하타라쿠군마프로젝트” GHKG

라. 프로그램 추진성과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실시전인 2015년도에는 유학생의 16.4%만이 군마현에 취업을 희망하였으나 프로그램 실시 후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취업률 증가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래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모든 커리큘럼을 수강한 학생의 국내 취업률은 96.7%로 높으며, 지역취업률 또한 63.3%로 커리큘럼을 전혀 수강하지 않은 학생에 비해 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프로그램이 유학생의 지역정착과 일본 국내 취업률 제고에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8 | 군마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성과

출처: 군마대학, “글로벌하타라쿠군마프로젝트” GHKG

3. 간사이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일본 오사카시에 위치한 간사이대학은 2017년에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 유학생 취업촉진을 위한 ‘SUCCESS-OSAKA’ 프로젝트를 개발하여 5년간 운영하였다. 사업수료 후에도 동 프로젝트를 기반으로한 ‘유학생 취업촉진 지원 컨소시엄 SUCCESS’를 2021년에 발족하여 문부과학성의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인정을 받은 프로그램인 KU유학생 진로형성 지원프로그램(KU-SUCCESS)을 운영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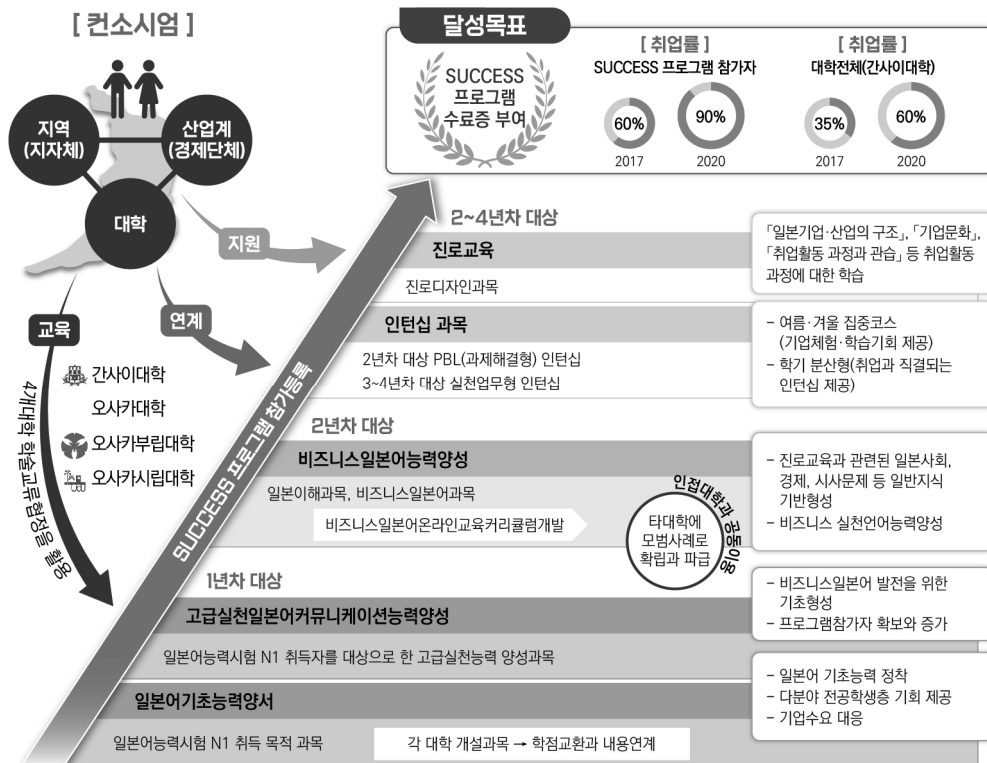
가. 프로그램 개요

2017년부터 출발한 본 사업은(SUCCESS-OSAKA)¹⁴⁾은 문부과학성의 유학생촉진 프로그램 수탁기관으로 간사이대학이 선정되어 지역의 3개 대학(오사카대학, 오사카 시립대학, 오사카부립대학)과 지자체(오사카부, 스이타시)를 비롯하여 지역의 경제단체, 기업, 은행 등 산업계 30개 단체로 구성된 컨소시엄(CARES)을 설립하여 유학생 유치를 촉진하고 졸업 후에도 일본에 취직하여 지역주민과 공생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외국인 인재의 진로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프로그램은 크게 ① 일본어교육 단계, ② 진로교육 단계, ③ 인턴십 단계로 구분되어 단계적인 프로그램 이수과정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 참여 유학생은 1년차에는 일본어 기초운영 능력양성, 고급실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양성, 2년차에는 비즈니스일본어양성, 2~4년차에는 인턴십과 진로교육 과목이 이루어진다.

일본어교육은 일상과 학업에 필요한 일본어 기초운용 능력 양성을 위한 기초 및 고급과정과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일본어 교육이 이루어지며 인턴십 과정은 과제해결형(PBL)과 실무체험·실천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진로교육은 일본기업과 산업의 구조, 기업문화, 취업활동 과정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되며 참가자의 취업률은 2017년 60%에서 2021년에는 90%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사이대학의 경우 프로그램 도입 전 취업률은 35%에서 도입 후 60%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14) SUCCESS는 Specialized University Curriculum for Career Empowerment and Societal Supports의 약칭이다.



| 그림 9 | 간사이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개관도

출처: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추진현황’

나. KU유학생 진로형성 지원프로그램(KU-SUCCESS)

‘SUCCESS-OSAKA’ 프로그램은 2021년 사업종료 후에도 KU-SUCCESS로 개명하여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SUCCESS-OSAKA’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본어능력양성과정’(10P), ‘비즈니스일본어양성과정’(30P), ‘진로교육과정’(30P), ‘인턴십과정’(30P) 각 과정에서 100포인트 이상 취득을 수료요건으로 하는 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였다. 각 과정별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어교육

일본어교육의 학습목표는 비즈니스 일본어능력 고급수준을 양성하는데 있으며 프로그램 참가후 취업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년차 후반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일본어 교육과목을 제공한다.

2) 진로교육(일본기업론 등)

진로교육은 일본기업문화의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일본기업론 등을 비롯하여 유학생의 사회적·직업적 자립을 위해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고,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로디자인 I (일본사회와 기업)	[과목개요·목적] 일본사회에서 일하기 위한 기초를 이해하고, 진로디자인의 기초력 강화(2년차 이수) [도달목표] ① 지식·기능 관점: 진로디자인에 관한 기초적 사항 이해 ②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관점: 이해한 기초사항을 알기 쉽게 문장으로 표현 기초사항을 알기 쉽게 문장으로 표현 ③ 주체적인 태도의 관점: 이해한 기초사항에 입각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상
진로디자인 II (일본에서의 취업과 근로 방법)	[과목개요·목적] 산업·취직·기업에 대한 이해를 심화, 정보수집, 활용능력을 제고하고 수강생의 직업관·세계관을 학습(2년차 이수) [도달목표] ① 지식·기능 관점: 직업과 산업, 노동세계에 관한 기초적 사항 이해 ②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관점: 이해한 기초사항을 알기 쉽게 문장으로 표현 ③ 주체적인 태도의 관점: 이해한 기초사항에 입각하여 자신의 진로에 대해 구상
진로디자인 III (일본 사회에서 일하기)	[과목개요·목적] 미래의 취업활동을 대비해 직업선택과 적성에 입각한 진로디자인 완성이 목적(3년차 이수) [도달목표] ① 지식·기능 관점: 진로계획에 필요한 적성파악과 타인과의 협동 실현 ②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관점: 체득한 능력과 경험을 알기 쉽게 문장으로 표현, 그룹대상 구어표현 가능 ③ 주체적인 태도의 관점: 자신의 진로계획에 대해 주체적인 사고 가능
일본사회	[과목개요·목적] 인구감소와 경제축소 과제에 직면한 일본이 지역사회 현실에 대해서 사례조사를 통해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과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사회적 비즈니스' 관점에서 도입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형성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비즈니스' 과제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형성 [도달목표] ① 지식·기능 관점: 사회 과제를 사업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사회적 비즈니스' 구성에 필요한 기술 습득 ② 사고력·판단력·표현력 등의 능력 관점: 일본 지역사회의 각종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사회적 비즈니스' 특징을 살린 플랜을 널리 전달하기 위한 표현 연구 ③ 주체적인 태도의 관점: 계획 실현에 필요한 자원 획득방법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과목개요·목적] 일본국내 취업과 사회인으로서 일본어비즈니스를 필요로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대일본의 다양한 비즈니스 업계의 일본어와 그 구조 및 필요한 어휘와 표현에 대해 학습. 기업인 초청강연, 실제 비즈니스 현장 견학 등 수업 외 활동 전개 [도달목표] ① 현대일본의 각종 직종·업계에 대한 이해 ② 사회인으로서 사용해야 할 비즈니스 일본어 기본 습득 ③ 주체적으로 활동·조사·학습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기술 습득 ④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 인물과의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표현방법 학습
------	---

3) 인턴십

KU-SUCCESS의 인턴십은 과제해결형 PBL인턴십, 실무체험·실천형 인턴십, 하이브리드형 인턴십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과정은 10일 이상의 참여를 전제로 한다.

PBL(과제해결)형 인턴십	▼ 유학생의 기업연구 촉진을 목적으로 3~4년차에 취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본격적인 인턴십 준비과정 ▼ 연수중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담당 강사와의 면담 필수
실무체험·실천형 인턴십	▼ 취업활동 중 '실천업무형' 인턴십에 따른 취업체험을 통한 기업이해와 외국인 고용의사가 있는 기업과의 교류과정 ▼ 연수중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담당 강사와의 면담 필수
하이브리드형 인턴십	▼ '하이브리드형' 인턴십에 의한 기업체험, 이해 심화 ▼ 3년차 3월 이후 외국인 고용의사가 있는 기업과의 교류과정 ▼ 연수중에 정기적인 보고서 제출과 담당 강사와의 면담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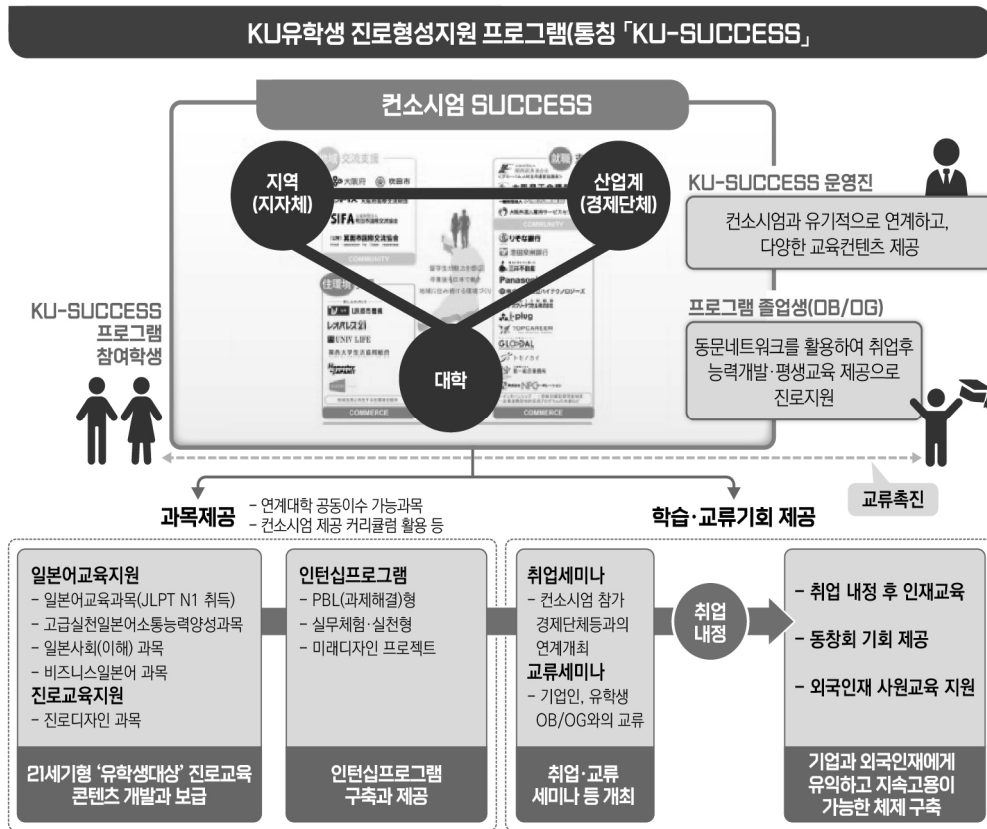


그림 10 | KU 유학생 진로형성 지원프로그램(KU-SUCCESS)

출처: 간사이대학 국제부 홈페이지

4. 야마가타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일본 북동부 야마가타현 야마가타시에 소재한 야마가타대학은 학생수 8,600명, 외국인유학생수 270명이 재학중인 국립대학이다. 2017년에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EPPY(Employment Promotion Program in Yamagata) 프로그램을 추진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야마가타대학과 도호쿠공익문과대학, 지역기업, 지자체 등이 연계된 컨소시엄인 '야마가타글로벌인재육성'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유학생취직 및 지역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가. 프로그램 개요

EPPY는 유학생과 지역기업간의 상호교류와 유학생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에 초점을 둔 모델을 추진하였다. 야마가타 모델은 첫째, 기업인에 의한 유학생 교육을 통해 유학생 교육부터 진로디자인 구축을 지원하고 유학생의 취업전략을 명확히 제시, 둘째, 유학생과 기업간의 상호교류를 통해 취업동기를 부여하고, 셋째, 인턴십 교육, 졸업 후 지원, 비자취득 지원 등 유학생 지역정착을 위한 지원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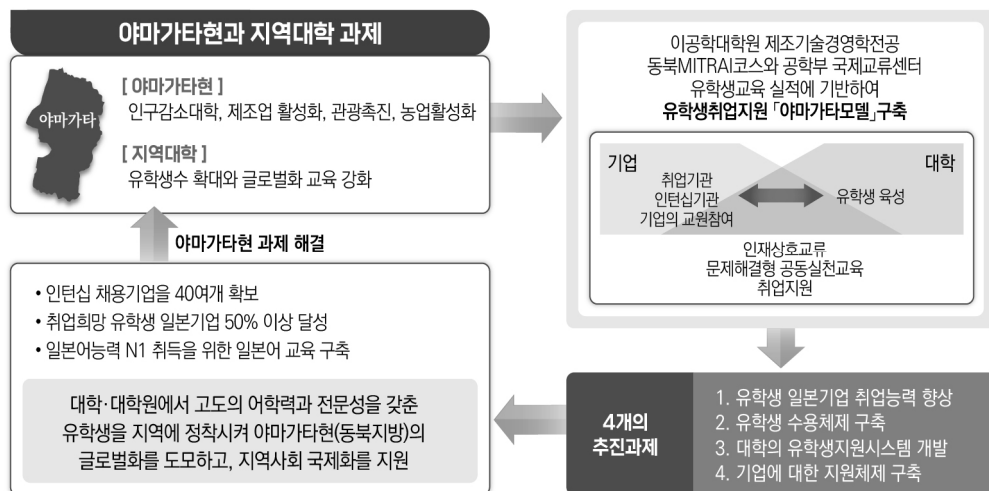


그림 11 | 야마가타대학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개요

출처: 문부과학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 추진현황'

EPPY는 인턴십 기업을 40개 이상 확보, 일본기업 취업희망 유학생의 50% 이상 취업, 일본어교육 프로그램 구축을 통한 일본어능력 1급 달성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일본어교육, 진로교육, 취업관련연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2년간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연간 일정에 따른 각종강의, 이벤트, 커리큘럼을 통해 일본문화와 일본인의 사고방식, 기업문화 등을 체험하게 된다. 프로그램 참여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월 3만엔, 1년), 문부과학성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금(월 4만 8천엔, 1년), 야마가타현 자비유학생장학금(2만엔, 1년)을 지원하고 있다.

| 표 3 | EPPY 프로그램 연간 일정

4월	수강생 모집설명회	10월	후기수업 개시
5월	전기수업 개시	11월	기업설명회, 세미나
6월	협력기업설명회	12월	지역기업 순방, 취업내정자를 위한 수업, 취업세미나 합숙, 일본어능력시험
7월	일본어능력시험	1월	취업내정자 체류자격 변경 지원,
8월	인턴십 실시, 지역기업 순방	2월	개별기업 방문
9월	지역기업 순방	3월	유학생 지역기업합동 설명회, 프로그램 수여식, 졸업생 교류회

나. 프로그램 성과

2018년도 수료생 25명 중 지역기업에 9명이, 지역외 기업에 9명이 취업을 하였고, 2019년도에는 수료생 18명 중 지역기업에 6명, 지역외 8명이 취업을 하였다. 2020년도에는 수료생 18명 중 지역내에 6명, 지역외 7명이 취업을 하였다. 2021년에는 수료생 8명 중 지역내에 3명, 지역외에 2명이 취업을 하였다.

IV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시사점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은 아래 [그림12]와 같이 크게 입학전, 재학중, 졸업후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입학전 단계에서 실시되는 시책 중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아시아고교생 교류프로젝트'(문부과학성)를 들 수 있다. 동 프로그램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일본어를 배우는 우수한 고등학생을 6개월~10개월 정도 일본의 고등학교에 초청하여 전국 각지에서 홈스테이와 기숙사 생활을 통해 일본학생들과 교류하게 함으로써 아시아 국가간의 교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그 외 외무성이 추진하는 현지 유학박람회 개최 및 재외공관을 통한 현지 유학상담, 일본 유학정보 제공 사이트(Study Japan) 운영, 해외 일본어교육 보급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추진되고 있다.

재학단계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지원제도, 일본학생 지원기구 운영비교부금을 재원으로 한 유학생 학자금 지원, 유학생기숙사 운영, 슈퍼글로벌대

학창성지원사업¹⁵⁾을 통한 국제화 역량강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해외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위수여 등을 통한 선도적인 교류를 전개하는 대학에 대한 지원사업인 ‘대학 세계경쟁력 강화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졸업후 단계에서는 귀국유학생회 활동지원(외무성), 우수외국인 활약촉진 플랫폼 구축, 지역기업 취직·정착촉진을 위한 산학컨소시엄 설립 등 우수외국인 인재활약 추진사업(경제산업성),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유학생 취업지원(재학중 단계에서 실시), 유학생을 포함한 우수 외국인재 취업지원 거점인 외국인고용서비스센터 운영(후생노동성), 대학과 후생노동성 산하 노동국 공공직업안정소(Hello work)와의 협정체결을 통한 취업지원, 귀국유학생회 조직화 활동지원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림 12 |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개관도

출처: 내각관방(2023) 제6회 교육미래창조회의 배포자료. 2023.4.27.

- 15) 세계 우수대학과의 교류·연계를 실현하고 강화하기 위한 사업, 인사·교무시스템 개혁 등 체질 개선, 학생의 글로벌 대응력 육성을 위한 체제강화 등 철저한 국제화를 추진하는 대학을 중점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최대 10년간 지원(2014년~2023년). 세계랭킹 100위를 목표로 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선두형(TOP)형(13개 대학)과 일본사회의 글로벌화를 견인하는 글로벌견인형(24개 대학)을 지원함

일본의 유학생 정책은 10만 유치 계획과 30만명 유치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0만명 계획과 30만명 계획이 양적확대에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최근 추진하고 있는 40만명 계획은 외국 우수인재의 확보·정착과 재적관리 강화¹⁶⁾ 등 질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수인재를 위한 유학생 정책은 이미 기존의 30만명 계획에서 그 방향성과 추진전략이 제시되었다. 40만명 계획은 유학생 우수인재의 확보·정착이 일본 유학생 정책의 큰 축이자 핵심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이 주는 시사점으로 첫째, 유학생 유치에 대한 해외홍보·모집단계부터 재학, 졸업, 취업, 귀국 후 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대학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유기적 연계 정책이 실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은 문부와 학성을 비롯하여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 주요 정부 부처간 협업을 통한 정책적 조율을 통해 유학생 유치부터 재학단계, 졸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유기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우수 유학생의 확보, 국내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내 외국인유학생의 졸업후 진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취업이 8%, 국내진학 11%, 본국 귀국이 29%로 나타났다(KEDI, 2022). 반면 일본은 외국인유학생의 44.3%가 일본 국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JASSO, 2022).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학생 국내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는 취업정보 부족 및 체류비자 활동 제한 등 국내취업·정주를 위한 프로그램 및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례와 같이 유학생 취업촉진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유학생 채용 희망 기업과 유학생간의 연계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학생지원기구(이하 JASSO)와 같이 유학생의 장학금 지급과 원조, 일본 유학 정보 제공, 일본어 교육센터 운영, 유학생 교류사업 등 유학생 대상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전담기관(독립행정법인) 신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며, 유학생 지원업무 등 유학생 제도의 총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수행할 JASSO와 같은 전담

16) 외국인유학생의 적절한 유치 및 재적관리 철저(外国人留學生の適切な受け入れ及び在籍管理の徹底などについて/문부과학성, 2024. 4)

기관도 없는 상황이다. JASSO는 2004년 4월 국립대학 법인화 시행과 함께 신설된 학생지원기구이다. 종전에 일본 학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업무를 수행한 일본육영회, 유학생 관련 국제교류사업을 수행한 일본국제교육협회, 문부과학성과 각 국립대학이 수행하던 유학생 장학금 지급업무 등 각 기관에서 분리되어 시행했던 유학생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외국인학생에 대한 지원기구로 설립되었다. JASSO의 유학생 관련 주요 사업은 ① 유학생 장학금지원(자비 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지원사업, 유학생 교류프로그램 지원사업, 단기유학 추진사업), ② 유학생 교류사업(유학생 숙소설치 및 운영, 일본유학시험, 일본어 예비교육, 유학생교류추진사업), ③ 유학생생활지원사업(유학정보 수집제공, 학생생활지원관련연수 및 정보 등 수집·제공, 유학생 면학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024년 5천 2백만명에서 2072년 3천 6백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하고, 생산연령인구도 2024년 70.2%에서 2072년 45.8%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 제조업과 수출산업 비중이 높은 나라이므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는 향후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국내 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울산과 거제 등 산업도시에서 지난 10년간 약 25만 명의 인구가 순유출됐다고 한다(한국경제신문, 2025.1.8.). 문제는 산업도시를 떠난 인구의 대다수가 20~39세의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조선업 등 인력부족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인재양성과 취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업의 경우 청년층 이탈로 인한 인력의 대부분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는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지역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유학생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자체 또한 라이즈(RISE)체계를 통해 대학, 기업 등과 협업하여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교육부, 2024.3.25.). 예를 들면, 경상북도는 2027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도-대학-지역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업체를 구성하여 이공계 석·박사 해외인재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고, 충청북도는 2027년까지 유학생 1만명 유치와 유학생 유치 본부를 신설하고 유학생 특화 일자리 매칭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부산광역시 2030년까지 유학생 3만명을 유치하고 유학생 지원센터 운영과 유학생 취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유학생 유치 확대와 지역 산업수요에 적합한 외국인 인재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정착하여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국내 외국인 체류자는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상당수는 정주가 아닌 취업을 위한 한시 입국자로서 소득의 상당부분을 본국으로 보낸다. 최근 조선산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거제의 지역경제가 불황인 이유는 정주의지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출산장려책 못지 않게 유학생 등 우수 외국인 인재가 국내에 취업·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호주와 같은 이민국가로의 전환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일본문헌

- 간사이대학(2022). 유학생취업촉진교육프로그램(KU-SUCCESS) 사업보고서(2022년)
- 군마대학. 유학생취직촉진프로그램(EPPY) 사업보고서 각 년도(2018~2021).
- 권봉기(2016). 일본의 노동력 인구 감소와 외국인유학생 유치정책. 히로시마문화학원대학네트워크 사회연구센터 연구연보. Vol. 12, No.1 2016.
- 내각관방(2023). “미래를 창조하는 청년 유학촉진 이니셔티브”, 제6회 교육미래창조회의 배포자료. 2023.4.27.
- 내각관방(2016). 일본재흥전략(2016.6).
- 내각부(2023). 해외 인재자금을 유입하기 위한 액션플랜. 2023.5.22.
- 다케다 사토코(2006). 일본의 유학생정책의 역사적 추이, 일본대학대학원종합사회정보연구과 기요, No.7, 77-88.
- 데라쿠라 겐이치(2009). 일본의 유학생 유치정책: “유학생 30만명 계획”의 책정.
- 문부과학성(2009). 일본의 유학제도 개요.
- 문부과학성(2013). 외국인유학생 유치 추진 현황.
- 문부과학성(2013). “세계의 성장을 반영한 외국인 유치 전략”, 전략적인 유학생 교류 추진에 관한 검토회.
- 문부과학성(2024). 외국인유학생의 적절한 유치 및 재적관리 철저(2024.4)
- 문부과학성, 외무성, 법무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2008). 유학생 30만명 계획 골자
- 사토유리코(2021). 유학생 30만명 계획의 성과와 과제. 일본평가연구. 제21권제2호
- 아시아게이트웨이 전략회의(2007). 아시아게이트웨이 구상.
- 우수인재유치추진협의회(2009). 외국우수인재유치정책의 본격적 전개 보고서
- 일본경제인연합회(2004). “외국인 유치문제에 관한 제언.
- 일본학생지원기구(2022). 외국인유학생 진로현황 조사결과.
- 중앙교육심의회(2003). 새로운 유학생 정책의 전개에 대해서(답신)
- 총무성(2019). 우수외국인재 유치에 관한 정책평가서.
- 츠카다 아야코, 오타 히로시(2018). 일한 유학생 10만명 달성과 유학생 정책. 비교교육학연구, 제57호, 89-110

2. 국내문헌

- 관계부처합동(2023).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보도자료(2023.8.)
- 교육부(2024). 유학생 유치에서 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치 전략 마련에 박차. 보도자료(2024.3.25.)
- 이창원(2021). 지역 중심 유학-취업연계 방안 모색. 이슈브리프, 2021-22. 이민정책연구원
- 이혜진, 마츠시타 나미코, 야마구치 루이(2023). 일본의 이민정책 전환: 이민자에게 ‘선택받는 나라’라는 프레임의 형성과정에 대한 분석. 이민정책연구원.
- 최서리(2024). 해외 주요국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 영주이민의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한 제언. 이슈브리프, 2024-03. 이민정책연구원.
- 통계청(2024).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보도자료(2024.9.23.)
- 한국경제신문(2025.1.8.). “산업도시가 무너진다...10년새 ‘25만 인구’ 빠져나가”

3. 참고기관 홈페이지

- 간사이대학(유학생취직촉진프로그램) : <https://www.success1.jp/>
- 군마대학(유학생취직촉진프로그램) : <https://gllp.hess.gunma-u.ac.jp/>
- 내각관방(성장전략) : <https://www.cas.go.jp/jp/seisaku/seicho/kettei.html>
- 문부과학성(유학생취직촉진프로그램) : https://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ku/1394574.htm
- 문부과학성(유학생10만명계획) : https://www.mext.go.jp/b_menu/shingi/chukyo/chukyo4/007/gijiroku/030101/2-1.htm
- 문부과학성(유학생 30만명계획) : https://www.mext.go.jp/a_menu/koutou/ryugaku/1420758.htm
- 야마가타대학(유학생취직촉진프로그램) : <https://pagty.yz.yamagata-u.ac.jp/>
- 일본학생지원기구(유학생지원) : https://www.jasso.go.jp/ryugaku/study_j/index.html



3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

오예진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챗GPT 사용에 대한 미국 대학의 사례 분석

오예진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몇 년 동안 세상에 소개된 인공지능(AI)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분야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쳤다. 2022년 11월 30일 OpenAI가 공개한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생성형·대화형 인공지능으로써, 등장한지 얼마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챗GPT가 공개되기 전까지 인공지능 관련 분야는 일반인들에게 접근성이 크지 않았던 부분이다. 챗GPT가 나타나기 전에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간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코딩”을 통해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챗GPT는 그러한 코딩 조작 필요 없이 우리가 온라인 검색 엔진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듯 대화형 방식을 통해 필요한 답을 얻어낼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접근 장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챗GPT는 사회 여러 부분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오고 있으나,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챗GPT의 등장은 기존에 행해지던 전통적인 교수학습 방식의 변화를 야기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챗GPT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용자가 물어본 것에 대한 대답을 이용

자가 원하고 요구한 방식으로 알려준다. 이는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서 대부분의 수업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챗GPT가 등장한 이후 국내 대학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챗GPT는 대화형 텍스트 작성과 대부분의 과제 지원이 가능하므로 학생들이 무분별한 표절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학들은 이에 이러한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챗GPT 등의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하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대학들은 학생들의 챗GPT 사용을 금지하는 대신 윤리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하였다. 국내외 대학에서는 과제 제출 시 AI이용 활용 여부를 밝히고,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학생들이 무작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인공지능의 분별 있는 사용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챗GPT가 2022년 처음 세상에 공개된 뒤 지속적으로 그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교육계에서의 사용량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챗GPT의 긍정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학생들의 학습 목표와 수준에 맞는 평가를 교수자가 설계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

둘째, 첫 번째 맥락의 확장선상에서 볼 때, 학생 수준에 맞는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 및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셋째, 학생들의 질문과 과제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반면, 챗GPT는 학생 스스로가 답에 대한 질문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 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기에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및 창의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들도 많다. 또한 챗GPT를 통해 제공된 정보가 사실과 다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학습 경험과 의사 결정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은 OpenAI가 개발한 챗GPT 사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학의 입장에서 챗GPT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교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대학을 대상으로 챗GPT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인식과 답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4년 131개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총장의 83%가 생성형 AI가 대학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연합뉴스, 2024).

생성형 AI가 처음 시작된 미국은 지역별, 대학별로 챗GPT 사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챗GPT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고 이러한 생성형 AI가 교육계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초 미국의 교육언론 매체가 대학 총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총장의 50%가 발전하고 있는 AI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6%의 총장만이 염려스럽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Inside Higher Ed, 2024).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학령인구 수 급감에 따라 대학은 그 생존을 위해 교수·학습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현 디지털 대변환 시기에 맞춰 빠르게 바꾸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챗GPT를 포함한 AI의 긍정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그것의 활용적 가치의 중요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챗GPT의 시작이 이루어진 미국에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미국 대학의 챗GPT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챗GP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미국 대학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AI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을 파악하고, 챗GPT를 포함한 AI를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미국 대학 중 챗GPT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챗GPT를 대학 내에서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학 두 곳을 선택하여 그 대학들의 챗GPT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그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챗GPT의 실제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 대학들의 챗GPT사용 관련 최신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주제를 다룬 매스컴 자료도 함께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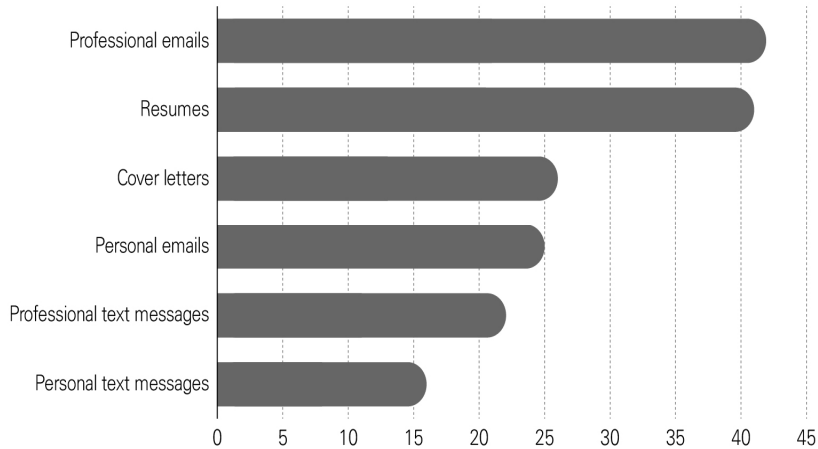
II 챗GPT 현황

1. 챗GPT에 대한 미국의 인식

2022년 11월 30일 미국의 인공지능 회사인 OpenAI는 사람이 대화형으로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화형 AI인 챗GPT를 공개하였다. 누구나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대중적인 접근성을 지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작된 챗GPT는 빠르게 업그레이드를 거듭하며 교육계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2023년 구인구직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인 '알바천국'이 대학생 544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76.5%가 학업 및 취업 부분에서 챗GPT 등의 인공지능의 활용 확산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AI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른 이유로는 학업 및 취업에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줄일 수 있고, 학업 및 취업에 필요한 정보습득의 창구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이유와 리포트 및 과제 등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고, 학습 보조 도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답한 대학생은 전체의 23.5%로써 그 이유로는 AI를 활용할 경우 공정한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챗GPT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가 얻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다(인공지능

신문, 2023). 챗GPT 사용 자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및 부정행위에 대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챗GPT를 사용하는 대학생의 대부분은 활용적 가치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그림 1 | 대학생들의 챗GPT 활용 현황

출처: Intelligent(2024). intelligent.com/4-in-10-college-students-are-using-chatgpt-on-assignments/

2024년 2월, 미국의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국 4년제 대학생 58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37%가 현재 챗GPT를 사용하고 있으며 단 5%의 대학생만이 챗GPT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챗GPT를 사용하는 대학생들의 경우 작문과제 작성 시 사용한다는 응답이 69%에 달했으며, 17%의 학생들은 항상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24%의 학생들은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챗GPT를 사용하는 학생들 중 86%는 교수들이 AI 기술을 사용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한 72%의 응답자들은 교수들이 챗GPT를 작문과제 작성 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고, 응답자 4명 중 3명은 챗GPT사용이 부정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 교수자는 “챗GPT를 학생들이 본인의 보고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AI를 이용해 보고서의 개요 및 서론을 명확히 작성하고 이미 나온 연구들의 결

과를 지지하거나 반박하는 기사를 찾는데 챗GPT를 이용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설문에서 챗GPT를 사용하는 대학생의 60%는 본인들이 재학 중인 대학에 챗GPT를 과제물 작성에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교내 규정들이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26%의 학생들은 재학 중인 대학에 이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Intelligent, 2024).

2. AI 관련 선행 연구 분석

생성형 인공지능(GenAI)의 발전은 교육경험을 확장시켜줌으로써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는 하지만 학문적 정직성(Academic Integrity)에 대해서 동시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교육자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 및 실습 등에 흡수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고 있기도 하다. 챗GPT 등의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접근성 및 인식 수준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교육계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큰 부작용 없이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Wang, Dang, Wu, Mac(2024)은 미국의 상위 100개 대학들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수학습 상황에서 어떠한 학사 정책 및 지침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들이 학문적인 맥락 안에서 생성형 AI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받아들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결과 대다수의 대학들은 생성형 AI를 받아들이고 있었으나 그만큼 생성형 AI사용에 대한 염려의 목소리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의 상위 100개 대학들이 대학의 관련 정책 및 관리 방식을 바탕으로 생성형 AI의 대학교육의 통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으며, 챗GPT 등의 생성형 AI를 교수과정에서 사용할 때 어떠한 지침 및 안내를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 순위와 전공이 고등교육에서의 생성형 AI사용에 대한 인식의 흐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보았다.

2024년 US News Best Rankings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100개(실제 조사 대학은 104개) 대학을 조사 대상 대학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대학들의 생성형 AI 관련 정책, 매스컴기사, 블로그 기사 등을 분석한 이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학들 중 단 한 대학도 생성형 AI 관련 도구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대학은 없었으며 이 결과는 모든 대학들이 생성형 AI에 대해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54.8%는 생성형 AI사용에 있어 개별 교수 또는 강사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었으며, 전체 대학의 9.6%는 생성형 AI사용관련 정책(출처인용 언급 등)을 바탕으로 조건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7%의 대학들은 아직 관련 정책을 결정하지 못했거나 명확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러한 응답은 고등교육의 맥락에 생성형 AI를 통합하여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대학들의 입장이 다양하고 유연한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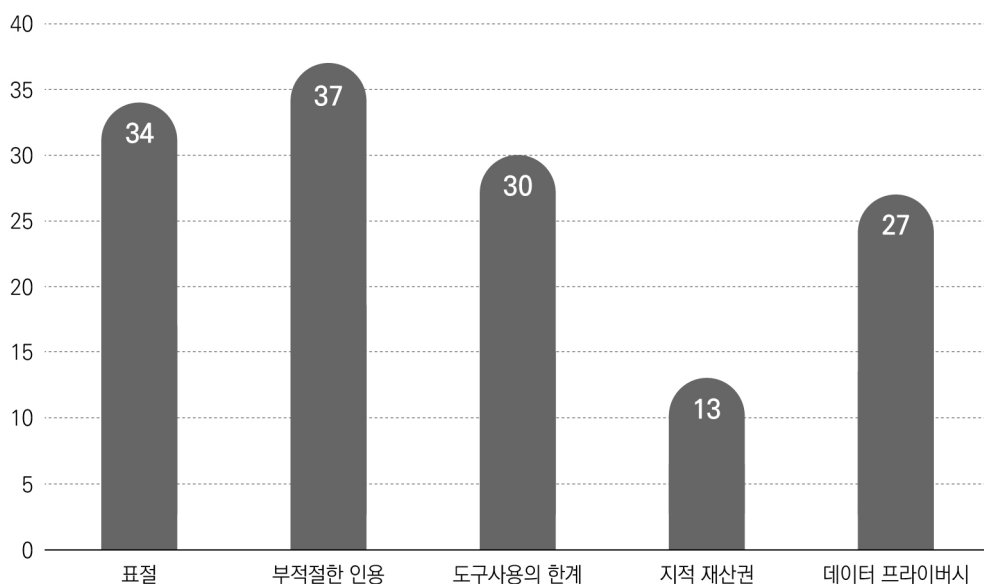
관련정책을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나,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대학의 경우 생성형 AI에 대해 무관심 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많은 대학들은 챗GPT 사용법 및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하여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생성형 AI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소개하고 생성형 AI를 수업에 도입할 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안내도 함께 하는 대학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 사용을 교수자가 결정하게 하는 대학은 전체 조사 대상 대학의 47.4%로 기본적으로 생성형 AI 사용 금지 입장을 갖고 있으며 교수자가 허용할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만약, 교수자가 생성형 AI사용에 대한 정책이나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학생들이 과제 작성 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엔 표절로 간주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은 조사 대상 대학의 절반 남짓은 생성형 AI가 학문적 성실성(Academic Integrity)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응답 대학의 50.9%는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더 개방적이면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자에게 자율적으로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학들의 입장은 생성형 AI 사용에 있어 더 균형 잡힌, 실용적인 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 및 학문분야의 생성형 AI 사용 필요성에 대한 대학들의 고민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전공 및 학과에 따라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것이 교수 및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면, 미국의 상위 100개 대학들의 생성형 AI의 활용 및 접근 방식은 대체적으로 생성형 AI의 사용에 대해 개방적이지만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수자가 학과 특성 및 다양한 교수학습상황 등에 따라 챗GPT등의 사용에 대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



| 그림 2 | 대학의 생성형 AI사용 관련 교내 정책의 목적 및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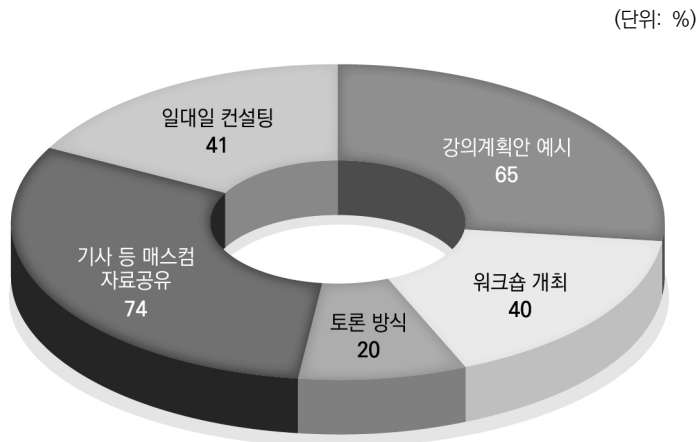
출처: Intelligent.(2024). intelligent.com/4-in-10-college-students-are-using-chatgpt-on-assignments/

[그림2]는 미국 대학의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된 교내 정책의 목적 및 초점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대학들이 생성형 AI 사용과 관련하여 걱정하는 부분은 부적절한 인용에 대한 문제, 표절문제, 그리고 AI도구 사용의 한계에 대한 문제였으며, 상대적으로 지적 재산권 문제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 등 전문적인 연구 보고서 작성 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대학들 중 67.4%는 생성형 AI사용과 관련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교수들 및 강사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7.8%정도의 대학들만이 학생들을 위한 정책 및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징인이

아닌 대학 전체를 위한 자료나 정책적 가이드라인은 전체 대학의 14.7%정도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 대학의 62.5% 대학들은 교수자와 그 밖의 교육자들의 생성형 AI 사용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강의계획서 양식 및 예시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교의 경우에는 AI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의 계획서, 중간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강의 계획서, 그리고 적극적 또는 자유롭게 생성형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의계획서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강의 계획서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교수자들이 챗GPT 및 다양한 생성형 AI 사용과 오용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및 규정 등을 학생들이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강의 계획서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림3]은 미국대학들이 어떤 방식으로 챗GPT 사용과 관련하여 교수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림 3 | 챗GPT 사용 관련 자료 제공 방식

출처: Intelligent.(2024). intelligent.com/4-in-10-college-students-are-using-chatgpt-on-assignments/

미국 대학들의 74%는 챗GPT와 관련된 기사 등 매스컴 자료들을 교내에 공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대학들의 65%는 강의계획안 예시를 교수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수자가 교육 환경과 수업 방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절하게 챗GPT를 학생들에게 사용하는 것과 관련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응답

대학의 40%는 챗GPT 관련 워크숍을 열어 교수자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41%의 대학들은 일대일 방식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낮은 비율로 대학의 20% 정도가 관련 주제를 갖고 토론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현재 미국의 대학들의 챗GPT사용과 관련된 정책이나 가이드라인 등이 학생들보다는 교수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미국의 상위 100개 대학(조사대상 104개)을 대상으로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사용에 대한 대학들의 정책 및 자료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및 내용을 살펴본 이 연구결과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대학들은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사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만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이며 교수자에게 선택적으로 그것의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의 중심에는 표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와, 챗GPT를 사용할 때 교육 학습 상황에서의 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다수의 대학들(54.8%)은 교수자에게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사용과 관련하여 자신만의 정책과 지침을 만들고 개발하도록 권장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양한 학문분야별 특수한 교육적 맥락과 사회적 필요를 인식하고 존중하는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들이 다양한 방식의 강의계획안 예시를 제공하고 관련 워크숍 및 토론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대일 컨설팅까지 진행한다는 것은 미국 대학이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인식하고 대하는 방식이 매우 적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유네스코에서는 2024년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활용에 대한 ‘퀵 스타트 가이드’(Quick Start Guide)를 발표했다. 이 가이드에는 고등교육 기관이 생성형 AI를 사용할 때 표절 및 데이터 프라이버시 등의 윤리적 문제와 교육적 한계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각 대학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자체적인 관련 정책과 지침을 개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세상에 공개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신기술에 속하지만 그 파급효과는 이미 상당하며 고등교육의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적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챗GPT는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주의와 가이드라인 숙지를 바탕으로 활용된다면 효율적인 학습을 이끌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의 활용을 위해서는 교수자와 학생들 모두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책임감 있고 효과적으로 학습에 긍정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나 기관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 차원에서의 AI통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보다 활발하게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챗GPT가 고등교육에 미친 영향은 즉각적이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챗GPT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들이 정리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는 발간한 ‘퀵 스타트 가이드’를 통해 챗GPT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 <표1>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챗GPT를 대학에서 학생들이 사용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학문적인 정직성 측면 부분, 챗GPT의 사용과 관련된 그 어떤 규제도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 사용자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프라이버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챗GPT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을 어디까지 신뢰하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는 부분의 문제, 그리고 한 쪽으로 편향된 현실을 AI가 반영하거나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 전 세계가 챗GPT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접근성 측면의 문제, 그리고 민간 기업이 개발한, 현재는 무료라고 보기 힘든 챗GPT가 교육적, 순수한 목적이 아닌 상업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표 1 | 챗GPT사용 관련 문제점 (윤리적 이슈)

문제점	주요 내용
학문적 정직성	챗GPT를 사용하여 에세이나 시험답안을 작성할 경우 표절 및 부정행위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 특히 글쓰기가 핵심인 전공 등에서는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기존의 표절을 탐지할 수 있는 도구 등이 챗GPT로 작성된 글을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이러한 이유에서 일부 대학은 교실 내에서 시험을 보거나 비문서 기반 과제를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하기도 함
규제의 부재	현재 챗GPT는 아무런 규제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유네스코의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권고안에서 다루지고 있음. 챗GPT의 빠른 발전 속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을 야기하기도 했으며, 학계와 민간 부분의 1,000명 이상의 지도자들이 강력한 AI 시스템 훈련 개발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기도 했음
프라이버시 우려	2023년 4월, 이탈리아는 프라이버시 문제로 인해 챗GPT를 차단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음. 이탈리아 데이터 보호 당국은 사용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는 도구의 한계로 인해 미성년자가 연령에 부적절한 응답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윤리적 문제도 제기함. 이 사례는 AI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누가 이를 수집하며,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음

문제점	주요 내용
인지적 편향	챗GPT는 윤리적 원칙에 의해 관리되지 않으며, 옳고 그름 그리고 사실과 허구를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이 도구는 인터넷에서 처리한 데이터베이스와 텍스트에서 정보를 수집할 뿐이기 때문에, 그 정보에 포함된 인지적 편향도 학습할 수 있음. 그러므로 챗GPT가 제공하는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정보의 출처와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임
성별 및 다양성 문제	성별 및 다양성 등에 대한 우려는 챗GPT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AI와 관련된 공통된 문제임. AI와 관련된 분야 및 연구 개발에서 여성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생성형 AI가 차별적이거나 성별 및 기타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콘텐츠를 생성하고 확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접근성	챗GPT의 접근성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는 정부규제 및 검열 또는 기타 인터넷 제한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고, 또 다른 문제는 인터넷 이용 가능성, 비용 및 속도의 불균형 분포와 관련된 더 광범위한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라고 할 수 있음. AI와 관련된 교육 및 연구 개발 또한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나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낮음
상업화	챗GPT는 민간 기업인 OpenAI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이 회사는 챗GPT의 무료버전을 유지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더 높은 신뢰성과 새로운 버전에 대한 빠른 접근을 제공하는 구독 옵션이 있는 버전을 출시하였음. 민간 기업이 고등교육에 관여하는 것이 새로운 일은 아니지만,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 운영하는 AI 및 기타 도구를 선택할 경우 신중한 고려와 규제가 필요함. 이러한 도구는 오픈 소스가 아닐 수 있어서 상업적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가능성이 있음

출처: Unesco.(2024).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Quick Start Guide*.
<http://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146>

유네스코의 퀵 가이드에서는 챗GPT사용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측면을 인지한 채 윤리적 사용 및 개인과 대학의 역량 강화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챗GPT를 활용하면 대학은 학생들에게 보다 개별화되고 관련성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네스코 가이드에 따르면, 일부 국가와 고등교육 기관에서는 챗GPT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차단했지만, 대부분의 정부 및 고등교육기관은 챗GPT와 같은 AI가 더욱 널리 퍼지고 접근성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해진 현재의 세계적인 상황에 적응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챗GPT는 윤리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와 창의성이 요구될 수 있다. 유네스코 가이드에서 안내하고 있는 챗GPT의 바람직한 사용 방법은 <표 2>와 같다.

| 표 2 | 대학에서의 챗GPT 사용 가이드

키워드	주요 내용
챗GPT 영향에 대한 논의	대학의 교직원, 학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챗GPT가 고등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시에 올바르게 적응하고 이를 채택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챗GPT 사용 관련 지침 도입	학생과 교수진을 위해 챗GPT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도입하고 이러한 지침 도입은 일반적인 것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함
챗GPT 사용을 학습 목표와 연결	챗GPT 사용을 강의 학습 목표와 연계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은 챗GPT가 학습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에게 요구되는 기대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함
평가 방식 검토	모든 평가 및 평가 방식이 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고 이 검토과정을 통해 평가 목적에 따라 평가의 방식이 대면 평가로 대체되거나 질문의 유형이 바뀔 수 있음
학문적 진실성과 정직성 관련 정책 검토	챗GPT와 기타 AI 도구 사용과 관련하여 학문적 진실성과 정직성에 관한 정책을 검토하고 업데이트 하도록 함

출처: Unesco.(2024).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Quick Start Guide*.
<http://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146>

챗GPT시대의 고등교육에 적응하려면, 고등교육기관이 챗GPT와 AI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역량을 구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는 현재로서는 챗GPT가 인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대체할 수 없으며, 바로 이 점이 고등교육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유네스코는 설명하고 있다.

새로운 챗GPT 및 AI관련 프로그램 및 관련 교육과정은 연구 및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최첨단 지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존 프로그램 및 교육 과정이 확장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되는 지원이 챗봇/AI 도구가 제공하는 것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여 정보나 관련 자료들을 이용자가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기술 활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프로그램, AI윤리 및 핵심 AI역량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챗GPT를 포함한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과 내, 단과 대학 내, 그리고 대학 전체 차원에서 이러한 방안들이 확장되어 제공될 필요가 있다.

III 챗GPT 관련 미국대학 사례

1. 아리조나주립대학교(ASU)

미국은 주에 따라 챗GPT를 포함한 AI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과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가 있다. 생성형 AI 사용에 대해 규제적(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대표적인 주는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 주이며, 생성형 AI사용에 대해 반대로 적극적(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주는 아리조나와 일리노이주가 있는데, 아리조나주를 대표하는 주립대학인 아리조나주립대학교(Arizona State University, 이하 ASU)는 혁신적인 도전과 그 성과 면에서 이미 수년 전부터 다양한 국제 대학 평가에서 상위 랭킹에 랭크되는 등 혁신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대학이다.

ASU는 세계 대학 랭킹을 발표하는 U.S. News & World Report에서 발표한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대학’ 부문에서 2023년과 2024년 연속 2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이 이룬 성과뿐만이 아니라 그 준비도와 과정 전반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하고 대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여 대학을 평가하는 ‘The World University Ranking for Innovation’(이하 WURI)에서도 2024년 ASU는 2위에 선정되는 결과를 보여준 대학이다. 2024년 1월 18일, ASU는 챗GPT를 세상에 공개한 OpenAI와 파트너십을 맺은 최초의 대학이다. 대학은 OpenAI와의 협력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과 미래 목표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대학 현장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OpenAI와 파트너십을 맺은 ASU는 대학의 교수 및 학생들이 AI를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4년 3월 ASU는 ‘AI Innovation Challenge’의 시작을 발표하고 교수진과 직원들에게 ChatGPT Enterprise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할 방안을 제출하도록 했으며 챌린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수의 혁신안이 제출되었다(ASU, 2024). 대학은 일방적인 방법이 아닌 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얻어진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업무의 혁신 방향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ASU에는 ‘Artificial Intelligence’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는 ASU의 AI 플랫폼을 만들기 위한 ‘AI Acceleration Team’팀이다.

표 3 | ASU의 AI 플랫폼의 주요 특징

AI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40개 이상의 대형 언어모델(LLM)에 대한 접근	AI모델 개발 및 AI기반 제품 개발
사용자 사례에 맞춘 대화형 에이전트 구축	AI편향 및 유해 콘텐츠 탐지 도구 제공	고급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AI Acceleration Team은 리더십, 프로그램 및 디자인, 데이터 사이언스, AI개발, 데이터 설계 및 강화 관련 인력으로 구성되어 AI 플랫폼 안착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ASU가 미국 내 그 어떤 대학 보다 생성형 AI의 대학 전반에 걸친 성공적인 확산과 이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ASU의 일부 교수들은 이미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작문 수업에서는 AI를 활용해 글쓰기 기술을 개선하고, 저널리즘 수업에서는 AI 플랫폼을 사용해 멀티미디어 스토리를 제작하고 있다. 또한 이와 더불어 ASU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튜터 역할을 하는 챗봇도 사용될 수 있는 준비가 진행 중에 있다.

ASU는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려는 입장이므로 챗GPT의 기술을 차단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대학은 이 기술이 교육에서 사용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 중에 있다. 작년에 ASU는 연구자와 엔지니어를 한자리에 모아 AI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는 AI 가속화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AI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수업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ASU는 OpenAI와의 새로운 협업을 발표하며 주목을 받은 뒤 현재는 ChatGPT Enterprise를 제공하는 최초의 대학 중 하나가 되었다. ASU는 생성형 AI 사용의 부작용을 염려하여 차단을 하거나 반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생성형 AI만의 특징을 활용하여 이를 통해 교수자와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을 극대화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SU는 OpenAI가 대학을 위해 2024년 6월 출시한 챗GPT Edu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GPT-4o로 구동되는 시스템인 챗GPT Edu는 교육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그 목적 및 활용도를 고려하여 출시된 버전인데, 학생들은 이를 활용하여 맞춤형

학습을 계획하고 설계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수준별 학습을 통해 학업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공 기초이론부터 실용적인 연구에서도 챗GPT Edu는 교수들의 연구 과정에서의 데이터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성적 평가와 수업 관련 피드백 과정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요약하면, ASU는 ChatGPT Edu를 통해 학생들이 AI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미래의 직업 환경에 대학 구성원들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AI와 함께 작업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ASU가 혁신적인 교육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으며,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ASU는 OpenAI와 협력하여 기술을 활용해 평생 학습을 제공하고 사회적 규모에서 인간의 잠재력을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ASU, 2024).

ASU대학 총장인 마이클 크로우 총장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ASU의 성공에 필수적인 요소는 기술, 그리고 이제는 AI를 활용해 평생 학습을 제공하고 인간의 잠재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Digital Today, 2025). ASU는 2024년 올해의 교수로 챗GPT를 임명하기도 하는 등 혁신을 주도하는 대학의 모습을 챗GPT사용에 대한 적극성을 통해서도 입증하고 있다. ASU 대학의 앤 존스 학부교육 담당 부총장은 “학생들이 AI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미래 직업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확신한다. 사람들은 이제 AI가 교실에서 학습 결과를 향상시키는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흥미를 느끼고 있다”라고 했다(OpenAI, 2025).

2. 스탠포드대학교

스탠포드대학교는 세계적인 IT산업의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의 중심지에 위치한 대학으로 명실상부하게 공과대학교, 특히 컴퓨터 관련 프로그램의 순위가 세계 최상위에 있는 대학이다.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에서 2위를 차지한 이 대학은 여러 학문 분야를 융합하여 연구하는 학제 간 과학 분야에서도 MIT에 이어 2위에 랭크되었다(THE, 2024-2025).

스탠포드대학교는 2025년 ‘Report Outlines Stanford principles for use of AI’를 발표하였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AI Advisory Committee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탠포드대학교는 인공지능(AI)을 교육, 연구,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학교 차원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발간의 목적은 대학의 혁신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AI 사용이 대학의 핵심 가치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함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고서의 핵심 발간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보고서의 배경 및 목적

- 발전과 책임 측면: AI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성(부작용)을 인정하며, 실험적 측면과 창의성을 장려하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표절, 저작권, 데이터 사용)를 다룰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고서를 발간함
- AI 위원회의 구성: 다양한 전공을 가진 교수와 직원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학교의 AI의 행정, 교육, 연구에서의 역할과 책임 있는 사용 방안의 평가를 담당할 예정임

나. 보고서의 주요 원칙

- 사람의 감독 필수: AI 활용 시 항상 사람의 감독과 윤리적 측면의 고려가 필요
- AI 사용에 대한 황금률: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할 때 기대하는 방식으로 AI를 사용해야 한다” 는 원칙 제시(기본적 예의)
- 기존 정책 준수: AI의 혁신성을 강조한 나머지 기존에 있던 규정과 정책을 무시하지 않도록 할 것

다. 교육 분야

- AI의 영향: 학생들이 이미 ChatGPT 같은 AI 기술을 사용 중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강의 정책과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음

- 교수진 교육: 많은 교수들이 AI 사용에 대한 경험이 여전히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교수진이 AI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AI Tinkery¹⁾: 스탠포드 학습 가속화 센터에서 운영하는 AI 실험 공간으로써, AI가 교육에 미칠 가능성을 탐구할 수 있는 환경 제공하고 있음

라. 연구 분야

- 복잡한 과제: AI가 연구 출판물의 저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연구 제안서 작성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
- 저작권 및 표절: AI 감지 도구 사용 증가로 인해 표절 혐의가 늘어나며, 이와 관련된 정책 개선 필요 및 연구
- 리소스 확대: 스탠포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고성능 컴퓨팅 자원의 확충 권장 관련 노력

마. 행정 분야

- 채용 및 평가: AI가 채용, 성과 평가, 입학 심사 등에 활용될 수 있으나 민감한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필요
- 정책 공백: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새로운 기술 기회 평가 시 위험 요소를 식별하도록 권고

바. 향후 방향

- 지속적인 검토: 위원회는 AI 활용의 새로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자 함
- AI 실험 공간: Stanford AI Playground²⁾ 같은 자원을 통해 교직원, 학생, 연구진이 다양한 IT업체에서 개발한 AI 도구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1) AI Tinkery는 학습자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빠르게 찾아 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일명 'Stanford Accelerator for Learning'의 일부임. 스탠포드대학의 교육대학원에 소속된 이 곳은 연구, 혁신, 실천, 정책을 연결하고 전 생애에 걸쳐 모든 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학문 간 협력을 통해 외부 파트너와 함께 하는 스탠포드 대학교 최초의 이니셔티브임(Stanford University, n.d.).

2) OpenAI, Google와 같은 AI를 제공하는 다양한 업체의 AI모델을 한 곳에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오픈소스 기반의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임(Stanford University, n.d.).

또한, 스탠포드대학교는 대학 전체를 넘어서서 인공지능을 사회적 선(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일명 ‘AI for Social Good’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이 딥러닝, 자연어 처리, 강화 학습 등 최신 AI 기술을 의료, 정부, 환경 보전 등의 실제 사회적 문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2학점짜리 강좌이다. 이 수업은 기술적인 측면의 학습과 함께 윤리적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스탠포드대학교의 Stanford University IT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챗GPT를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코스를 하고 있다. 챗GPT의 기술적 원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다양한 챗GPT 활용 사례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이 교육은 무료는 아니지만 이 코스에서는 챗GPT와 관련된 모든 문제(긍정적, 부정적 측면)를 기술적인 측면을 바탕으로 실제 시스템 사용을 통해 알려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주요 과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탠포드대학교에서는 챗GPT를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챗GPT 사용 상의 부작용(표절 등의 윤리적 문제, 학문의 정직성 이슈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염려되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관련 내용을 학생들에게 강좌를 통해 전달함과 동시에 최신 AI 소개 및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체험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챗GPT 사용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Stanford, 2024).

IV 요약 및 제언

2022년 11월 공개 출시 이후, 챗GPT는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인공지능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다. 챗GPT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단순한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고차원적인, 또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알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해주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인간 밖에 할 수 없었던 영역에 대해 챗GPT가 대체하기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와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문제도 함께 제기되었다.

사람들이 해왔던 일에 대해 챗GPT가 개입하면서 일을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해낼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한 문제도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챗GPT를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학습을 돕는 도구로서의 기능에 중점을 두어 생각해보면 그 역할에 대해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반면, 인간들의 어떤 문제에 대한 생각이나 결론을 챗GPT가 대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서는 윤리적인 이슈가 발생 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주장이나 말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챗GPT가 주는 답변에 대해 사람들이 갖는 우려의 목소리 중 하나는 학문의 정직성 측면, 즉 학생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정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나온 답을 사용하게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이다. 간단한 숫자 계산을 도와주는 계산기 형식으로 챗GPT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 과정을 기계가 대신했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챗GPT의 역할은 ‘진짜 생각’이 아닌 허울뿐인 형식적인 대답을, 신뢰도가 낮은 수준에서 말해 준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챗GPT가 미국 내 많은 대학에서 사용되면서 적극적인 사용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해 학교 차원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관련 수업과 세미나 등을 제공함으로써 그것의 순기능에 집중하는 대학들의 공통점은 학습의 효율성 향상 측면 및 교육 형평성 개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 현

대 사회는 그 무엇보다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빨리, 더 빨리 대답과 결정을 재촉하는 현대 사회는 사람들에게 일과 학업 모두에 있어 속도를 중시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이 옳다고만 볼 수는 없으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생각할 때는 챗GPT 사용이 도움을 줄 수 있다.

교육의 수준이 곧 삶의 질 수준으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교육은 그 특성상 여전히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장 손쉬운 방법 중 하나이긴 하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사회경제적 여건 등으로 배경 지식을 쌓을 경험을 갖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이러한 AI도구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선두주자인 미국 대학기관에서 챗GPT의 사용 권장은 학습의 효율성, 그리고 교육 접근성 및 평등성 추구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24년 5월 30일 OpenAI가 출시한 챗GPT Edu를 위해 ASU는 개발 과정에서부터 협업을 했으며, 앞서 언급된대로 AI 챌린지를 통해 학문, 연구, 업무 환경에서 챗GPT Enterprise를 활용하는 2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ASU에서는 심리학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 및 행동 과학 부분과 관련된 AI 튜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챗GPT는 단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토론을 이끌어내고 퀴즈를 생성해주는 역할을 하도록 개발하고 있다(ASU, 2024).

챗GPT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표절 및 학문적 정직성을 저해한다는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단순한 답을 써 내는 문제, 퀴즈, 시험을 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정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교육과정 및 평가를 설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종희(2023)는 “교수자는 지식과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도출되는 챗GPT의 특징과 활용을 고려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심화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지식을 구성해 나가도록 촉진 하는 것이 요구된다... 학생들이 챗GPT에 단순히 의존하여 시험이나 과제를 완수할 수 없도록 심화된 문제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2023,p.540).

학생 수는 줄어들고 대학들이 재정난에 허덕이는 이 시점에서 대학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혁신이라는 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 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급격하게 발전을 거듭하는 기술의 변화, 그 중 하나인 챗GPT, 그것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 교육을 바탕으로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부분을 활용한 대학교육의 미래 방향을 디자인 할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고민해야 되는 이 시기에 고등교육의 선두 주자인 미국에서 생성형 AI의 거듭되는 발전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그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여 대학을 지속 발전시키려는 두 대학의 대학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의 사례는 앞으로 우리 대학들이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 학습 역량을 심화시키는데 건설적으로 챗GPT를 활용하도록 이끌어 가는데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이상 “챗GPT 긍정적 영향 미칠 것. (2024). <https://www.yna.co.kr/view/AKR20240619045200530>.
- 美 애리조나주립대, 올해의 교수로 ‘챗GPT’임명.(2024).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1229>.
- 오픈AI, 대학을 위한 ‘챗GPT 에듀’ 출시.(2024). <https://www.newsthea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94>.
- 전종희. (2023). 대학교육의 챗GPT 대응 현황 및 방안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pp. 517-548.
- 챗GPT 활용한 대학생 4명 중 1명꼴...리포트 등 작성 시 정보 탐색 및 참고 했다 . (2023). <https://www.aitimes.kr/news/articleView.html?idxno=27608>.
- AI Innovation Challenge. (2024). <https://ai.asu.edu/AI-Innovation-Challenge>.
- AI Playground.(n.d.). <https://uit.stanford.edu/service/aiplayground>.
- Arizona State University personalizes learning and advances research with ChatGPT. (2024). <https://openai.com/index/asu/>.
- ASU faculty and staff submit 175+ proposals to use ChatGPT Enter prise. (2024). <https://tech.asu.edu/features/ai-innovation-challenge-spring-2024>.
- ASU leaders explain University’s relationship with OpenAI.(2024). <https://www.staterepress.com/article/2024/04/openai-april-2024-update>.
-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Quick start guide. (2024).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146>.
- Intelligent. (2024). 4 in 10 College Students Are Using ChatGPT On Assignments. <https://www.intelligent.com/4-in-10-college-students-are-using-chat-gpt-on-assignments/>.
- Getting Started with ChatGPT. (n.d.). <https://uit.stanford.edu/service/techtraining/class/getting-started-chatgpt>.
- Hui Wang , Anh Dang , Zihao Wu , Son Mac. (2024). Generative AI in higher education: Seeing ChatGPT through universities’ policies, resources, and guidelines .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7, pp. 1-11.
- Inside Higher ED. (n.d.). 2024 Survey of College and University Presidents.(2024) (pp. 5). n.p.: Jenzabar, Inc.

- Interdisciplinary Science Rankings 2025. (2025).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interdisciplinary-science-rankings>.
- Margarida Romero, Jonathan Reyes, Panos Kostakos.(2024).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Computers and Education: Artificial Intelligence, 7, pp. 129-143.
- OpenAI partners with Arizona State University to use ChatGPT in class rooms.(2024). <https://www.theverge.com/2024/1/18/24043017/openai-arizona-state-university-asu-chatgpt>.
- Report outlines Stanford principles for use of AI.(2025). <https://news.stanford.edu/stories/2025/01/report-outlines-stanford-principles-for-use-of-ai>.
-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2024).<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latest/world-ranking>.
-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5.(2025).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latest/world-ranking>.
- World University Rankings 2024.(2024). Times Higher Education.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24/world-ranking>.



4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승정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와 발전 과제

김승정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서론

지식기반사회에서 대학원은 지식을 생산하고 기술혁신을 가져오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자와 지식 자산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혁신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대학원에 대한 관심은 90년대 후반부터 융성해져, 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지식 경제의 중심이 되는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신정철 외, 2007). 그에 따라 대학원은 2000년대 이후 양적으로 팽창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 석사학위 취득자 약 8만 8천명, 박사학위 취득자 약 1만 9천여명으로 2000년과 비교하여 석사학위자는 약 1.8배, 박사학위자는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대학원의 성장과 함께 세계 학문시스템에서 주변부에 위치한 우리나라가 탈추격 관점의 혁신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강력한 연구중심대학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었다(권기석, 2011). 또한 대학원의 급속한 팽창에 비하여 교육의 질 관리 미흡, 지식 창출 역량의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비교적 최근에는 대학원생 처우 개선, 학업 경험과 교육만족도, 대학원생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대학원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김승정, 2021; 이석열 외, 2019; Lim et al, 2020).

이러한 대학원 관련 대표 정책으로써 BK21사업은 '99년에 도입되어 현재 4단계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핵심 학문분야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기 위하여 그간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여 왔다. BK21 사업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원의 정체성을 연구기관으로 변화시켜 왔다(김보라 외, 2020; 김명진, 배관표, 2023; 선미라, 염경준, 2024; 주현정 외, 2023).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고, 연구 역량을 개발하는 등 대학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였다고 평가한다. 이에 2020년부터 도입된 4단계 BK21은 기존의 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양성과 함께 연구중심대학 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대학원 혁신 지원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대학원 체제 개편, 교육 개선,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대학 본부에 사업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대학원 제도로의 변화를 추구한다(교육부, 2024). 따라서 대학원혁신정책은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 전략, 체제 변화 등 강력한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어 대학원 교육을 이끄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들은 대학원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교육 여건을 갖추며,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향상, 경제적 지원 및 국제화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난다(한국연구재단, 2023).

그러나 대학원혁신사업은 '20년 하반기에 도입되어 관련 연구가 많지 않으며, 각 대학에서 적용되는 방식이 유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 도입 이후 대학원생의 중도탈락을 제외하고 취업률, 대학원 입학생 수 등에 있어서는 통계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도 제시된다(김수진, 2024). 또한 정책집행과정에서 관료주의와 사일로 현상 등이 나타나 대학원 혁신이 제도화되는 과정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박혜연, 2023).

따라서 본 연구는 연구중심대학 체제 변화와 대학원 교육 내실화의 관점에서 대학원혁신사업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학원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개념과 구성요소, 대학원 교육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혁신 사례들을 분석하고 실무자 면담을 통해 대학원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대학 대상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동형화 현상(김훈호 외, 2011; 하연섭, 2011)을 고려해볼 때, BK21 대학원혁신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 분석은 한국의 대학원 교육과 시스템의 변화를 추적하고 예측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연구중심대학의 개념과 구성

연구중심대학은 독일의 훔볼트주의로부터 설립된 베를린 대학을 그 시초로 본다. 자유로운 학문 탐구, 교육과 연구의 결합을 특징으로 하는 연구중심대학 모델은 존스홉킨스 대학, 하버드 대학 등 미국의 대형 사립대학들로 이식되어 현재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정착되었다(Clark, 2019). 국내 연구중심대학 역시 미국식 연구중심대학을 모델로 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학부와 대학원의 이원화, 대학원 중심 연구활동의 형태로 나타난다(Shin, 2011). 연구중심대학에 관한 연구는 일종의 대학발전 모델에 대한 연구로, 대부분 성공한 대학 사례의 경험적 특징들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Altbach, 2011; Altbach & Salmi, 2012; Barringer & Pryor, 2022; Postiglione, 2013).

성공한 연구중심대학들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Altbach, 2011; Altbach & Salmi, 2012; Barringer & Pryor, 2022; Postiglione, 2013). 무엇보다 연구중심대학은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에서는 학부생 1인당 교육비보다 대학원생의 1인당 교육비가 더 많이 소요되며, 교수의 교육 시간, 학과 재정 모두 대학원에 집중된다(Clark, 2019). 국공립 대학들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이며, 사립 연구중심대학들은 기부, 컨설팅 제공, 기술이전, 학생의 수업료, 수수료, 정부 지원, 민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규모 자금을 모금한다. 최신 기술을 적용하고 양질의 연구 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한 기금을 조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정 확보에 있어 지나치게 시장에 의존하거나 산학협력을 강조하게 되면, 학문의 자유와 공공성을 훼손하고, 기업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기도 한다(Altbach, 2011; Slaughter & Rhoades, 2004). 또한 연구중심대학은 뛰어난 교수와 대학원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간의 협력과 경쟁이 우수한 연구 성과로 연결된다. 최근 급여가 높은 지식 산업과의 경쟁, 글로벌 이동에 따른 세계적인 대학 간 인재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추세로 이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채용 시스템과 급여 및 승진 구조 등을 유연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책무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재

정 투자에 대한 부가가치를 증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과를 보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포함하여 기술 이전 및 특허, 기술 창업 등을 통해 그 존재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중심대학은 학문의 자유를 추구하며, 유연한 지배구조를 토대로 전략적 비전과 과감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Postiglione(2013)은 홍콩 연구중심대학 사례 연구에서 기관의 자율성 보장과 우수한 인재의 순환을 위한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 역량, 특히 지역 문화에 외국인 우수 연구자 및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배려한 토착 학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특히 홍콩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였기 때문에 비영어권 국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언어 장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대부분의 영향력 있는 저널들이 영어로 되어 있으며, 학술적 교류를 위한 의사소통이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짐에 따라 영어의 광범위한 활용은 비영어권국가 대학이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Altbach, 2011). 이처럼 연구중심대학은 학문의 자유로운 탐구와 개방적 학술 문화, 뛰어난 인재 유치와 경쟁을 통한 수월성 확보, 막대한 재정의 집중 투자를 그 특징으로 한다.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구중심대학에 대한 정의와 분류, 형성 조건과 육성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분류에 있어 Shin(2007)은 박사학위수여 규모, 전임교원, 연구성과와 연구비에 기초하여 3개 유형으로 구분한 바 있다. 그에 의하면, 국내에서 연구중심대학(research universities)이라고 볼 수 있는 대학은 7개 대학이며, 그 외 14개 대학을 연구활동대학(research active universities), 26개 대학을 박사학위수여대학(doctoral universities)으로 분류하였다. 이영학(2012)의 경우는 교수당 대학원생 수, 학부생 대비 대학원생 비율, 논문 및 연구비 실적, 박사학위수여 수 등을 종합하여 총 17개 대학을 국내 연구중심대학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의 정의와 분류 연구는 국가 차원의 연구중심대학 육성과 투자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가진다.

한편 국내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한 방안과 전략은 다양하게 제시된다(김용, 2003; 전승준, 2011; 이병식, 2022). 김용(2003)은 국가의 개입보다 대학 간 경쟁에 기반하여 연구중심대학이 발전하므로,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대학에서 학생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교수 유치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점에서 한국형 연구중심대학 체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전승준(2011)은 카이스트를 국내 최초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보고, 연구성과와 같은 지표의 개선보다 학문적 역량을 갖춘 교수, 다양한 자원과 대학 운영 자율성, 연구와 교육의 결합, 산출물의 활용이 더 중요하며, 무엇보다 추진력을 갖춘 훌륭한 대학 행정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병식(2022)는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으로 대학의 지속적 변화가 가능하도록 총장 임기 연장, 수월성에 기반한 집중 재정 투자와 대학 및 연구소 간 협력, 범부처적 지원, 시장과 민간 기업의 역할 확대, 교육중심대학의 역할 강화를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서 충분한 재정의 확보와 자원의 다양화, 경쟁을 통한 수월성의 확보, 연구와 교육의 효과적인 결합, 범부처적 지원과 민간 기업 투자의 필요성 등이 제시되었다.

2. 대학원 교육

대학원에서의 교육과 학문적 발달에 대한 연구는 대학원생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하는 학문사회화(academic socializaion) 이론으로 설명되어 왔다(Weidman, Twale & Stein, 2001). 학문사회화 개념은 학부 교육과 달리 대학원 교육이 교육과 연구가 결합된 도제식 교육 훈련의 전통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대학원생 발달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학문사회화의 관점에서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 가치를 습득하고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관찰 학습을 통해 학자적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독립적’인 연구자이자 전문가(profession)로 성장하게 된다(Weidman et al, 2001). 이러한 과정은 대개 통과해야 할 과업에 따라 3개의 단계로 구분되며, 각 단계별로 완성해야 할 과업과 관계 내에서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난다(Baker et al, 2013; Golde & Dore, 2001).

그 첫 번째 단계는 대학원 초기 적응 단계로 선배와 지도교수, 새로운 동료들과의 만남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대학원 생활에 대한 중요 정보들을 획득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이다(Weidman et al, 2001). 이 과정에서 학부와 다른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기도 하며, 가족, 친구들 등의 정서적 지지와 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유무가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Gardner, 2008). 초기 적응 단계에서는 대학원 입학 동기가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다(Shin et al, 2018).

두 번째 단계는 코스웍 및 논문자격 준비 단계로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한다(Adler & Adler, 2005). 이 과정에서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밀접한 연구 협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전수받고, 학문 분야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면화한다. 특히 연구의 설계, 수행, 결과 보고 및 활용 등 연구활동에서 관찰학습이 일어나며, 외부의 학문 공동체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이 일어난다(Lovitts, 2008). 이 시기 인문사회계열에서는 학문적 발달에 있어 교수와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과 교수 및 지도교수와의 관계 형성이 중요 과제로 나타나며, 이공계열에서는 실험실을 매개로 동료 및 선배 후배 간에 전수되는 암묵지와 상호 학습이 중요 과제로 나타난다(Gardner, 2009). 실제로 지도교수의 유형 및 학생 특징에 따라 상호작용 방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연구에 대한 효능감과 학위과정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김승정, 2019; Murphy, 2009; Wright et al, 2007).

마지막 단계에서 대학원생들은 자신의 논문과 연구에 집중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된다. 이 시기 연구에 대한 몰입의 경험은 학자로 성장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진로 등에 대한 생각이 명료해진다(Adler & Adler, 2005; Baker & Pifer, 2014). 오현석 외(2007)는 우리나라 과학자의 성장 경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시기에 경험했던 과제집착과 몰입 경험, 관심 분야와 평생 연구 주제 발견, 멘토와의 만남이 중요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각 단계 속에서 과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학위 과정을 그만 두거나, 역할과 정체성의 분리가 일어나기도 한다. 그러나 교육과 경험을 통합하고 가치와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되면, 독립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다(Gardner, 2009; Weidman et al, 2001).

3.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 개관

대학원혁신사업은 4단계 BK21 사업의 일환으로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 개편 및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를 목표로 설계되었다. 기본 방향으로서는 대학원 역할의 재정립, 대학원 교육 개선,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대학원 국제 경쟁력 강화, 우수 학·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 유치 지원 등이 제시된다. 또한 사업단 기

반의 사업 운영에 따른 학문 분야 간 분절을 보완하고, 대학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되어 해외 벤치마킹을 토대로 제도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23년에서 '25년까지 대학원혁신사업은 연간 80,696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일정 수 이상의 교육연구단(팀)을 보유한 대학 중, 교육연구단 수, 참여 교수 및 지원 대학원생 수 등을 고려하여 대학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증액에 따른 증액분을 지역 대학원에 집중 투자하였다(교육부, 2024). 따라서 대학원혁신지원비는 전국/지역을 분리하고, 연차별 평가를 거쳐 매년 차등 지급되었다.

대학원혁신사업 대상 대학은 '24년 전국단위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과 지역단위 13개 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연세대(미래), 한국해양대)으로 총 23개 대학원을 포함한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원혁신사업의 중점 방향과 목표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 대학원혁신사업의 중점 방향과 목표

방향	내용
대학원 역할 재정립	- 중장기 대학원 교육 연구 전략 계획 수립 -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 내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 개선	- 대학원 학사 관리 강화 - 대학 차원 RA, TA 제도 운영 - 연구자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 및 질 관리 - 연구방법론 및 한국 산업·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 개발·운영, 학과·전공 간 융합연구 추진 및 관련 전공 개발·운영 - 우수한 학·석사 연계과정 및 통합과정생(학사과정 최종학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독려하기 위한 지원금
연구 환경 및 질 개선	- 연구평가 지원 체계 구축 - 연구 윤리, 연구안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연구행정 관리인력 역량 강화 - 학내 논문 DB 구축, 교육연구단 지원을 위한 기술인력(technician) 고용 등 - 공용 연구공간 및 범용성 높은 기자재 및 연구 재료비 지원 ※ 대학원 혁신 영역 평가 시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연구 기회 제공' 평가
대학원 국제경쟁력 강화	- 대학원생 국제 공동연구 - 외국어 논문 작성 및 강의법 지원 - 해외 우수학자 및 우수 대학원생 초청 등

출처: 교육부(2024)

교육부에서 제시한 대학원혁신사업의 성과는 연차평가 지표를 통해 나타나며, 대학원 교육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체제의 개편, 체계적인 학사 관리와 교육과정의 개선, 대학원생 교육 지원, 우수교원 확보와 연구 지원,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학문 후속세대 권익 향상, 연구 환경 개선 및 연구 윤리 교육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 연차 평가는 매년 시행되어 왔으며, 20% 범위 내에서 하위 2개 대학의 예산을 삭감하여 상위 2개 대학에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원 혁신지원비의 조정이 이루어졌다. 대학원혁신사업의 연차 평가 지표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 2024년 대학원혁신사업 연차평가지표

	항목	지표
대학의 목표와 전략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비전 및 목표 대비 추진 실적	①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실적 ②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체제 개편 실적 및 성과
	교육과정과 학사관리 계획 대비 실적	①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개선 계획 대비 실적 ② 체계적 학사관리 계획 대비 실적
교육·연구 체제 구축	학생 지원 계획 대비 실적	① 학생중심 교육·연구 지원체계 구축 계획 대비 실적 ② 대학원생 경력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제도 운영 계획 대비 실적
	교육여건과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계획 대비 실적	① 우수교원 확보 및 육성을 위한 계획 대비 실적 ② 연구지원 체계 구축 계획 대비 실적 ③ 대학 차원의 RA·TA 제도 운영 계획 대비 실적
	산업계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 실적	① 산업계 기여도 제고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운영 실적 ② 지역사회 상생·협력 실적
	국제화 플랫폼 운영 계획 대비 실적	
학술연구 지원 및 환경 개선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강의·연구기회 제공 계획 대비 실적	
	대학 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 형성	① 연구윤리 확보 계획 대비 실적 ②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 계획 대비 실적 ③ 대학원생 권익 보호 및 처우 개선 계획 대비 실적
	교육연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원생·신진연구인력 지원 계획 대비 실적	
교육연구단 지원	교육연구단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참여교수·연구환경 지원 계획 대비 실적	

출처: 교육부(2024)

III 연구 방법

1. 자료 수집

본 연구는 '24년도에 제출된 23개 대학의 성과보고서 및 성과요약서와 대학원혁신 실무자와의 면담 자료를 활용하였다.

성과보고서 분석은 2024년 대학원혁신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단위 10개 대학(경희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인하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양대, 한양대(ERICA)), 지역단위 13개 대학(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경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동아대, 연세대(미래), 한국해양대)으로 총 23개 대학원의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이들 대학들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 동일한 사업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연차평가를 통해 사업의 운영과 실적 전반에 걸친 평가를 받아 지원액 교부가 이루어졌다. 연차평가의 결과에 따라 예산이 삭감되거나 증액된 것으로 나타난다.

실무자 면담은 대학원혁신사업의 계획, 운영, 성과 평가 등의 과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연구교수, 선임연구원, 팀장급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지역과 대학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면담은 2024년 11월 8일 ~ 12월 3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온라인 회의(Zoom)를 통해 반구조화된 면담 질문지를 바탕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 동안 수행되었다. 면담은 소속 대학의 사업 운영 특징과 강점, 혁신의 추진 과정과 전담 조직 변화, 전반적인 혁신에 대한 교내 구성원의 인식, 혁신사업 운영 과정에서 경험한 한계점과 개선점, 대학원 혁신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면담 참여자 정보와 주요 면담 질문은 다음과 같다.

| 표 3 | 면담 참여자 특성

	사업 단위	면담참여자	대학 소재지	대학 유형
1	전국	A	수도권	국공립
2	전국	B	비수도권	사립
3	전국	C	비수도권	국공립
4	전국	D	수도권	사립
5	전국	E	수도권	사립
6	지역	F	비수도권	국공립
7	지역	G	비수도권	국공립
8	지역	H	비수도권	국공립

| 표 4 | 면담 질문

방향	내용
소속 대학과 대학원의 특징	- 소속 대학원의 현안 - 전반적인 대학원 특징
대학원혁신사업 현황과 성과	- 대학원혁신사업의 운영 현황과 중점 방향 및 특징 - 대학원 혁신 추진 과정과 전담 조직 - 전반적인 대학원혁신사업에 대한 교내 구성원(교수, 대학원생, 직원 등)의 인식
대학원혁신사업 운영의 한계와 개선점	- 대학원혁신사업 운영과정에서 경험한 문제점과 한계 - 대학원혁신사업의 개선점 - 국내 대학원 혁신의 방향과 과제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면담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헌 자료 분석은 각 대학의 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대학원혁신의 방향과 특징을 귀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면담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실무자가 생각하는 특징과 성과, 한계와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 분석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되고 전사되었으며, 개인 정보를 삭제하고 일련의 식별 기호를 부여하여 정리하였다. 연구자는 전사된 자료를 여러 차례 숙독하며 연역적, 귀납적 코딩과 초점 코딩을 거쳐 발견한 핵심 범주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재조직화하여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사례들에 대한 비교 및 대조를 통해 대학원 혁신 특징들을 도출하고, 문헌 자료 분석과 결합하여 최종적 연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범주는 다음의 표와 같다.

| 표 5 | 분석 범주

중심 범주	하위 범주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구축	- 대학원 중심 거버넌스로의 변화 - 우수 교원 및 학생 유치 노력 - 연구환경과 인프라 구축 - 연구 수월성의 추구 -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협력의 확장 - 연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 증대 - 대학 특성에 따른 대학원의 단계적 혁신
대학원 교육 내실화	- 대학원생 복지 향상과 경제적 지원의 증대 -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유연화 - 교육의 질 관리 - 상호작용과 협력 촉진을 위한 문화 조성 - 교육과 연구의 결합 - 학생 중심 발달과 통합
연구중심대학 체제 혁신과 발전과제	-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과제 - 연구중심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IV 연구 결과

1. 연구중심대학 체제의 구축

가. 대학원 중심 거버넌스로의 변화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 중심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으며, 학문의 자유와 수월성 추구를 목표로 과감한 혁신과 의사결정을 내리는 리더십을 가진다(Altbach, 2011; Salmi, 2011; 신정철, 2008; 이병식, 2022).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원혁신사업은 연구중심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거버넌스의 변화를 촉진하였다. 사업의 성과평가 지표 역시 비전 및 중장기 계획과 체제 개편의 실적을 포함하고 있어 거의 모든 대학들이 대학원 중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원 혁신사업 성과보고서 및 면담 자료에 의하면, 대학들은 대학원 혁신을 위한 장기 비전과 계획을 세우고, 조직 개편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김수진(2024), 박혜연(2023)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거버넌스 변화는 대학원 행정 조직의 위상 강화 및 독립성 증대, 관련 대학원위원회 구성의 다양화와 역할의 증대, 부서간 협력 프로세스의 증가를 그 특징으로 한다.

각 특징들을 살펴보면, 첫째, 각 대학들은 대학원혁신사업이 학사, 장학, 교무, 국제화, 산학협력 등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원 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적 조직으로 키움으로써 관련 정보를 수합하고 종합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다수의 대학에서 부총장이 대학원장을 겸직함으로써 혁신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 하는데 원활하도록 거버넌스를 바꾸었으며, 대학원혁신조직 내에 교육, 연구, 성과 관리 등을 담당하는 하위 조직을 두고 인력을 다수 충원하는 등 대학원 행정조직의 위상을 강화하고 독립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장의 리더십이 혁신 사업 내에 발휘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면담참여자 A는 기존의 행정조직 문화와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조직을 만들기 위하여 별도 조직을 구성하였다고 말한다.

기존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문화, 행정 문화에 이게(대학원혁신사업) 녹아들지 않게 하시려고 아예 이 BK 사업단만을 따로 빼서 이 사업이 운영할 수 있는 팀을 만드시고 또 그걸 하면서 나타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그쪽에다 축적을 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조금 사용하셨어요. (A)

둘째, 대학별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대학원 관련 위원회가 신설, 정비되고, 그 역할 역시 대폭 확대되어 나타난다. 총장이 대학원혁신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대학원 혁신 전반에 걸친 중요 역할을 담당하며, 자체평가위원회, 단과대 추진위원회, 글로벌 자문위원회, 대학원생위원회 등 다양한 실무 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었다. 괄목할 만한 변화는 대학원생위원회가 대학원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원혁신사업을 통해 대학 내 부서 간의 상호작용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영역들에 대한 예를 들면, 대학원생 역량 측정 및 비교과 과목의 제공, 경력 개발 및 진로 멘토링,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 유학생 관리 및 해외 학술 네트워킹 등은 대학의 다양한 부서와의 공동 과업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대학원 혁신 부서는 각 학부, 학과, 전공 단위를 포함하여, 국제, 연구, 교무, 산단 등의 행정부서와 함께 IR센터와 같은 성과관리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전반적인 대학원 혁신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각 부서들과의 네트워크와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나타나는 사일로 현상은 혁신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지적되었다. 부서와 직원 간 상호 이해 관계가 맞지 않은 경우 사업 시행 및 성과보고에 있어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면담자 E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 실무자들은 이러한 부서 간 협력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언급하였다. 박혜연(2023)의 연구 역시 대학원혁신사업의 집행 과정에서는 관료주의와 자기 조직의 자원 확보, 사일로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공무원식의 관료제 이것은 어쩔 수 없기는 한데 너무 옛날부터 행정 처리 방식 자체가 공무원 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거든요. 이 사업들을 다른 부서들로 맡길 때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싸움을 한참 해야 돼요. 자기네들의 주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핵심 주 업무가 있는 거고 이런 평가나 대학에 오는 사업들은 갑자기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임시 사업인데 내가 여기에서 일희일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인사 고과에 그렇게 영향을 주는 영역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득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주로 혁신을 좀 가로막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 (A)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는 학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던 대학의 기존 시스템에서 대학원의 중요성을 각인시키는 변화로 인식된다. 다수의 면담자들은 대학원혁신사업 이후로 ‘존재감이 없던’ 대학원 교육 및 학생에 대한 행정적, 교육적 고려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지원을 대학에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한다.

대부분 학부 중심 인데 거기에 연구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그냥 목표 지향성만 연구 중심이지 사실 실질적인 운영하는 체계나 방향은 거의 학부 중심이거든요. 대학원에 대한 직접적인 사업은 대학원 혁신 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원을 키우고 대학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학원 혁신 사업이 필수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대학 차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라라고 보고 있어요. (F)

저희 본부 차원에서도 생각했을 때 대학원생들만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이제 설득하기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할 때에도) 많은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C)

한편, 대학원혁신사업은 대학원 규모, BK 연구단 규모, 지역 및 기존의 대학 미션에 따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연구중심대학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가지고 있고, 대학원의 규모가 큰 A의 대학은 대학원혁신사업이 일종의 넷지 역할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사업 운영 자체가 대학원의 변화를 가져오는 넷지를 찾는 과정으로, 목표 달성의 효율성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하였다.

사업 자체가 돈이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를 움직이는 그런 효과, 끝까지 움직이기 위해서 여기서 뭘 움직이면 연쇄작용을 해서 저기까지 영향이 갈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것들. 사업의 의미 자체가 (A)

연구중심과 교육중심 그 사이에 있었던 대학들은 대학원혁신사업이 ‘대학의 사활을 건 위기 극복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 E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정체성의 전환이 실질적인 대학 위기 극복 방향이라고 보고, 대학원혁신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또한 면담 참여자 G는 학교 발전에 대한 시각이 전세계적 인재 양성의 관점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BK가 없어도 혁신 안 하면 oo대는 이제 밀려요. 저는 정말 그 위기를 느끼며 사는 사람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E)

예전에는 학부가 잘 운영되고 학생들이 많이 모집이 되어야 학교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대학원 혁신이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대학원생들의 연구 역량, 지역사회나 국가, 글로벌로 넓혀 얼마나 우수한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들이 많이 가게 됐던 것 같고요. (G)

지역 단위 대학원혁신사업 참여 대학 중 일부는 목표와 전략으로 ‘지역 밀착’, ‘특성화 강소대학지역’, ‘실전형 연구중심대학’과 같이 명시함으로써 정체성을 차별화하

였다. 대학원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전통적으로 교육중심이었던 대학의 실무자들은 거버넌스가 바뀌더라도 사업이 중단된다면, 다시 학부 중심의 체제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보여준다.

대학원 조직이 총괄적인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되고 교내에서 이제 타 부서와 어떤 식으로 연계를 지어야 하는가 그런 걸 좀 고민을 해야만 사실 이 대학원 혁신에서 하고 있는 걸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부서들에게 예산을 배정하고 이 업무를 하고 있지만 예산이 더 이상 없다면 다시 학부 중심 조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의 기능 자체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D)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에 필요한 발판으로서 지속가능한 전략 모색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우수한 교원 및 학생 유치 노력

연구중심대학의 성공에 있어 탁월한 교원과 학생은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되며,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뛰어난 교수를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한 경쟁이 각 국가와 대학에서 치열하게 일어난다. 특히 급여가 높은 지식산업과의 경쟁으로 더욱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들은 높은 급여와 연구비,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경쟁과 확실한 보상을 통해 탁월한 연구자들을 유치하고 유지한다(Altbach, 2011).

대학원혁신사업의 보고서와 면담자료를 살펴보면, 이러한 우수 교원 유치에 있어 주로 나타나는 정책은 신입교원 연구지원, 연구우수자에 대한 교육시수 감면과 포상, 특별 임용 및 승진제도 등이 보편적으로 나타난다. 일부 대학에서는 초우수 연구자에 대한 특별채용, 석좌교수제, 특별연구년제, 승진최소 근무연한 폐지, 우수연구자 인센티브, 특별호봉제, 보직과 겸직 유연화 등의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면담 참여자들은 실제 교수들에게 혁신사업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통한 우수 교원 유치에는 한계가 있으며, BK 연구단을 이끄는 교수들에게는 연구 집중을 위한 책임 시수 단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언급하였다.

연구단장님들한테도 기존에 없던 그런 책임 시수를 단축해 드리는 것을 지원해드렸거든요. 연구 쪽에 더 초점을 맞추시라는 의미로 그래서 아예 규정화해서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고. (C)

우수 학생 유치에 있어서는 ‘대학원에 오는 가장 뛰어난 학생은 자대생’이라는 전제로 자대생 유치를 위한 학·석사 연계 프로그램과 장학제도 운영의 동향이 나타나며, 그 외에 외국인 학생 유치와 관리, 정착을 위한 지원 전략이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학생 유치에 있어 사업의 효과는 신입생 충원 및 중도탈락률 개선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면담 참여자들은 학생 유치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고, 중도탈락률도 상대적으로 좋아졌다고 평가한다.

학부 고학년들에게 일단 소문이 어떻게 났냐 하면 들어오면 학비 고민을 안 한다더라. 대학원생 자교 비율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학부 고학년들한테 공을 좀 들입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할 해서 다른 대학원에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E)

자교 학생들을 조금 잡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연계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재원이 아무래도 부족하고 학생들이 무조건 석사로 입학한다고 보장도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도 있기도 하고 졸업이 안 돼서 진학 못하는 학생들도 사실 있고 또 아무래도 지방대다 보니까 지방에서 수도권이나 타대학으로 인재 유출이 조금 많거든요. 대학원생들은 학부생들이랑 다르게 중도 탈락의 사유가 사실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F)

또한 대학들은 우수 대학원생의 성과를 높이고, 이동을 막기 위한 별도의 장학 제도를 신설하고 운영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 A의 대학은 이러한 초우수 학생들을 위한 지원과 함께 이후의 성장과 진로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유능한 몇 명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매년 그렇게 초우수 학생 10명 안팎으로 뽑아서 내년에는 또 어떻게 뭐 하고 사나 한번 보고 또 새로 뽑고 뽑고 해서 이 학생들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서 보고 있어요. 여건이 이제 딱 주어진었으니까 여기서 생산적이고 폭발적인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몇 명 학생들을 찾아내고 이렇게 집중 지원하는 것 그랬더니 초반에 지원했던 학생들이 벌써 교수가 된 경우도 있어요. (A)

다.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

연구중심대학 체제에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적절한 재정 지원 전략과 투자, 연구활동을 위한 행정 인력과 연구지원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 환경과 인프라는 공간, 도서관, 테크놀로지, 자율적 연구 풍토, 우수 대학원생 연구인력 확보를 위한 기본 복지체계 등을 포함한다. 사업 성과보고서 및 면담 내용을 살펴보면, 대학원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대학들에서는 대학원혁신사업이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난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연구와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공용으로 활용 가능한 장비와 테크니션을 채용하는 등의 연구 환경과 인프라 구축 노력이 나타난다. 또한 실험실 안전성의 증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공계열 연구실에 대한 안전 진단 및 노후 시설의 교체, 위험한 화학 물질에 대한 관리 강화, 안전 교육에 대한 강조 등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대학원생학생회가 대학원생들 공간이 학부생들에 비해서도 부족하다라고 해서 매년 대학원생들 전용 공간을 계속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 연구 쪽에 조금 중심을 두고 있는데 공동장비활용이라 해서 저희가 고가 장비 도입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연구실험센터라든지 아니면 실험실 안전센터라든지 연구 장비에 투자를 비중 있게 하고 내년 사업에서도 연구단과의 연계나 아니면 타 부서 타 대학원생들 모두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연구 장비를 조금 더 도입해 보자라는 이런 신규 사업도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F)

라. 연구 수월성의 추구

연구 수월성의 가치는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에 있어 핵심 가치로 탁월한 연구 수행을 촉진하는 정책이 국가 단위, 대학 단위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BK 4단계의 평가 지표 역시 양적 성과가 아닌 질적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연구의 수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질적 성과 강조가 이 사업의 핵심이에요. 이제 더 이상 양적으로 많이 만들어내는 거 말고 질적으로 좋은 거를 만들어내보자. 그러니까 단순히 학생들한테 논문 많이 써라, 단순히 몇 프로 상승 이런 게 아닌 거 (A)

따라서 대다수의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연수를 제공하고,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연구 수월성을 위한 경쟁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구 수월성을 위하여 교육 책임 시수의 감면을 제공하는 대학들도 나타난다. 교육 시수가 높을수록 연구에 대한 헌신과 생산성이 낮아져,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에서는 교육 책임 과목이 학기당 2개 과목을 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여진다 (Altbach, 2011).

마.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협력의 확장

세계 수준의 연구 수월성을 위하여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협력은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어 왔다.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에서 글로벌 학술 네트워크는 주요 특징 중 하나로 이를 통해 뛰어난 교수와 학생의 이동이 수월하게 일어나고 국제적 연구 협력과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가 가능하도록 한다. 대학원혁신사업은 이러한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가 학생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제 연구 교류, 해외 파견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대학에 따라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국제공동연구 프로그램도 제공함으로써 학술네트워크를 확장하였다.

몇천만원을 넘어가는 상당한 액수를 한 학생에게 6개월에서 1년동안 투자하는 건데, 작년에 (해외) 갔다 온 학생들 몇 명을 인터뷰했더니 굉장히 만족도는 좋아요. 사실 여기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간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외부 네트워크를 통해 자기 진로를 조금 더 열 수 있는 기회, 자기 시야 확장하는 것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A)

A의 소속 대학은 이러한 학생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 조인트 랩이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며, 이러한 국제공동연구 지원은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더욱 촉진하는 것으로 작용한다.

조인트 랩 약간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만들어 드리거든요. 공동 연구를 위한 아예 랩 자체를 조인트 랩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을 해요. 비스팅 스칼라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 같은 것들도 지원도 해드리고 자원이 투입되니, 교수님들도 동의하시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A)

바. 연구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 증대

연구중심대학은 사회와 확고히 연결되어 있어, ‘상아탑’으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지식을 창조하고 보급하는 존재로서 대학을 말한다(Altbach, 2011). 연구중심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는 논문과 같은 이해중립적인 연구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요구하는 실제적인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창업 기술이전 등의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로도 이어진다. 또한 고급 인력의 양성 및 정부와 기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 산학연 클러스터의 허브, 지역사회 협력의 주체로써 연구중심대학의 사회적 가치를 형성한다(이병식, 2022). 이러한 맥락에서 학생 관점에서는 교수직이나 연구직 외의 다양한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Shin et al, 2018; 조은원 외, 2023). 대학원혁신사업은 산학협력, 창업 등의 평가 지표를 통해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 창출을 평가하고 있어 대부분의 대학들은 학생들에게 창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창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있었다.

실험실 창업을 하는데 이전에 이제 교원 창업 위주로 지원을 했다면 대학원혁신사업을 하면서 대학원생 창업을 많이 지원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그렇고 교과나 비교과도 새로 신설됐고 창업 동아리라든지 대학원생이 참여하는 창업 세미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서. 대학원생들은 학부생 창업과 다른 것이 기술적인 창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술 창업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또한 특허를 낸 경우 그걸 가지고 석사학위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학과가 그걸 원할 때 본부에서는 심사를 통해서 허용해 주는 거죠. (D)

사. 대학 특성에 따른 대학원의 단계적 혁신

대학 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 전환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대학의 지역, 규모 등의 특성에 따라 사업을 보는 시각도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동일한 잣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에 대하여 다수의 실무자들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인식 자체가 지방이 어떻게 수도권이란 같이 평가를 받나라는 생각을 지역 대학에서는 다들 조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연구중심대학으로 가기 위해 지역과 수도권을 나누는 것이 구조상으로는 맞지 않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과 격차가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F)

면담 참여자 A는 현재 인프라 구축과 같은 초기 단계의 대학원이 국가 지원 없이 연구중심 대학원을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였다.

00대, 00대 등을 제외하고 인프라 자체가 많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대학원 인프라부터 만드는 초기 단계에 있어 보이고요 그러고 나면 그때는 국가가 다 끌고 가는 상태가 아니라 대학 자체가 스스로 대학원 혁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지 않나 (A)

면담 참여자 E는 지원 금액이 작아 산학협력과 국제화에 이르는 사업을 모두 운영하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지원액의 차이가 성과의 차이로, 차년도 지원액의 차이로 악순환될 수 있다고 하였다.

OO 대학은 워낙 대학원생들이 많고 학교의 지원이 훌륭한데 사업비도 워낙 많이 받아요. 그런데, 저희처럼 사업비가 필요한 쪽은 교비가 그게 몇 배가 들어온다고 해서 결코 70억을 받는 학교랑 같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청서 쓰라고 할 때 동일하게 산학 협력부터 국제화까지 다 요구하시는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E)

이처럼 대학원혁신사업 성과보고서 및 면담 자료를 통해 연구중심대학 체제 전환의 양상을 살펴보면, 세 단계 그룹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 번째 그룹은 연구 환경 조성의 단계에 있는 대학원들로 대학원생의 모집, 기본적인 연구를 위한 공간과 시설의 조성,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테크니션 확보, 교과 비교과 프로그램 등 교육과정 체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랜 기간 학부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대학에서 연구 중심의 대학원 체제로 변환하기 위한 시작 단계 대학원

들로 나타난다. 이들 그룹은 대학원 입학생의 자대 비율과 중도 탈락 학생에 대한 관리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두 번째 그룹은 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 혁신, 대학원생의 학문적 융합, 협력을 위한 상호작용 촉진, 전반적인 대학원생 처우 개선, 우수한 학생 확보, 논문 성과와 경력 관리에 중점을 두는 단계로 나타난다. 전국 단위 다수의 대학들이 이 단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되며, 연구 성과를 높이는 것에 대한 관심, 대학원생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

세 번째 그룹은 해외 학술 네트워크 강화와 우수 교수진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한 촉촉한 연구 지도 및 협력 촉진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 그룹은 수도권 대규모 연구중심대학들에서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체제 전환의 단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분석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대학원 교육 내실화

가. 대학원생의 복지 향상과 경제적 지원 증대

대학원생 기본 복지 및 경제적 지원의 증대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대학원 만족도를 높이는 주요한 요소가 되고 우수 대학원생 확보를 위한 조건이 된다. 대규모 대학의 경우, BK 지원 학생 뿐만 아니라 그 외의 역량있는 학생에 대한 교비 지원을 확대하고 스타이펜드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대학원생의 학업 및 연구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번에 통으로 지원해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스타이펜드 제도가 연구처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기대하는 바로는 이공계에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인문사회계로 좀 이렇게 넓혀가서 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A)

E의 대학은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과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기 위해 혁신지원사업비 외 대학 내 투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저희가 위기를 넘겨가면서 스타이펜드 제도를 어느 정도 정착시킨 거예요.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고, 대학원에 온 이유가 학생이 선택해서 온 것 아닌가 그러면 그건 알아서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강했는데 사실 대학원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학생들의 생활비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해야 돼요. 저희 부서가 대학 내에서 별나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워낙 본부에 돈을 하도 달라 하니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죠. (E)

연구환경 개선 사업 중 하나로 대학원생의 연구행정업무 경감 노력이 나타난다. ‘행정 제로화’라는 슬로건으로 연구행정 인력 보충을 통해 지금까지 대학원생을 통해 이루어진 연구행정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면담 참여자 F는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 오던 일을 줄여주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행정제로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저희가 연구단장님들 협의회든 실무자들한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교수님들의 그냥 서브가 아니라 연구자로서 권익이나 이런 걸 보호해야 되고 행정 업무를 최대한 경감시키는 게 중요하다. (F)

나.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유연화

대학원혁신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지원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면서 대학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재구조화 양상이 나타난다.

대학원 교육과정의 혁신은 역량중심 교육과정, 비교과 교육과정과 공통교육과정의 체계화를 특징으로 한다. 각 대학들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규모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대학원생 필요 역량을 개발,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수강 이력 및 경력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여 제시하고 있었다. 유사 전공 또는 학과 간의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교육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통 교과를 통해 학생 간, 전공 간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교육의 재구조화는 대학 특성과 무관하게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저마다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논문작성법’, ‘학술지 선택법’, ‘논문 통계

방법 컨설팅’, ‘영어논문 작성법’과 같은 학술지 논문 관련 강좌에서부터 ‘이력서 쓰기’ 등의 진로, 취업 관련 강좌 등 매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학문 계열별, 전공별로 나타나는 논문 쓰는 방법의 차이 및 주요 진로, 취업 준비의 세부적인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나타난다.

논문이나 연구 방법 같이 연구와 관련된 비교과는 사실 저희가 무조건 계열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요구가 더 많을 때는 저희가 최대 5개 계열까지도 아예 분리를 했거든요. 이공계에서도 의대 자연대 다루듯이 저희가 그렇게 좀 논문 관련이나 연구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웬만하면 계열을 다 분리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또 공통 특강이나 창업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구분 없이 제공하고 있어요. (F)

실질적으로 연구중심대학에서 비교과 프로그램은 기초 학습, 또는 보충 학습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학생들이 전공 영역의 연구에서 채워지지 않은 다양한 학습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난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요즘에는 새로운 톨들이 많이 생겨나다 보니 개인적으로 돈을 내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간을 내가지고 배워야하는 톨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 학과나 연구실 안에서도 따로 알려주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파이썬이나 챗gpt라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이런 강좌를 통해서 하면 좋아하는 것 같아요. (C)

또한 ‘석사학위논문 대체 제도’, ‘도전학기제’, ‘집중이수제’, ‘창업현장실습 학점인정’, ‘창업 휴학’ 등 유연한 학사 운영의 흐름도 나타나고 있어 대학원에서도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전학기제를 만든다든지 집중이수제라든지, 교수님 이동에 따라 대학원생도 이동할 수 있도록 편입을 좀 더 더 유연하게 그런 식의 학사 제도 유연화하는 게 현안이라면 현안인 것 같아요. (D)

다. 교육의 질 관리

대학원 교육에 대한 질 관리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육과정의 최신화와 사회적 요구의 반영, 강의 평가와 공동논문지도교수제도를 통한 질 관리 제도가 나타난다. 각 대학들의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대규모 수도권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최신 학문 동향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전면 개편을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부 대학은 강제 일몰 대상 과목을 선정하여 일몰시키고 신규 개설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대학원생의 학업에 있어 시대에 따라 변하지 않는 수업 내용에 대한 불만(김승정, 2017)이 있었던 만큼 교육 내용의 질 관리에 있어 중대한 변화로 분석된다.

또한 학부에서는 의무적으로 실시되어 왔으나 대학원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강의 평가가 대학원 수준에서도 적용하는 대학들이 나타난다. 강의 평가 내용은 학과와 위원회에서 공유되고, 수업 개선에 반영되도록 한다.

중간평가 제도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끝나고 나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강의 평가를 한 번 하고 그 결과를 이제 학과에 다 공유 (D)

결과를 분석해서 그 질관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산정한다든지 그리고 대학원생이나 학생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전달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안에는 강의에 관련된 내용도 있고 교수에 관련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충분히 허용 가능하고 수용 가능한 것은 직접적으로 전달을 드리려고 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그렇게 되고 있고요. (F)

또한 공동지도교수제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논문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변화도 나타난다. 1인 지도교수 체제에서는 융합 연구, 간학문적 연구에 있어 충분한 논문 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공동지도교수제도는 논문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라. 상호작용과 협력 촉진을 위한 문화 조성

대학원 교육에 있어 지도교수 및 동료와의 상호작용과 협력적 문화는 대학원생의 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김승정, 2017; Livinti et al, 2021;

Shin et al, 2018). 지도교수와의 관계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효과적이고 밀접한 관계는 연구에 대한 효능감을 높이는데 기여한다(Murphy, 2009). 대학원생 발달에 있어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의 상호작용 및 협력적 문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통해 학문 사회의 규범을 내재화하고 독립된 연구자로서 성장하게 된다(Weidman et al, 2001). 이렇게 대학원 교육에서 중요하게 인식되는 지도교수 및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C의 대학은 지도교수 및 연구실 선택을 위한 ‘랩투어’, ‘랩로테이션’ 과정을 운영하고, 별도로 랩문화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연구실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물론 제도 도입 이후 실질적인 활용에는 학생 장학금 지급 문제, 학과나 전공의 무관심과 거부감 등으로 한계가 있으나, 추후 정착된다면, 연구실 내 자유롭고, 소통 가능한 문화를 만들고 학생과 지도교수의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분석된다. 또한 G의 대학은 지도교수 변경을 제도화하고 그에 대한 학생 자율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교수님하고 잘 안 맞다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이 학업에 중도 포기하기보다는 지도 교수님을 바꾸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학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학생들에게 좀 더 이제 자율권이 보장이 되는 거지요. (G)

연구실 학생들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이 연구실이 건강한 연구실인지 아닌지 점수 척도로 진단을 해서 우수한 상위 5개 연구실을 선정해서 현판식을 해드리고 좀 소소하나마 회식 정도라도 하시라고 상금을 좀 두는 걸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애로사항을 겪었던 것은 신청한 연구실들 중에서 잘한 쪽은 당연히 격려해 드리면 되는데 점수가 평균 이하인 곳을 찾아서 컨설팅을 해드렸더니 별로 썩 달가워하지 않으셔서 가지고 지금은 원하시는 연구실만 찾아가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걸로 바꾸었습니다. (C)

마. 교육과 연구의 결합

연구중심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연구는 통합의 과정으로 교수와 학생이 명확하지 않은 지식에 대한 공동의 탐구와 발견을 통해 교육과 연구가 결합되는 방식을 지향한다(Altbach, 2011). 대학원에서 강조되는 연구 활동을 대학원 및 학부의 교육

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가함에 따라, 연구와 교육의 결합은 연구중심대학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난다(Arimoto, 2014). 교수의 교육 활동이 연구를 정교화시키고, 연구에 대한 새로운 동기로 이어지기도 하며, 지식의 발견과 통합, 응용과 교육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순환 과정으로 연구중심대학 교수의 학술활동 특징으로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교육이 연구와 분리되어 ‘지식의 전달 교육’으로만 이루어질 경우, 교육과 연구의 분리, 이원화가 나타난다. 보통은 학부 교육에서 교육과 연구의 분리가 일어나며 도제식 지도가 이루어지는 석박사 과정에서 연구와 교육의 통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Clark, 1997). 그러나 랩의 규모가 커질수록, 교육과 연구의 효과적 결합이 어려워질 수 있어 교수와 학생 사이 신진연구인력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난다(정혜주, 2020). 따라서 연구중심대학이 발전할수록 신진연구인력의 규모가 커지고, 그 역할도 강조된다. 면담참여자 A는 여전히 신진연구인력이 전체 대학원 사회에서 매우 비중이 작고 적절한 대우 역시 부족하다고 말한다.

학부 석사 박사 포닥 없고 교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스탠포드나 이런 데를 보면 포닥들이 주로 핵심 싱크탱크같이 연구를 끌고 가는 주요 인력들인데 우리나라는 박사 이후 해외로 나가서 일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수 되고 이렇잖아요. 한국에서 다 키워서 해외 보내니 인력 낭비라고 해야 되나 저는 인력 유출 같기도 해요. 연구에서 중간 사다리가 없어지다 보니 포닥, 신진 연구자 단계가 우리나라의 부실한 부분인 것 같아요. (A)

바. 학생 중심 교육과 연구의 통합

대학원혁신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주목받는 것은 학생 중심 대학원 교육과 문화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연구중심대학에서 대학원생의 존재는 ‘연구인력’으로 간주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대학원혁신이 추구한 ‘학생중심’의 가치는 대학이 대학원생을 교육의 수요자로 각인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이 교육 전주기, 입학, 코스웍, 논문자격 획득, 논문작성과 졸업, 진로 선택이라는 대학원생 학문 발달 과정을 고려하도록 촉진하였다. 또한 대학원생 학생회 설립과 지원, 학생의 대학원혁신위원회 참여, 대학원생 만족도 조사, 참여 대학원생 면담 등의 방식을 통해 대학원혁신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이를 사업 아이টে으로 개발하는 등 대학원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대학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바탕업 수준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력 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더 가능한 편이고 논문이라든지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통계 특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계 관련 조교들을 많이 두고 1대 1로 컨설팅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해요. (D)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생 인권과 정신 건강 등 전반적인 삶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서 나타난다. 대학원생의 발달과 통합의 과정에는 안정적이고 심리적인 상태에서 수행되는 학습과 연구에 대한 몰입이 중요할 수 있다(조은원 외 2023; 김승정, 2017; 주현정 외, 2023). G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업 및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학원 혁신의 ‘행정제로화’, ‘학습 시간 보장’, ‘대학원생 휴가제도’ 등의 사업들은 학생들의 위라벨을 보장하고 학습과 연구, 연구행정 시간의 적절한 배분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높였으며, 학생과 교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교수들 역시 이 사업을 통해 등장한 ‘학생 연구에 대한 지원’, ‘학생 중심 진로 설계’, ‘학생의 학습권의 보장’이라는 아젠다를 통해 도제식 교육 훈련 방식에 내재되어 있던 ‘교수 중심’의 연구에서 ‘학생 중심’의 연구에 대한 시각이 추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C의 대학은 학생들에게 10일 이상의 휴가를 제도화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적절한 휴식과 학습 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있다.

최소한 10일 이상은 학생들한테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자고 저희가 아예 규정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것 시스템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휴가 올리는 것처럼 학생들도 교원이 승인하게 휴가를 올리고 승인을 해주면 휴가를 갈 수 있는 최소한 10일 이상은 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놔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이 휴가 기간을 이용해 경험했던 것을 사진이나 수기로 받고 예쁘게 사례집 같은 것을 웹에도 올리고, 이렇게 문화를 확산해 가고 있습니다. (C)

학생들이 적어도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는 집중 연구 시간이라 하고 이제 정하게 되면 그 시간에는 다른 어떤 가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시키지 않게 하고 오히려 개인의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좀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제도화시키고 있어요. (G)

또한 대학원생의 삶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사회적, 정서적 측면의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이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은 학부 졸업 직후 대학원에 진학하여 랩실을 중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사회적, 정서적 돌봄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사회 교류 활동이나 신체 활동, 테라리움, 명상과 같은 정서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심리 상담과 같은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원생들이 연구실에만 계속 있고 연구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장인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의 정서적이나 체력적인 건강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이나 이런 걸 좀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좀 느꼈습니다. 연구실에만 이제 매어 있다 보니 스스로 좌절하거나 아니면 연구와 학문적으로 알지만 그 밖에 사회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 소양들을 배울 기회가 없더라고요. 사람과 관계도 맺어야 될 거고 스스로 좌절했을 때 극복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테라리움 같은 그런 강좌를 열어줬을 때 더욱 더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게는 동아리 지원이 안 되냐고 계속 물어보시는 교수님도 계셨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도 올해 처음으로 대학원 동아리가 생겼거든요. 원래는 학부생 위주의 동아리였는데 저도 맞는 말 같더라고요. (C)

3. 연구중심대학 체제 혁신과 발전 과제

가. BK21 대학원혁신사업의 과제

대학원혁신사업의 담당자들이 인식하는 사업 운영의 한계는 평가에 대한 피로도 누적, 평가 영역의 다중성과 획일성, 대학원생 간 지원 격차 등으로 나타난다.

1) 사업 평가 피로도의 해소

면담 참여자들은 매년 이루어지는 계획서 평가와 연차평가의 보고서 작성 작업에 대한 높은 피로도를 호소하였다. 연차평가가 2차에 걸쳐 이루어지는 등 계획서 및 보고서 업무가 상당히 비중으로 나타나며, 1차년도 선정평가에서 제시한 장기적인 비전

과 대학원 혁신 계획을 토대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매년 이루어지는 계획서 평가의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평가의 피로도를 줄이고 대학원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이 요구된다.

너무 중복된 평가를 계속한다 이렇게까지 같은 내용을 계속 할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매년 평가는 지속되는데 거기서 크게 1년 후의 계획을 다음 학기 그 다음 학기에 엄청 바꾸는 것도 약간 이상한 거고 같은 내용 지금 계속 숫자만 업데이트하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한 건 우리가 처음에 최초 신청서를 쓸 때 나름대로 연구를 열심히 해서 장기간의 계획서를 냈는데, 이렇게 하겠다라고 만들었는데 1년 뒤에 다시 업데이트 하라고 이게 무슨 낭비인지 (A)

2) 대학발전계획과 사업의 정합성 제고

평가 영역이 교수 지원, 연구 지원, 대학원생 교육, 산학협력, 경력개발과 취창업 등 상당히 광범위한 영역을 다룸에 따라 대학들은 오히려 ‘점수 잘 받는 대학을 따라가는’ 상황으로 각 대학의 강점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는 실무자에게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전환이라는 목표에 대한 모호성을 높이고, 실제 이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확신을 낮출 수 있다. 따라서 대학 전체 발전계획과의 정합성이 중요하게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다수의 면담 참여자들은 명확하고 디테일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원 혁신 사업을 한다면 중장기 발전 계획에 최소 그런 문구라도 하나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대학원 중심 대학이나, 교육 중심 대학이나, 정체성부터 먼저 인지하게 하고 그 방향성대로 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것도 없어. (B)

연구중심대학이라고 얘기하고서 연구에 대한 거는 일부분이고 되게 막 모든 것을 다 다루니까. (제도 발전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D)

연구 중심으로 가는 방향성은 뭐고 그 연구 중심으로 가기 위하고 도달했다라고 하는 그걸 판단하는 질적 지표는 뭘로 볼 것이며 이런 게 다 명확하지 않거든요. 기관에서든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더 명확한 가이드나 방향성 학교의 역할들을 주셔야 한다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F)

따라서 대학원 혁신이 사업을 위하여 존재하는 혁신이 아니라 대학 전체의 비전과 발전계획과 연결되어 정합성을 높임으로써 중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3) 대학원 혁신사업비 활용의 자율성 제고

대학원혁신사업이 대학원 전체의 혁신을 목표로 두고 있음에도 인건비 지원은 BK21 참여 학생에게만 지원 가능함에 따라 BK21 소속이 아닌 학생 처우에 대한 고민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BK21 참여 여부가 대학원생 개인의 역량과 무관하다는 인식 및 교육연구단 선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대학원 전체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일부 대학들은 교비를 활용하여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 하였으며, 거의 모든 대학들이 교육 및 선발 프로그램에는 대학원생 전체를 대상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면담 참여자들은 BK 참여와 장학 여부에 따른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걱정과 함께 본부 차원의 제도 개선을 위해 대학원혁신사업의 지원 대상을 모든 학과, 대학원생으로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학원생들 간에도 사실 편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공계열이나 이런 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연구단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의 참여도 할 수 있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 교육 연구단에 참여하고 안 하고를 학생들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H)

대학원생 전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더라는 게 사실 지금 대학원장님의 마인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대학원뿐만 아니라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이런 것도 다 대학원 중 하나라 대학원이 전체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BK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들도 챙겨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장학제도부터 아까 말씀하신 인문사회라든지 아니면 BK 아닌 학생들도 우리가 돈을 줄 수 없으니 대학에서 조금 해 주세요 하고 있어요. (F)

또한 재정 집행의 자율성이 대학이 추구하는 목표와 성과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자율적으로 재정이거나 이런 부분을 집행할 수 있게 해서 이게 교육 연구단으로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이런 대학생이나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범위 내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조금 자유롭게 아니면 그 집행 금액이 사업비의 몇 프로를 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으로라도 좀 정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면은 지금보다 좀 더 자율적으로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G)

따라서 대학마다 필요로 하는 혁신 영역과 지원 대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대학원 혁신사업비 활용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 형식으로 자율성을 높이는 것이 대학별 성과 제고에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나. 연구중심대학 발전을 위한 과제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의 특징들과 비교하였을 때, 앞으로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가 요구된다.

1) 교수 및 대학원생의 수월성 향상 전략 제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수월성 향상을 위해서는 뛰어난 학자와 대학원생을 유치하는 데 우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중심대학과 관련된 모든 문헌들은 탁월한 학자와 우수한 대학원생 확보가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대학들은 오래 동안 유지되어 왔던 대학 서열화 안에서 뛰어난 학생 및 교수 유치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 것처럼 보인다(김용, 2003). 또한 이미 급여가 높은 지식산업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지고 있으며, 해외 우수 대학으로도 인재가 유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대학원은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대학들은 석좌교수 프로그램, 특훈연구자 프로그램 등으로 우수 학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교수 승진 프로그램 역시 경쟁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Altbach & Salmi, 2012). 국내 대학들 중에도 일부 대학에서 석좌교수나 특훈연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교수승진제도에 있어서는 경쟁적 방식이 도입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이러한 승진 경쟁은 충분한 지원과 연구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김용(2003)은 학생 이동과 우수 교수 유치를 위한 대학 간 경쟁이 거의 없는 국내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에 있어 대학 내부의 역동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충분한 연구 지원을 전제로 발전적인 연구 경쟁을 통해 수월성을 향상시키고, 국제적으로는 해외 우수 학생과 연구자를 유치하고 연구 네트워크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영어 수업 확대 및 개방적 환경 조성이 중요할 것이다.

2) 학술 연구와 문화의 다양성 제고

대학원혁신사업에서 나타나는 산학 협력 및 창업에 대한 강조는 자칫 대학 연구에서 응용 연구, 대학-산업 연계,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득을 창출하는 연구에 대한 강조로 이어져 전통적인 학문적 목표와 이해 상충을 가져올 수 있다. 이익이 남는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고 ‘탐구의 즐거움’ 보다 경제적 이익에 경도될 수 있으며, 대학원생은 프로젝트에 매달림으로서 충분한 교육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Cole, 1994). 기업 연구, 연구의 상업화는 학문 탐구에 있어 부적절한 관계의 위험이 공존하여 연구를 기업에 종속시킬 가능성이 있다(Slaughter & Rhoades 2004). 또한 대학이 정부 및 산업계와 너무 밀착적인 관계를 형성할 경우, 연구의 자율성과 전반적인 연구 생태계의 균형 및 다양성을 잃을 수 있다. 산학 협력 및 창업은 연구중심대학의 고도화된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물이지만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사회적 수요가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학술 문화의 다양성, 기초학문분야와 응용연구 간의 적절한 균형의 측면에서 대학원혁신사업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3)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의 확보

연구중심대학의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정 지원에 있다. 우수 학자 및 학생 유치, 첨단 연구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대학등록금 동결에 의한 사립대학 재정의 악화, 국가 R&D 예산 감축 등의 이슈 등은 국내에서 과연 연구중심대학의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따라서 국내 연구중심대학 발전의 가장 큰 과제는 재정 확보에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의 연구중심대학이 대부분 국공립 대학에서 나타나며, 미국과 같이 사립대학이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한 경우는 카네기재단, 록펠로우 재단과

같은 민간 기금이 ‘더 높은 정상을 향한’ 대규모 대학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Clark, 1995). 따라서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대학들은 기부, 컨설팅 제공, 기술이전, 학생 등록금, 수수료, 민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적 역량 및 리더십이 필요할 것이다.

4) 대학 환경과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구상

대학원 혁신에 있어 대학별 특성을 토대로 한 다양한 연구중심대학 모델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원생 수, 교수의 수, 연구성과, 연구비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된 바 있다(Shin, 2009; 이영학, 2012). 이에 더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원 혁신 과정에서 대학별 관심사와 처한 환경이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연구중심대학 체제 전환의 요구가 학생 모집 및 기초 연구환경 조성부터 세계 수준의 연구자 초빙과 지원까지 폭넓게 나타남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한 정확한 분석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원혁신사업 모델은 대학원 특성에 따라 종합연구중심대학 모델, 현장연구중심대학 모델로 구분해볼 수 있다. 종합연구중심대학 모델은 글로벌 학술네트워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수 학자 및 대학원생을 유치함으로써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을 목표로 하는 대학으로 전국단위 대규모 대학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충분한 신진연구인력 충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의 효과적인 결합 및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조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장연구중심대학 모델은 한정된 분야에 특화된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모델로 국립해양대 대학원과 같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대학원은 특수 분야에서 교육보다는 연구에 초점을 두고, 소규모라는 강점을 이용하여 연구소와 같은 개념으로 운영함으로써 차별화된 R&D 현장 중심 교육, 산업과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고급 인재 양성을 기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동일 잣대가 아닌 서로 다른 비전 및 목표 설정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처럼 한국형 연구중심대학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학이 처한 환경과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대학원혁신사업을 통해 대학원의 특성과 환경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육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체제와 대학원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원의 혁신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발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BK21사업에 새로이 도입된 대학원혁신사업의 방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향후 대학원 교육의 변화를 추적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주요 혁신 방향 및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 중심의 대학 거버넌스에서 대학원의 위상이 높아졌다. 대학원장이 부총장급으로 상향되면서 학내 의사결정에 있어 대학원 교육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원에 대한 행정적, 교육적 고려가 나타났으며, 대학교육의 수요자로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대학원생이 학술 커뮤니티의 주요 이해관계자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학부가 대학의 중심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거버넌스 변화는 연구중심대학 체제 이행의 핵심 단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대학의 비전 및 발전 계획과 유리될 경우에는 사업운동을 위한 단기적 처방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원 혁신 체제를 대학의 중장기 발전 방안과 연결하여 정합성을 높이는 것이 연구중심대학의 자생적 성장을 위하여 중요할 것이다.

둘째, 대학원에서 학술 연구를 위한 교육과정이 체계화되고 학문적 발달 단계를 고려한 큰 틀의 지원체계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종전까지 대학원 교육은 랩과 지도교수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학원생의 교육 경험이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대학원혁신사업을 통해 대학원생 교육을 비교과와 교과로 구분하고, 공통교육과정을 체계화함으로써 대학원생의 공통의 교육경험을 정의하고, 지원하기 시작하였다는 측면에

서 유의미한 변화로 분석된다. 또한 입학에서 졸업, 그리고 졸업 이후 신진연구자까지 아우르는 성장 단계를 고려한 교육, 진로, 취창업 지원 등의 변화는 대학원 교육의 내실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대학원 교육은 학문 분야와 전공 및 세부 연구분야에 따른 학술 문화가 매우 달라 교육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 다양성이 크게 나타난다(Becher & Trowler, 2001). 따라서 연구분야가 가지는 독특한 학술 문화에 대한 고려가 없이는 형식적인 교육 이상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술문화와 학문공동체에 기반하여 교육과정을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대학원혁신사업으로 대학원생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BK21 미지원 학생에게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남에 따라 대학원생의 처우가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BK21은 대학원생의 연구 활동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대학원의 정체성을 연구기관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난다. 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하고, 연구 역량을 개발할 수 있었다(김보라 외, 2020; 김명진, 배관표, 2023; 선미라, 염경준, 2024; 주현정 외, 2023). 더불어 대학원혁신사업은 대학원생의 인권과 생활보장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연구 행정 부담 경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과 휴가 보장을 통한 여가의 질 향상, 연구실 문화 개선 등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원생의 중도탈락을 줄이고 연구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및 통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추후 이러한 변화가 일부 대학에서 전체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제화에 대한 강조는 대학원생의 해외 학술 교류를 증가시키고, 연구실 간의 교류 활성화로 이어짐에 따라 학술 연구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대학의 혁신비 지원 규모와 교육연구단 여부에 따라 지원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므로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 및 대학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학원혁신사업은 대학별 특징과 처한 환경이 다름에 따라 혁신의 양상과 단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학원 발전을 위해서는 단계에 따른 지원 전략과 방향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본고에서는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발전 단계와 특징을 유형화하고, 그에 기반한 지원 전략의 수립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첨단기술의 변화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의 연구중심대

학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전략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추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토대로 대학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강점 연구 분야와 환경, 대학 입학 및 졸업자 특성 등을 토대로 육성 전략을 다양화하고,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대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24). 4단계 두뇌한국21 사업 수정 기본 계획(안)
- 권기석. (2011).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포지션
페이퍼 147호
- 김명진, 배관표. (2023). 과학자 전문성 발달과정과 지원정책의 영향: BK21사업을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7(2), 117-144.
- 김보라, 김유진, 정예슬, 정소희, 김학래, 정경미. (2020). BK21 플러스 사업참여가 대학원생
역량과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단일 사회과학 사업단의 경험적 자료 분석. 한국산학
기술학회 논문지, 21(1), 45-60.
- 김성진, 이필남, 장덕호. (2014).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 사업의 성과 분석: BK21 사업과의
비교. 교육재정경제연구, 23(3), 61-88.
- 김수진 (2024).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지원 사업 평가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승정. (2017). 인문사회과학 전공 박사과정생의 학문적 정체성 발달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
학연구, 35(4), 317-345.
- 김승정. (2019). 대학원생과 지도교수의 상호작용과 지도 유형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7(3), 59-82.
- 김승정. (2021). 국내 대학원 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9(3), 219-241.
- 김용. (2003). 연구중심대학: 형성과정과 조직 운영상 특징. 교육정치학연구, 9•10, 51-75
- 김진영. (2015). BK21 사업 참여가 교수연구 성과에 미친 영향: 학문분야 별 차이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8(1), 1-32.
- 김훈호, 신철균, 오상은, 최혜림. (2011). 대학발전계획에 나타난 비전과 발전목표의 동형화
현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2(4), 357-393
- 박종렬. (2007). 대학발전계획, 어떻게 수립하여야 하는가. 대학교육, 145호.
- 박혜연. (2023). 대학원혁신 정책집행과 제도적 변화 분석: 현장 정책행위자와 제도 논리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4(1), 109-146.
- 선미라, 염경준. (2024). 학습공동체에서 대학원생의 사회적 지식구성에 관한 경험 이해:
BK21 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22(1), 301-323.
- 신정철, 정지선, 김명진, 박환보 옮김. (2007).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서울:
교육과학사
- 신정철. (2008). 세계수준 연구중심대학을 향한 도전, 대학교육 152, 100-103

- 오현석, 최지영, 최윤미 권귀현. (2007). 과학인재의 성장 및 전문성 발달과정에서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교육학회지*, 27(9), 907-918.
- 이덕로, 김소영, 차성현. (2009). 2단계 BK21 사업단의 상대적 효율성 평가와 투입 산출요소별 영향력 분석. *교육학연구*, 47(2), 105-134.
- 이병식. (2002). 연구중심대학체제의 특징과 국내 대학의 과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책자문자료집*
- 이석열, 이영학, 정진철. (2019). 대학원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현황 분석 및 기초연구. *교육부*
- 이영철. (2022). 인구감소 시대의 지방연구중심대학 만들기. *월간 공공정책*, 202, 21-23.
- 이영학. (2012). 한국의 연구중심대학 분류 방안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19(2), 49-71.
- 임희진. (2023). 이공계 외국인 대학원생의 연구효능감 영향 요인과 특성에 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41(5), 51-84.
- 전승준. (2011). 연구중심대학의 발전 과정과 육성 방향. *과학기술정책*, (183), 27-41.
- 정우진, 김경연, 이영미, 조보경. (2008). 제2단계 BK21사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인문·사회계열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4(2), 155-179.
- 정혜주. (2020). 이공계 박사학위 취득자의 직업정체성 형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조은원, 배상훈, 김경연, 한송이. (2023). 이공계 대학원 인재상과 교육혁신 방향에 대한 대학 구성원의 인식과 시사점: A연구중심대학 사례. *공학교육연구*, 26(3), 60-71.
- 주현정, 홍승현 정유선. (2023). BK21사업 참여를 통한 대학원생의 플로리싱(Flourishing) 경험에 대한 탐구: 셀리그만의 펄마(PERMA) 이론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20), 867-883.
- 하연섭. (2011). 제도분석: 이론과 쟁점. 서울: 다산출판사
- 허정, 박성민. (2021). 고등교육정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자료포락분석 (DEA) 기법을 활용한 BK21 플러스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34(3), 27-52.
- 한국연구재단. (2023). 4단계 BK21 사업 대학원 혁신 소개집. 한국연구재단
- Adler, P. A., & Adler, P. (2005). The identity career of the graduate student: Professional socialization to academic sociology. *The American Sociologist*, 36(2), 11-27.
- Altbach, P. G. (2011).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research university. *Economic and Political weekly*, 65-73.
- Altbach, P. G., & Salmi, J. (2012). *학문적 수월성으로 가는 길: 세계적 연구중심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
- Arimoto, A. (2013). Balancing the scholarship of teaching and research, and faculty evaluation systems. In *The Future of the Post-Massified University at the Crossroads: Restructuring Systems and Functions* (pp. 167-182).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 Baker, V. L., & Pifer, M. J., & Flemion, B. (2013). Process challenges and learn-

- ing-based interactions in stage 2 of doctoral education: Implications from two applied social science field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84(4), 449-4
- Baker, V. L., & Pifer, M. J. (2014). Preparing for Practice: Parallel processes of identity development in stage 3 of doctoral edu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Doctoral Studies*, 9, 137-15
- Barringer, S. N., & Pryor, K. N. (2022). Understanding academic structure: variation, stability, and change at the center of the modern research university.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45(3), 365-408.
- Becher, T., & Trowler, P. R. (2001). *Academic tribes and territories: Intellectual inquiry and the culture of discipline*. The society for research into higher education & Open University Press, Milton Keynes UK.
- Cai, Y., & Mountford, N. (2022). Institutional logics analysis in higher education research. *Studies in Higher Education*, 47(8), 1627-1651.
- Clark, B. R. (1997). The modern integration of research activities with teaching and learning.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8(3), 241-255.
- Clark, W. (2019). *Academic charisma and the origins of the research univers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le, J. R. (1993). Balancing acts: Dilemmas of choice facing research universities. *Daedalus*, 122(4), 1-36.
- Gardner, S. K. (2008). "What's too much and what's too little?": The process of becoming an independent researcher in doctoral educatio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3),
- Gardner, S. K. (2009). Student and faculty attributions of attrition in high and low-completing doctoral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Higher Education*, 58, 97-112.
- Golde, C. M., & Dore, T. M. (2001). *At cross purposes: What the experiences of today's doctoral students reveal about doctoral education*.
- Lim, H., Kim, S. J., & Shin, J. C. (2020). Rapid development and current rethinking in doctoral education in South Korea. In *Trends and Issue in Doctoral Education: A Global Perspective* (pp. 363-386). Sage Publications Pvt Ltd.
- Livinti, R., Gunnesch-Luca, G., & Iliescu, D. (2021). Research self-efficacy: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ist*, 56(3), 215-242.
- Lovitts, B. E. (2008). The transition to independent research: Who makes it, who doesn't, and why.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79(3), 296-325
- Murphy, N. (2009). Research supervision: Matches and mismatches.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Education*, 46(3), 295-306

- Postiglione, G. A. (2013). Anchoring globalization in Hong Kong's research universities: Network agents,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brain circulation.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8(3), 345-366.
- Salmi, J. (2009). *The challenge of establishing world-class universities*. World Bank Publications
- Salmi, J. (2011). Nine Common Errors in Building a New World-Class University.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62, 5-7.
- Slaughter, S., & Rhoades, G. (2004). *Academic capitalism and the new economy: Markets, state, and higher education*. Jhu press.
- Smith McGloin, R., & Wynne, C. (2015). *Structural changes in doctoral education in the UK: A review of graduate schools and the development of doctoral colleges*. UK Concil for graduate education.
- Shin, J. C. (2009). Classifying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in Korea: A performance-based approach. *Higher Education*, 57, 247-266.
- Shin, J. C. (2011). Teaching and research nexuses across faculty career stage, ability and affiliated discipline in a South Korean research university. *Studies in Higher Education*, 36(4), 485-503.
- Shin, J. C., Kim, S. J., Kim, E., & Lim, H. (2018). Doctoral students' satisfaction in a research-focused Korean university: socio-environmental and motivational factors.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19, 159-168.
- Teichler, U. (2014). Doctoral education and training: A view across countries and disciplines: In: Maria de Ibarrola und Lorin W. Anderson(eds.): *The nurturing of new educational researchers. Dialogues and debates*. Rotterdam, Boston, Taipei: Sense Publishers 2014, 1-25
- Weidman, J. C., Twale, D. J., & Stein, E. L. (2001). *Socialization of Graduate and Professional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A Perilous Passage?* ASHE-ERIC Higher Education Report, Volume 28, Number 3. Jossey-Bass Higher and Adult Education Series. Jossey-Bass, Publishers, Inc., 350 Sansome Street, San Francisco, CA 94104-1342.
- Wright, A., Murray, J. P., & Geale, P. (2007). A Phenomenographic study of what it means to supervise doctoral student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and Education*, 6(4), 458-474.

RM 2024-32-1115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2025년 1월 20일 발행

발 행 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
대성 디폴리스A동 23층
<http://www.kcue.or.kr>
Tel 02-6919-3800

인 쇄 처 경성문화사 02-786-2999

(C) 한국대학교육협의회<비매품>

※ 이 책자의 일부 혹은 전체를 허락없이 변경하거나 복제할 수 없습니다.

ISBN: 979-11-6696-463-3 93370

2024 고등교육 현안분석 자료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6(가산동, 대성디폴리스 A동 22~23층)

TEL 02-6919-3800 **HOMEPAGE** <http://www.kcue.or.kr>

비매품/무료

93370



9 791166 964633

ISBN 979-11-6696-463-3